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2014. 12



##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2.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강 현 수





#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	1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3
2. 계획의 범위 .....	5
3.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	7
4. 계획수립과정 .....	8
제2장. 지역현황 및 인권여건 분석 .....	25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	27
2. 관련 선언·계획 검토 .....	54
3. 국내·외 사례 검토 .....	63
4.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69
5. 지역 인권여건 분석 .....	73
제3장. 기본구상 .....	75
1. 계획의 비전·추진전략 .....	77
제4장. 부문별 계획 .....	79
1. 아동·청소년 .....	81
2. 장애인 .....	109
3. 노인 .....	131
4. 여성 .....	149
5. 이주민 .....	163
6. 농업인 .....	193
7. 어업인 .....	210

제5장. 인권제도 정비 .....	217
1. 인권전담조직의 운영(안) .....	219
2. (가칭)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	227
제6장.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	231
1. 인권 교육의 의의 .....	233
2. 타 시도의 인권교육 추진현황 .....	236
3. 충청남도 인권교육 계획 .....	243
제7장. 인권 협력체계 구축 .....	251
1. 인권 협력체계 구축 .....	253
제8장. 충청남도 인권사각지대 .....	261
1.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	263
2. 태안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	279
3. 비정규직 산재 .....	292
제9장. 집행 및 관리 .....	299
1. 사업계획 .....	301
2. 투자계획 .....	302
3.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과제 .....	314

## 표 목 차

〈표 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	28
〈표 2〉 충청남도 연도별 세대 및 인구 .....	29
〈표 3〉 충청남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 .....	29
〈표 4〉 충청남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망(2008~2012) .....	30
〈표 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현황(2008~2012) .....	30
〈표 6〉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현황(2014) .....	31
〈표 7〉 충청남도 여성인구 전망 .....	31
〈표 8〉 충청남도 여성가구주 전망 .....	32
〈표 9〉 충청남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 .....	32
〈표 10〉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	33
〈표 11〉 충청남도 직업별 취업자 현황 .....	33
〈표 12〉 충청남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6~2011) .....	34
〈표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2006~2011) .....	34
〈표 14〉 충청남도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	35
〈표 15〉 충청남도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2007~2010) .....	35
〈표 16〉 충청남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	36
〈표 17〉 충남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2008~2013) .....	36
〈표 18〉 충남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2013) .....	37
〈표 19〉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현황 .....	37
〈표 20〉 충청남도 장애인 성별 등록현황(2008~2012년) .....	38
〈표 21〉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11) .....	39
〈표 22〉 충청남도 노인여가시설 현황(2011) .....	40
〈표 23〉 충청남도 여성복지시설 현황(2011) .....	41
〈표 24〉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1) .....	41
〈표 25〉 충청남도 보육시설 현황(2011) .....	42
〈표 26〉 충청남도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2011) .....	43
〈표 27〉 충청남도 문화공간 현황(2011) .....	44
〈표 28〉 충청남도 공공의료기관 현황(2011) .....	45
〈표 29〉 전국·충청남도 비정규직 연도별 현황(2007~2013) .....	46
〈표 30〉 충청남도 노사분규 발생현황(2006~2012) .....	46
〈표 31〉 충청남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현황(2005, 2010) .....	47
〈표 32〉 충청남도 다문화가구 점유형태별 현황(2010) .....	47
〈표 33〉 충청남도 학교 총 현황(2012) .....	48
〈표 34〉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관 연도별 현황(2009~2012) .....	49

〈표 35〉 충청남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2009~2012) .....	50
〈표 36〉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시·도) .....	50
〈표 37〉 충청남도 시·군별 주관적 자살원인(2012) .....	51
〈표 38〉 충청남도 범죄발생 현황(2012) .....	52
〈표 39〉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현황(시·도) .....	52
〈표 40〉 충청남도 화재발생 현황 .....	53
〈표 41〉 충청남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	53
〈표 42〉 국내 인권도시 현황 .....	64
〈표 4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174
〈표 44〉 송전설비 보상 .....	269
〈표 45〉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	273
〈표 46〉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	274
〈표 47〉 유류피해 제한채권신고 현황 (2009.05.08) .....	281
〈표 48〉 읍면 배정내역 (2008.01.27) .....	283
〈표 49〉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	288
〈표 50〉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 산업재해 .....	296

## 그림 목 차

〈그림 1〉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	7
〈그림 2〉 인권 협력체계 구축 체계도 .....	257
〈그림 3〉 송전설비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 .....	268
〈그림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지점 .....	279
〈그림 5〉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노동 .....	292
〈그림 6〉 사내하청 노동의 두 가지 특성 .....	293
〈그림 7〉 사내하청의 확장된 형태 .....	294



# 제1장

##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2. 계획의 범위

---

3.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

4. 계획수립과정

---





#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가. 계획수립의 배경

### ■ 역사적으로 이어진 충남 인권의식의 종합적인 현재 실현화<sup>1)</sup>

- 충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차별·수탈에 대한 높은 저항의식을 보유
  - 고려 명종6년(1176년)에는 향·소·부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적 대우에 대해 명학소민의 봉기가 있었음
  - 임진왜란 전쟁기에 곤궁한 백성들에 대한 국가의 수탈에 대항한 송유진의 봉기(1594년), 이몽학의 봉기(1594년)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응한 역사적 사건이었음
  - 조선 후기 세도정치하의 삼정문란에 따른 농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관리·토호 사대부·부농들에 의한 수탈 등에 대응하여 은진·공주·임천·연산 등지에서 농민들의 항쟁(1862년)이 전개되었음
  - 신분제 타파, 농민적 토지소유 등 반봉건을 기치로 봉기한 동학항쟁 시기(1894년) 예산·태안·당진·천안·홍성·서산·금산·공주 등지의 농민군은 인간평등의 인권가치를 수호하였음
- 충남은 인권평등의 종교적 가치가 전파된 지역임
  - 19세기 초·중엽의 충남지역 내포지역은 신유박해(1801년), 청양덕산 박해(1813년), 덕산 배나드리 박해(1817년), 병인박해(1866년) 등을 통해 인간평등의 정신이 고양되었음
- 민주 가치를 위한 역사적 자취를 지님
  - 3·8 학생 민주화운동(1960년), 4·19혁명(1960년), 유신체제하 노동운동, 6월 민주화항쟁(1987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여줌

### ■ 「충청남도도민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2012년 5월 10일 공포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충남의 인권계획을 수립
-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충청남도지』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12~2016)」의 지역적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NAP의 목표·주요과제를 지역인권정책에 반영함
  - 제2기 인권NAP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 ■ 민선6기 도정이념의 반영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도정의 민주적, 인권적 가치 구현
  - 더불어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고, 민주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지역인권의 증진을 모색

### 나. 계획수립의 목적

#### ■ 「인권 행복충만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

- 인권취약계층의 기본권·생활권·평등권을 보장하여 지역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

#### ■ 충남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

-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역의 보편가치를 재발견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투영함

#### ■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시군에게 인권감수성 향상방안을 제시

- 도시·농촌주민의 인권특성을 파악하여, 시군별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

## 2. 계획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5~2019년(5년간)
- 기준년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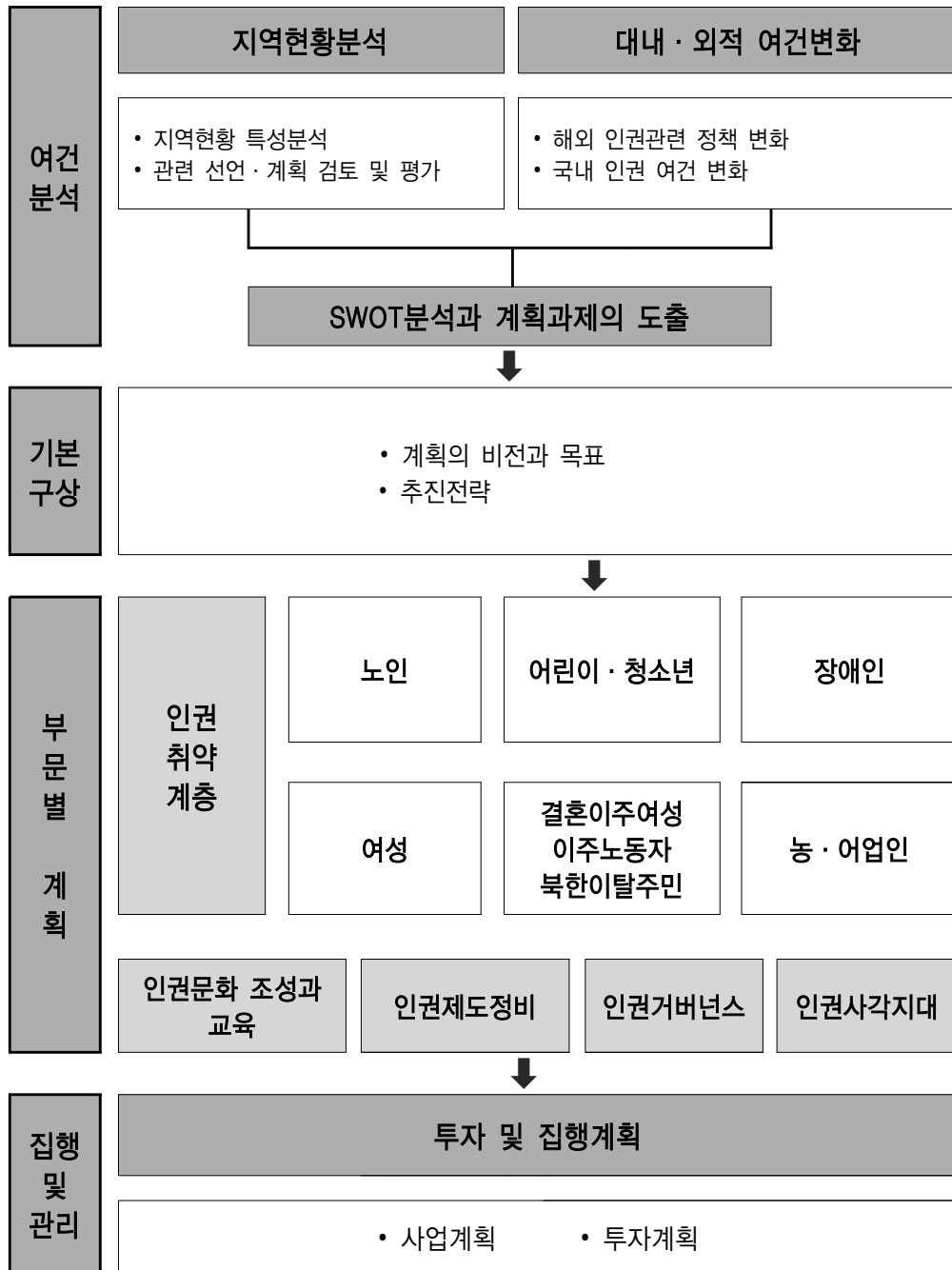
###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계룡(8개 시)
  - －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7개 군)

### ■ 내용적 범위

-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국내·외 인권행정 추진 사례조사(문헌조사 실시)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인권 행복충만 충남」 달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향 도출
- 기본계획 원칙으로 한 「인권 행복충만 충남 기본계획」 수립
- 충남지역 특수성과 농촌(농어업인의 인권포함)과 도시를 구분하여 실행력 담보한 세부추진 실천계획
- 도는 시·군을 견인할 입장으로 도답게 시·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

## ■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 ■



### 3.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 가. 계획수립의 방법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분야별 인권취약층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적·참여적인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시책구상을 중시함
- 계획수립 참여주체
  - 도와 도청 공무원, 도민,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2015-2019)」수립 연구자문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적(bottom-up) 과정을 통한 계획수립

〈그림 1〉 계획수립 참여주체와 역할



#### 나. 계획수립체계

- 충청남도청
  - 계획수립 주관,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T/F 운영
-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단
  - 충남발전연구원
  - 6개 분야(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농·어·민) 원외연구진

- 자문단
  - 구성 : 6개 분야 9명,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 운영 : 연구자문단 회의 및 분야별 토론회 참석하여 아이디어 제시

## 4. 계획수립과정

### 가. 조례제정 및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5.10)』를 제정
-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됨

### 나.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협의

-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협의
- 『충남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 용역』 실시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분야 설정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용역 계약(2013.11.19~2014.11.18)

### 다. 착수보고회 개최

- 인권증진위원을 중심으로 본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논의(2013.11.25)
- 기본계획의 연구범위, 분야별 구성, 계획수립 절차 등을 설정

#### 〈착수보고회 토론내용 및 조치사항〉

항목	제안 사항(자문위원)	조치사항
충남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 어촌시책 필요(유류피해 지역 주민)(최경선)	□ 인권사각지대 과제로 총발연 전략 과제의 부문으로 연구
	■ 都/農 구분→도농복합형/농어촌형 구분 가능?(우주형) -농촌형/어촌형 유형으로 구분 검토 필요	□ 농·어민 인권을 별도로 연구 □ 6개 분야에 해당내용을 사업으로 반영(특히, 이주민인권)
	■ 도차원에서 농민·어민에 대한 인권정책 필요(이상재)	□ 농민·어업인 인권을 연구
	■ 발전소/유류피해로 인한 어민인권 포함 (김지훈) -지역 남북간/저소득층에 대한 형평 고려	□ 인권사각지대(유류피해, 발전소, 노동) 연구 □ 지역남북간 요구사항은 추후 공청

항목		제안 사항(자문위원)	조치사항
		-동학, 3·1운동 등 역사적 타당성을 확보	회(2회)를 통해 수렴 예정 -저소득층은 분야별 계획에서 고려됨 -계획 배경, 대내적 여건변화에 반영
		■충남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유효영) -농·어·민·인·권이 있으면 타 직종의 인권도 고려? - ‘노동’ 관련 인권도 검토 요망 -사회·교육·문화를 만드는 운동도 포함	□지역특수성은 농·어·민·인·권, 인권사 각지대를 통해 반영 -노동·일자리·교육 등은 각 부문별로 반영됨 -교육은 ‘인권교육’, 인권센터 관련사항에 반영
		■송전탑 피해, 유류 피해, 화력발전소 피해, 노동 문제(비정규직), 낮은 상수도보급률 등 충남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강현수)	□인권사각지대로 구분하여 연구
복지 등 충남의 다른 계획과의 차별성		■기존 각 부문별 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예, 송전탑 문제)(김갑연)	□부문별로 기존 계획을 검토
		■충남 각 실국사업6개 분야를 통합적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예, 농촌아동을 위한 도시락 제공)(최경선) -사각지대도 별도 파트로 구분 검토	□범분야별 대책을 요하는 사업·시책 구상시 검토 - 사각지대는 별로 연구
인권계획 수립 원칙 및 방법		■주민참여·주민주도형 계획수립 요망(김영환, 우주형, 이상재) -필요시 의회설명회·간담회 개최 -실태조사시 인권교육도 병행 필요	□분야별 외부연구진/자문위원 참여로 분야별 전문성 확보 □분야별 토론회시 인권감수성 교육 병행
		■인권의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교육문제에 주목(김영환)	□인권교육분야를 별도 분야로 연구
		■기존 부문계획을 인권적 관점에서의 재조명(강현수) -충남의 사회적 문제도 규명(우주형)	□분야별로 상위계획, 타 시도계획, 충남의 관련계획, 기존연구 등을 검토
부 문 별 제 안	여 성	■가정·성폭력, 일자리, 신체적 자유권 문제에 주목(엄소일)	□분야별로 실태조사시 반영 □사업·시책구상에 반영
	이 주 민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정보제공에 주안점(우상영) ■차별개선을 위해 한국인에 대한 교육에 중점(우상영)	
	장 애 인	■국가는 탈시설 정책이지만, 충남은 시설 확대 정책을 시행→상반된 정책의 접점을 찾아야 함	
인권계획 및 실태조사 워크숍		■인권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주제: 인권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 -주제발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일시: 2013년 12월 중순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참석대상: 인권위원, 연구진, 비상임연구원 등	□ 실시(13.12.16)



## 라. 인권계획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인권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법」을 주제로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인권증진위원, 연구진과의 토론회 개최(2013.12.16)
- 인권의 범위, 인권계획수립의 검토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에 대한 토론 실시

### 〈인권계획 워크숍 토론내용 및 조치사항〉

부문	세부의견	조치사항
연구여건 관련 연구연구 의 범위	-연구기간·연구비 등 고려時, 실태조사 가능?(김지훈)	-분야별 외부연구진/자문위원 21회 협의회 개최
	-용역비 범위내에서 인권실태조사 가능?(이상영)	-분야별 13회 토론회 개최
	-가용자원을 고려,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 고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려고 하지 말라”(김형완)	-도청 인권T/F 워크숍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
	-연구일정, 연구여건 고려 road map 작성(강현수)	-주무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진행
	-실태조사기획을 위한 별도 기구 마련(강현수)	-분야별로 원내·외 연구진, 자문위원을 구성
	-공청회를 많이 실시(이상재)	-충남을 도시형(아산), 농촌형(홍성)으로 구분하여 2회 실시
연구·조사 사방향	- “인권주체의 자력화”, “인권주체의 empowerment”가 요구됨(김영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가해자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김영환) -조사대상에 ‘잠재적 가해자’, ‘이해관계자’도 고려(김영환)	-실태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연구진, 자문위원(인권위원)의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음 -부문별 인권위원 포함 조사연구, 자문위원 활용



부문	세부의건	조치사항
	-거버넌스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김영환) -송전탑/화력발전소 관련 이미 raw data가 구축된 부분을 연구하거나, 혹은 전혀 raw data가 없는 부분을 분리하여 조사 필요(김영환) -진술자들의 사례가 중요(김형완) -이번 조사는 1차년도로 105인을 부문별, 책무자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 실시(김형완)	-송전탑/화력발전소 등은 既 총발연의 연구결과, 외부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활용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사례를 확보 -실태조사시기와 105인 구성시기를 고려하여, 105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함. 심층면접을 실시함
	-당사자집단, 기관, 당사자로 인권범위를 축소하여,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진경아)	-21회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별 인권항목, 인권과제를 발굴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하여 인권범위 설정(이상재)	-토론회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분야별 인권쟁점, 추진과제를 검토
	-분야별로 워크숍 구상 필요(이상재)	-분야별로 13회 인권토론회 실시
	-이행 당사자가 참여한 교육을 병행(진경아) -분야별 인터뷰 대상 선정時, 자문 필요(진경아)	-인권토론회시 인권감수성교육 실시 -협의회, 토론회 구상시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반영
	-실태조사 방식과 내용, 교육병행, 가해자와 피해자 병행 조사, 조사초기부터 전문가와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김지훈)	-협의회, 토론회를 통해 반영
	-책무자, 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상재)	-토론회시 인권감수성 교육 병행 실시
	-105인 대상 조사는 너무 적음(김지훈)	-6개 분야의 당사자 중심 조사 실시
	-부문별 道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조사, 교육 병행(이상재)	-토론회에 반영
	-‘인권교육’이 모호함(이상재) -실태조사후, 의제 설정時, 토론 필요(이상재)	-분야별로 해당 인권감수성교육을 실시 -21회 협의회를 통해 도출 후, 실태조사 실시
향후 연구내용	-인권개선주체를 발굴하여,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이진숙)	-실태조사단계에서 반영
	-충남 인권사각지대 연구방향?(진경아)	-태안유류유출사고 : 피해민 인권 중심 -화력발전소 : 피해 및 결정·추진과정의 문제 -비정규 노동 : 산재 및 비정규직 중심



## 마. 사회적 약자 인권향목 및 과제 도출

- 사회적 약자별 실태조사를 위해 6개 취약층별로 인권향목 및 과제를 도출
- 취약층별 인권 전문가, 관계자와 21회 협의회를 개최



## 바. 인권분야별 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 수렴

- 도시 결혼이주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8)



- 도시 이주노동자(인도네시아인·필리핀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9)



- 아동·청소년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14)



- 농촌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16)





- 도시 이주노동자(베트남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 (2014.2.23)



-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 (2014.2.23)



- 농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 (2014.2.25)



- 장애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26)



- 노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2.27)



- 어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3.6)





- 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3.10)



- 북한이탈주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개최(2014.6.3)



## 사. 인권제도, 인권거버넌스, 인권문화 부문 토론회

- 해당 관련 인권전문가 토론(2014.7.30)



## 바. 중간보고회

- 제1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토론회(2014.4.21)

### 〈제1차 중간보고회 토론내용 및 조치결과〉

토 론 내 용	조 치 결 과
-중앙정부, 충남도 자체사업, 시군사업 등으로 사업·시책 구분(우주형, 정원춘, 김갑연)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장애인복지과장)	-인권 T/F와 협의하여 조율하여 반영 -사업조서를 통해 구체화
-비전, 목표를 새롭게 naming할 필요(우주형, 김지훈, 김형완)	-인권증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
-최근의 실국 관련계획을 검토(농정과장)	-반영
-이주민 관련 국가인권위 가이드라인 추가(유효열)	-반영
-통계 up-date, 추가 보완 필요(자치행정과장, 김형완)	-반영
-충발연의 3농정책 T/F 연구결과 반영(김갑연)	-반영
-노인학대 구체화, 자살문제 강조(최영선)	-노인인권에서 보완
-대내외 여건변화 보완(김형완)	-반영
-용어 수정(김형완)	-반영
-시설장애인 인권문제 추가(진경아)	-추진했으나 시설장애인과 인터뷰가 어려웠음. 이미 충남도에서 조사
-주거, 자살 등의 인권분야 추가(최영선)	-새로운 인권분야로 설정하기 보다는 해당 인권분야에서 강조
-학생폭력 등 집중관리 해야 할 사업·시책 구분 필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반영



• 제2차 중간보고회(2014.8.11)

〈제2차 중간보고회 토론내용 및 조치사항〉

토 론 내 용	조 치 사 항
비전 및 목표 명칭 검토	잠정안으로 반영. 추후 재논의
인권센터(안) 관련 -계획의 센터(안)은 반영하되, 위탁 혹은 자체 조직 결정은 추후에(이상재) -인권센터 설치 관련 사항은 기본계획 이후 연구과제로 남겨둠(우주형) -기본계획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만 언급(우주형) -인권센터 설치방안을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둠(우주형)	인권센터 설치는 추후 연구과제로 설정
도청은 전담기구와 전담인력 배정이 필요(진경아)	도청 전담부서 설치(안)을 제시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관련 → 전부 포괄해서 정리 필요(진경아)	(가칭)충남인권센터를 담당부서로 제시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진경아)	아동청소년인권의 기본방향으로 보완
노인에 자살을 넣던지, or 자살을 한 categorie화 하던지(진경아)	자살원인에 관한 연구는 추후 별도 연구로 추진
여성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성인권문제도 검토(최영선)	향후 검토과제로 설정
사업유형별 사업 제시 요망(정원춘)	행·재정계획의 사업총괄표에 반영
"여성 평등 " 을 " 양성 평등 인권교육 "으로 변경 필요(아산시청)	반영
부문별 인권교육을 통합할 필요(주민)	(가칭)충남인권센터의 역할에 반영





## 사. 충남도 인권정책 T/F 워크숍

- 충남도 인권정책 주관부서, 사업부서와의 인권정책 관련 사업·시책 협의 (2014.6.24)



## 아. 타 시도 인터뷰

- 서울시청 인터뷰 (2014.7.29)

## 자. 충남인권선언문 작성 및 105인회 구성

- 작성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회 개최 (2회 ; 2014.4.1/4.8)

## 차. 도민 공청회

- 1차 (2014.9.22 ; 아산)

### 〈제1차 공청회 의견 및 조치사항〉

토론내용	조치사항
-요보호아동·대안가정의 선생님인권도 포함 -2014년 개정예정인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관련법 반영 -장애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포함 -성별분리 실태조사시 남녀노인을 구분하여 조사 필요 -부서별 성별영향평가지 성인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수립할 필요	-기본방향으로 보완 -관련법 개정후 검토 -관련부서 실무차원에서의 협의사항임 -실태조사에서 향후 검토사항 -실태조사에서 향후 검토사항

토론내용	조치사항
-여성농업인 관련 인권 보완	-여성인권에서 기 검토된 사항
-중장기적으로 자체예산 비중 상향 -신규기존사업 구분 필요 -농업인 관련 예산이 전무함 -인권지표·지수 조사시, 시군의 인권 지표·지수 제시 요망 -자살 위험요인 제거 사업 필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모니터 필요 -이동권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 -학교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다문화 엄마아빠 국가에 대한 이해증진 필요	-향후 실시계획에서 반영 -반영 -기 주무부서와 협의된 사항 -추후 인권실태조사시 검토  -기본방향에서 반영 -향후 인권센터 설립후 반영사항 -취약계층별로 기 검토 -향후 인권실태조사시 검토 -향후 인권센터에서의 검토 사항
-인권센터가 또 다른 감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됨	-향후 인권센터에서의 검토 사항



• 2차(2014.9.26 ; 홍성)

〈제2차 공청회 의견 및 조치사항〉

주민의견	조치사항
-계획실행·추진에서의 참여권 보장 첨가 -지역현황에 예산군, 청양군의 폐기물 매립장 문제 첨가	-아동청소년분야의 기본방향에 반영 -농업인 인권의 현황에 반영
-국가에 의한 개인인권 침해사항(예, 밀양송전 탑, 제주 해군기지 등) 보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산을 보완 -인권전문가·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첨가	-반영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임 -향후 인권센터 사업에서 반영될 사업

주민의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원인 해소방안 보완</li> <li>-농·축산 이주노동자, 시설종사자, 여성농업인의 인권문제 강조</li> <li>-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심각</li> <li>-장애인의 탈시설화 방향 강조</li> <li>-각 위원회 長의 rotation 검토</li> <li>-도, 시·군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인권 기본방향에 기 포함</li> <li>-기 반영</li> <li>-기 반영</li> <li>-장애인인권의 기본항목으로 기 포함</li> <li>-행정사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 어려움</li> <li>-향후 인권센터에서의 반영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교육·홍보 등이 추상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후 인권센터에서의 계획사항</li> </ul>



## 카. 최종심의회(11.13)

토론내용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시행력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투자계획 보완</li> </ul>



## ※ 충남인권선언문 작성 및 105인 구성

### ■ 추진경과

- 인권선언문 작성위원회 구성(2014.6)
  - 이상재, 이상선, 하승수, 권정안, 유은혜
- 인권선언문 초초안 작성 및 수정·보완(2014.7~ )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구성(105인)(2014.7~ )
  - 공개모집(50인)(14.7.10~14.8.8.) : 도 홈페이지, 도정신문, SNS 등 활용
  - 시민사회단체 추천(25인) : 충남시민재단 추천
  - 인권취약계층 추천(30인) : 충남발전연구원 추천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구성(105인)(2014.7~ )
- 인권선언문 초안 확정(2014.9.4)



- Town Hall Meeting 개최



• 인권선언문 확정 (2014.9.30)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심의·의결



• 도민인권선언문 선포식 개최 (2014.10.13)





## 제2장

## 지역현황 및 인권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

2. 관련 선언·계획 검토

---

3. 국내외 사례 검토

---

4.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5. 지역의 인권여건 분석 : SWOT 분석

---





#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 가. 면적 및 행정구역

### ■ 면적

- 충청남도의 총면적은 2013년 현재 8,204km<sup>2</sup>로서 전국 총면적(99,617 km<sup>2</sup>)의 8.6%를 차지함
-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6번째임. 시군별 면적을 보면 공주시가 864.3km<sup>2</sup>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7km<sup>2</sup>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 ■ 행정구역

- 유래를 살펴보면, 삼한시대에는 충청북도와 함께 마한의 지역이었으나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중심지로 왕도인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서 185년간 찬란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룸
- 통일신라시대에는 9주의 하나인 웅주(공주)에 속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후백제, 고려시대에는 하남도라 하였으며, 조선 태종때 이르러 충청도라 불리다가 고종 33년(1896) 13도제 실시에 따라 37개 군을 둔 「충청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함
- 그 후 1932년 10월 도청 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였으며, 1963년 1월 전북 금산군이 충남에 편입되었고, 천안읍이 시로 승격, 1986년 1월 공주·대천·온양읍이 시로 승격됨

- 2013년 현재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구 분	읍·면·동			출장소	법정동리		행정리통		반	면 적 (km <sup>2</sup> )
	읍	면	동		동	리	리	통		
계	24	137	44	2	123	1,970	4,283	1,145	23,974	8,204
천안시	4	8	16	—	30	148	429	563	4,277	636.07
공주시	1	9	6		27	161	245	131	1,928	864.27
보령시	1	10	5	2	10	101	235	113	1,207	569.34
아산시	2	9	6	—	19	143	389	132	2,490	542.18
서산시	1	9	5	0	14	125	263	92	1,898	740.80
논산시	2	11	2		11	173	421	59	2,381	554.80
계룡시		3	1		1	14	63	15	463	60.71
당진시	2	9	3	—	11	138	220	40	1,462	694.88
금산군	1	9				106	254		1,112	576.69
부여군	1	15				191	433		1,692	624.57
서천군	2	11	—	—	—	172	315	—	1,285	358.05
청양군	1	9				115	183		757	479.22
홍성군	2	9				141	336		978	443.97
예산군	2	10				177	311		1,223	542.31
태안군	2	6				65	186		821	516.14

자료 : 충청남도 홈페이지(2013)

## 나. 인구

### ■ 충청남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

- 지속적 세대 및 인구 증가
  - 충남의 세대는 연기군 분리 이전 연평균 2.4% 증가하였고, 인구는 연평균 1.3% 증가하고 있음
- 고령사회 진입
  - 2006년 고령화율 13.7%의 고령화사회에서, 2007년에는 고령화율 14.3%의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2년 현재 15.3%에 이르고 있음
  - 충남의 65세이상 고령화율은 2020년 18.9%에 달하고, 2030년에는 27.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충청남도 연도별 세대 및 인구

연도별	세 대	합계	남	여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2006	774,490	1,974,433	995,826	978,607	271,346	232.66
2007	796,086	1,995,531	1,007,900	987,631	285,562	235.59
2008	812,871	2,018,537	1,020,317	998,220	293,668	238.79
2009	827,846	2,037,582	1,029,725	1,007,857	301,248	236.13
2010	854,432	2,075,514	1,049,363	1,026,151	308,556	240.49
2011	868,768	2,101,284	1,063,012	1,038,272	315,079	243.48
2012	842,446	2,028,777	1,026,812	1,001,965	309,840	247.29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표 3〉 충청남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

지역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 계	2,058,114	1,043,678	1,014,436	100.00	50.71	49.29	867,154	2.37
천안시동남구	262,518	133,017	129,501	12.76	6.46	6.29	106,876	2.46
천안시서북구	333,289	169,780	163,509	16.19	8.25	7.94	135,162	2.47
공주시	115,424	58,228	57,196	5.61	2.83	2.78	49,277	2.34
보령시	104,581	52,868	51,713	5.08	2.57	2.51	45,800	2.28
아산시	291,846	149,342	142,504	14.18	7.26	6.92	119,336	2.45
서산시	167,199	85,632	81,567	8.12	4.16	3.96	67,894	2.46
논산시	125,241	62,600	62,641	6.09	3.04	3.04	55,383	2.26
계룡시	40,780	20,189	20,591	1.98	0.98	1.00	13,973	2.92
당진시	161,886	84,437	77,449	7.87	4.10	3.76	69,868	2.32
금산군	55,254	28,015	27,239	2.68	1.36	1.32	24,902	2.22
부여군	71,852	35,720	36,132	3.49	1.74	1.76	32,244	2.23
서천군	57,990	28,529	29,461	2.82	1.39	1.43	26,683	2.17
청양군	32,283	16,135	16,148	1.57	0.78	0.78	14,781	2.18
홍성군	90,798	45,327	45,471	4.41	2.20	2.21	39,044	2.33
예산군	84,766	42,455	42,311	4.12	2.06	2.06	36,992	2.29
태안군	62,407	31,404	31,003	3.03	1.53	1.51	28,939	2.16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14.7)

〈표 4〉 충청남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망(2008~2012)

연도	65세+		70세+		80세+	
	고령인구(천명)	구성비(%)	고령인구(천명)	구성비(%)	고령인구(천명)	구성비(%)
2010	315	15.2	225	10.8	61	3.0
2011	323	15.4	235	11.1	67	3.2
2012	333	15.6	245	11.5	73	3.4
2020	425	18.9	304	13.5	124	5.5
2030	646	27.3	455	19.2	166	7.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각년도, www.kosis.kr

## ■ 어린이·청소년

### • 어린이·청소년의 감소

- 저출산율의 영향으로 전체인구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2008년 10.5%에서 2012년 9.7%로 감소하였음.
- 19세 이하의 인구비율은 2010년 26.7%에서 2012년에는 22.0%로 감소하였음

〈표 5〉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현황(2008~2012)

연령 계급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총 계	2,018,537	100.00	1,772,119	100.00	2,075,514	100.00	2,101,284	100.00	2,028,777	100.00
0 ~4	97,231	4.82	97,862	4.80	100,848	4.86	103,537	4.93	99,303	4.89
5~9	115,631	5.73	110,915	5.44	103,902	5.01	100,446	4.78	97,493	4.81
10~14	34,896	6.68	133,081	6.53	132,747	6.40	129,789	6.18	118,763	5.85
15~19	127,895	6.34	132,383	6.50	135,817	6.54	137,668	6.55	131,780	6.50
20~24	122,763	6.08	120,540	5.92	120,720	5.82	122,349	5.82	119,869	5.91
25~29	150,299	7.45	145,774	7.15	141,001	6.79	134,621	6.41	122,265	6.03
30~34	147,459	7.31	147,114	7.22	152,089	7.33	156,560	7.45	153,366	7.56
35~39	168,917	8.37	168,745	8.28	168,619	8.12	164,182	7.81	155,824	7.68
40~44	159,545	7.90	163,183	8.01	168,146	8.10	176,424	8.40	170,422	8.40
45~49	166,380	8.24	167,205	8.21	165,846	7.99	159,933	7.61	152,903	7.54
50~54	140,266	6.95	147,660	7.25	157,638	7.60	168,397	8.01	166,081	8.19
55~59	104,497	5.18	109,123	5.36	119,215	5.74	128,691	6.12	129,202	6.37
60~64	89,070	4.41	92,749	4.55	100,370	4.84	103,608	4.93	101,666	5.01
65~69	97,716	4.84	94,602	4.64	92,654	4.46	89,278	4.25	81,879	4.04
70~74	88,551	4.39	90,572	4.45	88,937	4.29	89,475	4.26	90,394	4.46
75~79	57,096	2.83	61,981	3.04	67,893	3.27	73,336	3.49	72,058	3.55
80~84	30,402	1.51	33,159	1.63	35,617	1.72	38,133	1.81	40,050	1.97
85세이상	19,923	0.99	20,934	1.03	23,455	1.13	24,857	1.18	25,459	1.25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표 6〉 충청남도 연령별 인구 현황(2014)

연령 지역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110
천안시	70,875	81,591	85,763	106,527	105,203	77,961	34,608	23,908	8,203	1,067	101
공주시	9,093	13,309	12,953	13,791	17,421	20,227	12,653	11,385	4,031	535	26
보령시	8,889	11,683	10,166	13,062	15,859	17,872	12,615	10,421	3,541	446	27
아산시	40,989	34,561	37,272	56,394	46,739	35,211	19,289	15,530	5,104	697	60
서산시	18,907	20,880	18,209	25,729	27,427	23,649	14,889	12,502	4,451	524	32
논산시	10,265	14,062	13,102	14,779	18,469	21,485	14,365	13,348	4,762	550	54
계룡시	5,243	7,032	4,078	6,221	8,486	5,249	2,193	1,577	613	82	6
당진시	19,306	17,138	18,397	26,974	25,034	22,790	14,657	12,755	4,172	617	46
금산군	4,220	5,449	4,950	5,975	7,942	9,730	7,164	7,144	2,401	258	21
부여군	4,625	7,540	6,324	6,688	9,517	13,036	9,931	9,955	3,771	435	30
서천군	3,588	5,571	4,899	5,505	7,627	10,163	8,489	8,301	3,459	366	22
청양군	2,011	3,050	2,793	2,833	4,108	5,708	4,551	5,189	1,848	182	10
홍성군	7,903	10,333	9,038	10,827	13,738	14,725	10,419	9,955	3,391	431	38
예산군	5,967	8,768	7,986	9,128	12,039	15,220	11,037	10,640	3,531	438	12
태안군	4,476	5,797	5,562	6,997	8,826	11,300	9,281	7,415	2,457	275	21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2014.7)

## ■ 여성인구

- 충남의 여성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47.6%로 전망됨
- 여성의 가구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여성 가구주 혼인상태 별 분포에서는 사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7〉 충청남도 여성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 도	충청남도				전 국			
	여 성	남 성	계	비율	여 성	남 성	계	비율
2008	954,982	988,789	1,943,771	49.1	24,190,904	24,415,883	48,606,787	49.8
2009	957,096	994,122	1,951,218	49.0	24,265,231	24,418,480	48,746,693	49.8
2010	959,205	999,318	1,958,523	48.9	24,334,223	24,540,316	48,874,539	49.8
2020	966,334	1,036,571	2,002,905	48.2	24,645,927	24,679,762	49,325,689	50.0
2030	955,089	1,050,955	2,006,044	47.6	24,444,217	24,190,354	48,634,571	50.3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10

〈표 8〉 충청남도 여성가구주 전망

(단위 : 가구)

연 도	충청남도				전 국			
	여성	남성	계	여성비율	여성	남성	계	여성비율
2010	184,389	570,800	755,189	24.4%	4,456,616	12,902,717	17,359,333	25.7%
2012	204,355	593,589	797,944	25.6%	4,812,295	13,138,380	17,950,675	26.8%
2020	271,315	652,246	923,561	29.4%	6,114,134	13,764,265	19,878,399	30.8%
2030	349,361	714,378	1,063,739	32.8%	7,374,262	14,342,327	21,716,589	34.0%
2035	385,375	734,916	1,120,291	34.4%	7,822,879	14,437,724	22,260,603	35.1%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10

〈표 9〉 충청남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가구)

연 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2010	36,622	39,000	87,465	21,302	184,389
2012	40,929	44,337	93,520	25,569	204,355
2020	55,738	61,508	110,906	43,163	271,315
2030	70,616	75,294	138,999	64,452	349,361
2035	78,537	78,622	156,905	71,311	385,375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10

##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 저출산·노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66.0%에서 2011년에는 62.4%로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도 2007년 526천명에서 2011년 618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예상되는 경제저성장,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인, 여성의 생존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표 10〉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5세 이상인구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998	973	961	974	1,001
실업자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526	568	597	611	618
경제활동참가율(%)	66.0	63.7	62.4	62.2	62.4
실업율(%)	2.0	2.4	3.0	2.9	2.3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표 11〉 충청남도 직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직업별	2008	2009	2010	2011
계	973	961	975	1,001
관리자	24	20	18	17
전문가	110	111	127	125
사무종사자	117	125	138	135
서비스종사자	99	98	85	83
판매종사자	102	94	100	103
농업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69	162	150	15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4	64	67	73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4	137	156	165
단순노무종사자	144	150	136	149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 ■ 사회복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2011년의 기초생활 총수급자는 2006년 대비 14.0%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는 12.3%감소하여, 지역의 복지수혜대상은 감소하고 있음

〈표 12〉 충청남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6~2011)

(단위 : 가구수, 명)

연도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6	42,484	77,856	41,198	70,951
2007	42,075	76,117	40,693	68,968
2008	41,561	73,729	39,606	65,737
2009	42,227	74,494	40,392	66,542
2010	41,299	72,523	39,651	64,647
2011	38,764	66,988	36,907	58,700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2011년 3,545가구에 9,332명임으로, 2006년 대비 매년 가구수 기준 15.4%, 가구원수 기준 15.6%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도민의 절대적인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조건의 개선이 요구됨

〈표 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2006~2011)

(단위 : 명)

연도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2006	2,001	5,238
2007	2,209	5,789
2008	2,613	6,796
2009	2,651	6,940
2010	3,257	8,558
2011	3,545	9,332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 농어민

• 농가 및 농가인구

- 충청남도 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인구도 2006년 437,295명에서 2012년 353,57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14〉 충청남도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단위 : 호, 명)

연도별	농가합계	전업농가	1종 겸업	2종 겸업	농가인구합계	농가인구(남)	농가인구(여)
2006	161,986	102,954	19,902	39,130	437,295	214,709	222,586
2007	161,025	95,465	22,710	42,849	433,585	213,289	220,296
2008	160,734	91,577	24,732	44,424	428,273	210,135	218,139
2009	158,529	92,562	20,082	45,884	417,312	204,867	212,445
2010	151,424	81,439	27,545	42,440	394,324	193,957	200,367
2011	150,207	84,437	65,770	—	378,094	186,365	191,729
2012	142,399	78,714	62,656	—	353,572	172,903	180,669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3)

주1) : 2010년 수치는 농어업총조사결과임. 2011년 수치는 표본조사 자료임

주2) : 겸업농가(1종, 2종 구분없음)

- 어가 및 어가인구

- 충남의 어가인구는 2007년 현재 26,943명에서 2010년 27,961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표 15〉 충청남도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2007-2010)

(단위 : 가구, 명)

전·겸업별	2007		2008		2009		2010	
	어가	어가인구	어가	어가인구	어가	어가인구	어가	어가인구
합계	10,094	26,943	6,040	23,706	11,184	29,397	11,281	27,961
전업	—	—	1,897	—	2,693	—	2,020	5
겸업	—	—	4,143	—	8,491	—	9,261	—
호당인구 (종사자)	—	2.70	—	3.00	—	5.62	—	—
남자	—	13,094	—	11,690	—	14,691	—	13,609
여자	—	13,849	—	12,016	—	14,706	—	14,352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주1) 해면어업조사결과이며, 시군은 자체자료이므로 연도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이주민

### • 국제결혼 이주여성

-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010년 5,725명에서 2013년 6,966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음

〈표 16〉 충청남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단위 : 명)

시군별	2010	2011	2012	2013
소계	5,725	6,594	6,929	6,966
천안시	1,113	1,409	1,554	1,659
공주시	438	462	434	364
보령시	311	339	355	374
아산시	759	843	951	998
서산시	408	484	512	538
논산시	410	448	442	484
계룡시	48	50	48	46
금산군	284	330	325	340
부여군	285	346	346	366
서천군	153	161	172	185
청양군	139	157	162	176
홍성군	242	274	277	294
예산군	247	278	296	313
태안군	157	189	187	201
당진군	477	562	591	628

자료 : 국제결혼이주자(여)현황(충청남도), www.kosis.kr

### • 북한이탈주민

- 충남의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08년 446명의 북한이탈주민은 '13년 94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17〉 충남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2008~2013)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수	446	589	629	778	859	943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표 18〉 충남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2013)

(단위: 명)

시군구	남자	여자	계	비율(%)
공주시	20	66	86	9.1
금산군	1	6	7	0.7
논산시	1	2	3	0.3
당진시	2	17	19	2.0
보령시	17	49	66	7.0
부여군	12	29	41	4.3
서산시	47	101	148	15.7
서천군	0	6	6	0.6
아산시	70	222	292	31.0
예산군	1	10	11	1.2
천안시	56	177	233	24.7
청양군	1	9	10	1.1
홍성군	5	16	21	2.2
합계	233	710	943	100

자료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 사망자, 거주지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 외국인

- 세계화에 따라 충남의 외국인은 2010년 48,874명에서 2013년 68,639명으로 연평균 9.6% 증가추세를 나타냄
-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연평균 8.0%, 결혼이민자는 8.1%, 유학생은 -5.0%, 외국국적동포는 274.7% 증가하였음

〈표 19〉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총계	소계	48,874	57,869	67,157	68,639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소계	38,410	44,467	52,199	52,477
	외국인근로자	23,015	26,091	30,442	28,510
	결혼이민자	6,033	7,011	7,413	7,497
	유학생	6,147	6,784	6,380	5,231
	외국국적동포	707	1,714	4,108	6,534
	기타외국인	2,508	2,867	3,856	4,705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소계	3,511	4,283	4,935	5,152
	혼인귀화자	2,748	3,243	3,676	3,871
	기타사유로국적취득자	763	1,040	1,259	1,281
외국인 주민자녀	소계	6,953	9,119	10,023	11,010
	외국인 부모	135	199	356	423
	외국인-한국인부모	6,031	8,040	9,019	9,880
	한국인 부모	787	880	648	707
외국인주민 세대수	소계	9,501	10,113	12,085	12,431

자료 :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충청남도), www.kosis.kr

## ■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07년 109,213명에서 2012년 124,780명으로 점차 늘어남
- 시군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23,55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가 1,487명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0〉 충청남도 장애인 성별 등록현황(2008-2012년)

(단위 : 명)

연도별 시군별	합계	남	여
2007	109,213	66,679	42,534
2008	117,690	70,350	47,340
2009	125,206	73,426	51,780
2010	130,566	75,833	54,733
2011	131,108	75,939	55,169
2012	124,780	72,219	52,561
천안시	23,552	14,075	9,477
공주시	8,966	5,213	3,753
보령시	8,616	5,112	3,504
아산시	13,847	8,165	5,682
서산시	8,995	5,208	3,787
논산시	10,683	6,055	4,628
계룡시	1,487	795	692
당진시	9,336	5,519	3,817
금산군	4,617	2,560	2,057
부여군	7,327	4,114	3,213
서천군	5,954	3,178	2,776
청양군	2,962	1,616	1,346
홍성군	6,587	3,835	2,752
예산군	6,953	3,970	2,983
태안군	4,898	2,804	2,094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3)

## 다. 복지

### ■ 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충남지역에는 2011년 현재 아동복지시설 15개소, 노인복지시설 27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등 총 589개소가 있음

〈표 21〉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시군별	계	아동복 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여성복 지시설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기타
계	589	15	274	27	11	11	1	250
천안시	96	3	44	4	5	2	—	38
공주시	54	0	24	5	2	1	—	22
보령시	31	2	12	3	—	—	—	14
아산시	57	1	27	2	1	1	—	25
서산시	31	0	15	2	—	—	—	14
논산시	68	3	29	2	1	3	—	30
계룡시	11	0	6	0	1	—	—	4
금산군	40	2	21	1	—	—	—	16
연기군	37	1	15	2	—	1	1	17
부여군	21	1	9	0	—	1	—	10
서천군	25	0	11	2	1	—	—	11
청양군	7	0	5	0	—	—	—	2
홍성군	26	1	11	1	—	1	—	12
예산군	30	1	15	1	—	1	—	12
태안군	24	0	13	1	—	—	—	10
당진군	31	0	17	1	—	—	—	13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노인여가 복지시설

- 지역내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로는 2011년 기준 노인복지관 13개소, 경로당 5,78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표 22〉 충청남도 노인여가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시군별	합계	노인복지관 시설수	노인복지관 이용인원 (명)	경로당 시설수계	경로당 신고시설수	경로당 미신고 시설수	노인교실 시설수
계	5,868	13	4,400	5,785	5,769	16	70
천안시	674	2	600	665	665	-	7
공주시	435	-	-	432	432	-	3
보령시	369	1	300	368	368	-	-
아산시	505	1	500	498	498	-	6
서산시	397	1	400	386	386	-	10
논산시	491	-	-	481	481	-	10
계룡시	36	1	500	35	35	-	-
금산군	307	1	200	306	306	-	-
연기군	336	1	350	329	329	-	6
부여군	455	-	-	455	455	-	-
서천군	314	1	400	306	291	15	7
청양군	298	-	-	298	298	-	-
홍성군	356	1	200	355	354	1	-
예산군	353	1	400	352	352	-	-
태안군	217	1	300	214	214	-	2
당진군	325	1	250	305	305	-	19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여성복지 시설

- 2011년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3개소 등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 23〉 충청남도 여성복지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시군별	계	모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자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계	11	3	1	1	5	1
천안시	5	-	-	1	3	1
공주시	2	-	1	-	1	-
아산시	1	1	-	-	-	-
논산시	1	-	-	-	1	-
계룡시	1	1	-	-	-	-
서천군	1	1	-	-	-	-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아동복지 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2011년 기준 양육시설 14개소 등 15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표 24〉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명)

시군별	계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계	15	98	107	14	90	99	1	8	8
천안시	3	14	31	3	14	31	-	-	-
보령시	2	20	10	2	20	10	-	-	-
아산시	1	5	5	1	5	5	-	-	-
논산시	3	17	25	3	17	25	-	-	-
금산군	2	11	12	1	3	4	1	8	8
연기군	1	5	2	1	5	2	-	-	-
부여군	1	12	11	1	12	11	-	-	-
홍성군	1	7	9	1	7	9	-	-	-
예산군	1	7	2	1	7	2	-	-	-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보육 시설

- 역내 보육시설은 2011년 기준 1,857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표 25〉 충청남도 보육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시군별	보육시설수								
	합계	국공립	민간	개인	법인외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계	1,857	62	816	618	65	133	17	960	2
천안시	599	9	209	189	8	12	5	374	2
공주시	82	6	48	35	7	6	1	27	-
보령시	59	4	39	28	4	7	-	16	-
아산시	453	11	128	112	6	10	5	309	-
서산시	130	2	80	56	7	17	2	46	-
논산시	96	4	51	33	7	11	1	40	-
계룡시	45	1	15	11	1	3	-	29	-
금산군	31	5	25	19	2	4	-	1	-
연기군	67	3	34	24	4	6	-	30	-
부여군	31	-	20	7	1	12	-	11	-
서천군	28	3	23	9	4	10	-	2	-
청양군	17	3	8	5	-	3	-	6	-
홍성군	41	4	29	17	3	9	1	7	-
예산군	30	1	22	9	4	9	-	7	-
태안군	22	1	17	10	2	5	1	3	-
당진군	126	5	68	54	5	9	1	52	-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시설은 2011년 현재 방문요양서비스시설 5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3개소, 단기보호서비스시설 3개소 등 76개소에, 이용정원은 2,535명임



〈표 26〉 충청남도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2011)

(단위 : 개소, 명)

시군별	노인복지시설별	시설수	이용정원	이용현원	종사자수
계	합계	76	2,535	2,382	903
	방문요양서비스	50	2,026	2,026	773
	주,야간보호시설	23	492	353	120
	단기보호서비스	3	17	3	10
천안시	합계	22	799	744	156
	방문요양서비스	14	616	616	118
	주,야간보호시설	8	183	128	38
공주시	합계	4	223	205	39
	방문요양서비스	3	187	187	33
	주,야간보호시설	1	36	18	6
보령시	합계	4	37	36	85
	방문요양서비스	3	7	7	78
	주,야간보호시설	1	30	29	7
아산시	합계	8	190	194	86
	방문요양서비스	6	156	156	74
	주,야간보호시설	2	34	38	12
서산시	합계	4	125	122	75
	방문요양서비스	2	81	81	63
	주,야간보호시설	2	44	41	12
논산시	합계	4	73	64	51
	방문요양서비스	3	64	64	49
	주,야간보호시설	1	9	-	2
금산군	합계	2	160	160	6
	방문요양서비스	2	160	160	6
연기군	합계	4	40	19	5
	방문요양서비스	3	19	19	-
	주,야간보호시설	1	21	-	5
부여군	합계	3	124	122	63
	방문요양서비스	2	110	110	59
	주,야간보호시설	1	14	12	4
서천군	합계	10	199	166	114
	방문요양서비스	4	96	96	81
	주,야간보호시설	4	90	67	26
	단기보호서비스	2	13	3	7
청양군	합계	2	73	73	41
	방문요양서비스	2	73	73	41
홍성군	합계	5	288	273	145
	방문요양서비스	3	263	263	137
	주,야간보호시설	1	21	10	5
	단기보호서비스	1	4	-	3
예산군	합계	2	124	124	28
	방문요양서비스	1	114	114	25
	주,야간보호시설	1	10	10	3
태안군	합계	1	-	-	6
	방문요양서비스	1	-	-	6
당진군	합계	1	80	80	3
	방문요양서비스	1	80	80	3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 문화시설

- 문화시설로는 2011년 기준 공공 공연장 34개소, 미술관 8개소, 문예회관 19개소, 종합복지회관 32개소 등이 운영중에 있음

〈표 27〉 충청남도 문화공간 현황(2011)

(단위 : 개소)

연도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시군별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관	스크 린수	미 술 관	화 랑	문예 회관 (군민 회관)	종합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 화 원	국 악 원	전수 회관
2005	22	3	24	—	6	—	7	15	3	17	1	10
2006	26	5	24	—	6	1	5	16	4	17	1	12
2007	24	3	21	—	5	1	8	14	4	17	6	12
2008	25	6	19	—	6	2	11	37	4	17	6	12
2009	26	4	16	49	6	2	11	34	6	17	7	13
2010	28	4	16	59	8	1	9	25	6	17	7	11
2011	34	3	16	59	8	—	19	32	6	17	7	14
천안시	7	1	3	27	1	—	2	—	—	3	—	—
공주시	2	—	1	7	1	—	1	1	1	1	1	1
보령시	2	—	1	3	1	—	1	5	—	1	—	1
아산시	7	1	—	—	1	—	—	1	1	1	—	—
서산시	1	—	1	6	—	—	1	2	—	1	—	—
논산시	1	—	2	7	1	—	1	1	1	1	—	1
계룡시	1	—	—	—	—	—	1	—	—	—	—	—
금산군	2	—	1	1	—	—	1	—	—	1	—	2
연기군	1	—	—	—	—	—	2	1	—	1	—	—
부여군	1	—	1	2	—	—	2	1	—	1	1	6
서천군	1	—	1	1	—	—	1	—	—	1	4	2
청양군	3	—	—	—	—	—	1	8	—	1	—	—
홍성군	1	1	3	—	1	—	1	1	—	1	1	1
예산군	1	—	—	—	1	—	1	1	—	1	—	—
태안군	1	—	—	—	—	—	1	1	1	1	—	—
당진군	2	—	2	5	1	—	2	9	2	1	—	—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 ■ 의료기관

- 지역의료기관은 2011년 현재 공립·민간시설을 합해 2,03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 28〉 충청남도 공공의료기관 현황(2011)

(단위 : 개소)

시군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부속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2,038	12	40	1,016	14	51	459	4	427	15	2	15	158	239
천안시	596	4	12	291	4	9	142	1	129	4	-	2	12	18
공주시	134	1	1	68	2	7	23	-	31	1	-	1	11	19
보령시	110	1	3	53	1	3	21	1	27	-	-	1	10	17
아산시	220	-	4	103	3	4	59	-	43	4	-	1	11	16
서산시	132	2	1	67	-	-	30	1	30	1	-	1	10	16
논산시	151	1	2	79	1	6	27	-	35	-	-	1	13	26
계룡시	39	-	2	17	-	-	10	-	10	-	-	1	1	-
금산군	66	-	2	33	-	3	13	-	14	1	-	1	9	8
연기군	86	-	1	47	-	4	17	-	17	-	-	1	8	6
부여군	69	-	2	35	2	3	11	-	16	-	-	1	15	20
서천군	64	-	2	31	1	2	13	-	15	-	-	1	10	17
청양군	22	-	1	10	-	1	5	-	5	-	1	-	9	13
홍성군	65	1	2	37	-	4	18	1	-	2	-	1	10	14
예산군	82	1	1	43	-	1	17	-	19	-	-	1	11	16
태안군	58	-	-	32	-	3	12	-	11	-	1	-	7	15
당진군	144	1	4	70	-	1	41	-	25	2	-	1	11	18

자료 : 충청남도 통계정보관(2011)

## 라. 경제

### ■ 비정규직

- 지역의 임금근로자는 2009년 582천명에서 2013년 768명으로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5.9%에서 2013년 33.2% 까지 33~34%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표 29〉 전국·충청남도 비정규직 연도별 현황(2007~2013)

(단위 : 개, 천명)

연도별	전국			충청남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9	16,479	10,725	5,754	582	373	209
2010	17,048	11,362	5,685	604	415	189
2011	17,510	11,515	5,995	634	416	218
2012	17,734	11,823	5,911	704	472	233
2013	18,240	12,295	5,946	768	512	25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 노사분규 발생현황

- 쟁의발생·행위신고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분규발생은 감소하였음

〈표 30〉 충청남도 노사분규 발생현황(2006~2012)

(단위 : 건)

연 도 별	조정신청 (쟁의발생신고)	쟁의행위신고	분규발생	직장폐쇄신고
2006	0	0	10	0
2007	0	0	7	0
2008	0	0	12	0
2009	0	0	4	0
2010	11	2	0	0
2011	29	4	4	1
2012	20	6	6	1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 마. 주거

### ■ 주거실태

- 2010년 기준 일반가구 중 자가는 61.6%이며 전세·월세·사글세는 33.5%에 달하고 있음
- 2005년 자가 62.9%, 2010년 61.6%으로 자가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전세·월세·사글세는 2005년 31.6%에서 2010년 33.5%으로 다소 상승하였음

〈표 31〉 충청남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현황(2005, 2010)

(단위 : 가구)

연도별 시군별	일반가구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2005	659,871	414,795	93,284	76,545	19,462	19,491	36,294
비율(%)	100	62.9%	14.1%	11.6%	2.9%	3.0%	5.5%
2010	715,340	440,510	107,638	99,590	18,130	15,300	34,172
비율(%)	100	61.6%	15.0%	13.9%	2.5%	2.1%	4.8%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3)

- 다문화가구 점유형태
  - 다문화가구의 경우 자가는 29.4%에 불과해 주거안정이 요구됨

〈표 32〉 충청남도 다문화가구 점유형태별 현황(2010)

(단위 : 가구)

다문화 가구별	계	자가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등)
계	16,091	4,732	1,801	4,164	1,241	867	3,286
비율(%)	100	29.4	11.2	25.9	7.7	5.4	20.4

자료 : 통계청 조사관리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바. 교육

### ■ 학교

- 지역내에는 2012년 현재 초등학교 427개소, 중학교 193개소, 고등학교 118개소, 전문대학 10개소, 교육대학 1개소, 대학교 22개소, 대학원 70개소가 개설되어 있음

〈표 33〉 충청남도 학교 총 현황(2012)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교육과정별	학교수	학급(과)수	보통교실수	학 생 수		
				계	남	여
2005	1,398	13,274	12,588	518,144	269,612	226,788
2006	1,399	13,285	12,528	505,019	274,097	230,922
2007	1,361	13,269	12,416	517,110	283,690	233,420
2008	1,379	13,562	12,557	518,714	279,883	238,831
2009	1,379	22,959	12,342	507,463	269,704	237,759
2010	1,372	13,850	12,725	529,031	286,728	242,303
2011	1,372	13,873	12,725	501,762	264,767	236,995
2012	1,382	14,023	12,573	495,830	260,315	235,515
유치원	534	1,296	970	25,767	13,277	12,490
초등학교	427	5,867	6,167	127,260	66,128	61,132
중학교 (국공립) (사립 )	193	2,490	2,602	76,604	39,838	36,766
	149	2,045	2,136	62,566	31,922	30,644
	44	445	466	14,038	7,916	6,122
고등학교	118	2,494	2,667	78,005	41,692	36,313
일반계 고등학교	79	1,767	1,900	58,091	30,041	28,050
특수목적 고등학교	7	98	120	2,290	1,329	961
특성화 고등학교	26	489	489	13,252	7,626	5,626
자율고등학교	6	140	158	4,372	2,696	1,676
기 타학교	7	179	167	1,107	731	376
전문대학	10	148	—	21,996	10,768	11,228
교육대학	1	12	—	1,803	579	1,224
대학교	22	600	—	150,246	80,065	70,181
대학원	70	937	—	13,042	7,237	5,805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충청남도교육청 「충남통계연보」

##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은 2009년 157개소에서 2012년 171개로 증가하여, 더 많은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표 34〉 충청남도 평생교육 기관 연도별 현황(2009~2012)

(단위 : 개)

교육기관	형태별	2009	2010	2011	2012
	총계	157	160	177	171
준형식 평생 교육기관	소계	55	58	61	60
	고등기술학교	1	1	1	1
	방송통신고등학교	2	2	2	2
	산업대학	2	2	2	1
	각종학교(대학, 전문대학)	1	1	2	2
	원격 및 사이버대학 (대학, 전문대학)	—	1	1	1
	기능대학	—	—	1	1
	특수대학원	49	51	52	52
비형식 평생 교육기관	소계	102	102	116	111
	유·초·중등 학교부설	—	—	—	—
	대학(원)부설	25	25	24	26
	원격형태	9	5	5	5
	사업장부설	8	11	11	13
	시민사회단체부설	14	16	20	18
	언론기관부설	6	6	14	10
	시민단체부설	14	16	—	—
	지식인력개발형태	20	19	22	19
	평생학습관	20	20	20	20
	학원	140	182	208	196
	주민자치센터	141	150	157	16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사. 사회·안전

### ■ 자살률

- 충남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2009년 45.80%에서 2012년에는 37.20%로 감소하였음

〈표 35〉 충청남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2009~2012)

(단위 : 명)

지역	2009	2010	2011	2012
충남	45.80	44.60	44.90	37.20
천안시	34.50	34.50	37.20	31.00
공주시	48.90	54.80	46.00	30.70
보령시	44.00	51.60	59.40	42.80
아산시	34.20	33.10	44.00	33.00
서산시	50.70	61.50	51.80	47.00
논산시	51.00	50.50	49.10	38.10
계룡시	28.50	11.70	18.70	7.10
금산군	31.90	44.50	68.10	54.10
연기군	51.90	41.10	36.80	-
부여군	48.60	48.10	38.00	41.20
서천군	51.40	43.50	38.80	37.50
청양군	94.40	70.90	68.30	68.80
홍성군	61.40	53.70	56.10	46.80
예산군	63.90	74.90	54.60	51.40
태안군	83.80	63.60	68.80	43.40
당진군	51.60	38.20	34.70	34.90

자료 : 통계청 조사기획과,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표 36〉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시·도)

(단위 : 명)

시도별	2010	2011	2012
전국	31.20	31.70	28.10
서울특별시	26.20	26.90	23.80
부산광역시	32.90	31.90	30.00
대구광역시	29.70	29.60	24.20
인천광역시	32.20	32.80	31.20
광주광역시	30.70	26.50	25.40
대전광역시	29.20	29.70	25.30
울산광역시	24.40	25.60	23.20
세종특별자치시	-	-	41.60
경기도	29.50	30.50	27.00
강원도	44.40	45.20	38.30
충청북도	35.90	38.90	36.60
<b>충청남도</b>	<b>44.60</b>	<b>44.90</b>	<b>37.20</b>
전라북도	33.20	37.30	29.20
전라남도	33.90	33.90	31.30
경상북도	35.40	35.10	32.50
경상남도	32.00	32.20	26.90
제주특별자치도	31.40	31.00	31.50

자료 : 통계청 조사기획과,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 자살원인

- 자살의 원인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47.1%, 경제적 어려움이 36.5%의 순서로 나타남

〈표 37〉 충청남도 시·군별 주관적 자살원인(2012)

(단위 : %)

구 분	정신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문제	육체적 질병	이성문제	사별	기타
전체	47.1	36.5	9.7	4.2	1.4	0.6	0.5
남자	47.4	37	8.8	4	1.6	0.6	0.6
여자	46.8	35.9	10.6	4.4	1.2	0.6	0.5
15 - 19 세	55.1	26.9	9.3	1.8	5	0.2	1.6
20 - 29 세	55	31.2	7.9	2.2	2.5	0.4	0.8
30 - 39 세	50.2	38	8	1.9	1	0.4	0.6
40 - 49 세	46.1	40.2	9.7	2.3	0.9	0.6	0.2
50 - 59 세	45.5	37.9	10.4	4.3	0.9	0.6	0.4
60 세 이상	39.5	37.5	11.7	9.3	0.7	0.9	0.4
초졸이하	38.5	37.9	11.4	10	0.8	1	0.4
중졸	45	36.6	11.8	4.3	1.4	0.6	0.4
고졸	46.1	38	10.3	2.7	1.9	0.5	0.5
대졸이상	54.3	33.9	7.2	2.1	1.4	0.4	0.7
단독주택	44	36.4	10.6	6.3	1.5	0.8	0.5
아파트	50	36.6	8.9	2.4	1.2	0.4	0.6
기타	45.7	36.1	10	4.4	2.1	0.9	0.8
천안시	46.8	40.4	8.4	2.8	0.9	0.3	0.4
공주시	49.5	32.1	10.5	3.8	2.5	0.3	1.2
보령시	47	38.3	6.8	4.6	1.3	1.2	0.8
아산시	47.3	37.3	11.8	2.4	0.7	0.1	0.4
서산시	51	34.1	8.6	2.8	2	0.6	0.9
논산시	48.7	31.7	7.5	7.1	2.7	1.4	0.7
계룡시	51.3	38.1	7.5	1.2	0.8	0.4	0.7
당진시	50.5	32.1	11.8	3.5	1.5	0.3	0.3
금산군	36.4	44.6	8.7	3.7	4.2	1.3	1.2
부여군	42.1	35.5	8.3	11.3	1.4	0.4	1
서천군	43.8	36.4	12.9	4.8	1.6	0.3	0.1
청양군	43.5	32.9	11.8	7.9	2.8	0.6	0.5
홍성군	43.3	38.9	11.6	4.4	0.9	0.6	0.3
예산군	52.3	28.9	12	4.7	0.4	1.4	0.3
태안군	40	31.8	11.5	12.6	2.1	1.5	0.5

자료 :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 범죄

- 2012년 충남에서는 67,554건의 범죄가 발생했음
- 범죄유형별로는 교통범죄(31.1%), 절도범죄(20.8%), 지능범죄(16.7%), 강력범죄(15.4%), 폭력범죄(14.0%)의 순서임

〈표 38〉 충청남도 범죄발생 현황(2012)

구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총계	67,554	48,450	71.7
강력범죄	1,042(15.4%)	878	84.3
절도범죄	14,040(20.8%)	4,604	32.8
폭력범죄	9,485(14.0%)	7,851	82.8
지능범죄	11,285(16.7%)	7,025	62.3
풍속범죄	807(1.2%)	653	80.9
특별경제범죄	2,300(3.4%)	1,570	68.3
마약범죄	97(0.1%)	88	90.7
보건범죄	444(0.7%)	418	94.1
환경범죄	117(0.2%)	111	94.9
교통범죄	20,976(31.1%)	19,168	91.4
노동범죄	47(0.1%)	37	78.7
보안범죄	10(0.0%)	4	40.0
선거범죄	57(0.1%)	54	94.7
병역범죄	855(1.3%)	559	65.4
기타범죄	5,992(8.9%)	5,430	90.6

자료 : 통계청 수사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표 39〉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현황(시·도)

(단위 : 건)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특별시	38.49	39.72	33.76	34.99	35.17
부산광역시	46.07	48.04	35.66	35.60	37.16
대구광역시	42.75	39.22	38.36	38.39	39.08
인천광역시	39.57	38.27	30.84	29.58	31.61
광주광역시	43.44	43.02	42.64	43.51	45.79
대전광역시	35.87	36.71	32.62	31.32	29.62
울산광역시	40.08	41.09	36.68	32.45	32.57
경기도	42.92	38.82	30.42	30.96	31.90
강원도	39.90	39.16	37.45	35.84	38.40
충청북도	41.62	38.62	35.09	30.86	32.24
<b>충청남도</b>	<b>36.47</b>	<b>36.25</b>	<b>34.20</b>	<b>30.01</b>	<b>31.54</b>
전라북도	32.81	33.92	33.04	31.25	33.20
전라남도	37.76	37.08	37.18	33.32	33.09
경상북도	39.59	39.11	36.83	33.52	34.49
경상남도	41.86	40.54	39.02	36.39	33.80
제주특별자치도	48.41	42.84	44.35	42.88	45.03

자료 : 통계청 조사기획과, www.kosis.kr

## ■ 화재발생

- 충남지역내 화재발생건수는 2013년 기준 전년도 대비 441건 감소함

〈표 40〉 충청남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도별						
2013년		2,657	96	26	70	24,569
2012년		3,098	95	13	82	21,740
전년 동기 대비	증감	-441	1	13	-12	2,829
	비율(%)	△15.9	1.1	100.0	△14.6	13.0

자료 : 충청남도 하반기도정 주요통계(2013)

〈표 41〉 충청남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소방서별	발 생				소 실		
	계	실 화	방화	기 타	동 수	이재가구수	면적(m <sup>2</sup> )
2005	1,376	1,053	95	228	1,135	181	114,822
2006	1,357	659	85	613	1,187	174	148,431
2007	2,698	2,073	126	499	1,532	134	332,832
2008	2,899	2,336	216	347	1,412	162	457,264
2009	2,747	2,259	152	336	1,269	101	476,363
2010	2,994	2,502	155	337	1,434	112	288,717
2011	3,089	2,629	115	345	1,413	98	626,138
천안동남소방서	276	233	21	22	119	5	18,251
천안서북소방서	259	200	23	36	115	4	11,132
공주소방서	240	196	8	36	76	5	25,235
보령소방서	203	173	4	26	34	1	30,537
아산소방서	314	277	11	26	134	10	24,964
서산소방서	280	246	11	23	143	11	101,129
논산소방서	238	195	6	37	182	6	23,079
금산소방서	121	110	2	9	62	1	18,559
연기소방서	154	131	4	19	53	5	23,019
서천소방서	152	147	2	3	30	3	10,787
부여소방서	157	133	6	18	91	7	36,814
홍성소방서	251	223	4	24	157	24	124,667
예산소방서	165	136	5	24	74	15	100,486
당진소방서	279	229	8	42	143	1	77,480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2012)

## 2. 관련선언·계획 검토

### 가. 세계인권선언

#### ■ 배경

- 유엔헌장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엔헌장의 이념을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엔총회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 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함

#### ■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된 인권

- 태어날 때부터의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 이성과 양심의 자유(제1조)
- 인종, 피부색, 성(性), 언어, 종교 등에서의 불차별(제2조)
-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제3조)
- 노예제도와 노예매매의 금지(제4조)
-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의 금지(제5조)
-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 으로 인정받을 권리(제6조)
-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이 없는 법의 보호(제7조)
-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시, 해당 국가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 권리(제8조)
-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 금지(제9조)
- 범죄유무 판정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의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제10조)
- 범죄 피소추인에 대한 변호권 보장, 공개재판을 통한 유죄입증 시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11조)
-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한 불간섭권,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침해권(제12조)
- 자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거주·이사권, 자유로운 출입국권(제13조)
- 박해를 피한 타국 피난처 구난(救難), 망명권(제14조)

- 정당한 근거 없는 국적 박탈 금지, 국적 변경 및 타 국적 취득 권리(제15조)
-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이 없는 성인 남녀의 결혼·가정권, 결혼문제에 관한 남녀간 평등(제16조)
- 재산권(제17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 의사표현의 자유(제19조)
-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0조)
- 대표자를 통한 정치참여 권리, 공직 취임 권리(제21조)
- 사회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22조)
- 노동권, 자유로운 직업선택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한 권리, 실업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차별없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권리(제23조)
-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 권리(제24조)
- 의·식·주, 의료, 사회서비스 포함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
- 무상의 의무교육(제26조)
- 자유로운 문화, 예술, 학문의 권리(제27조)
- 모든 사람은 본 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 보유(제28조)
- 소속 공동체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제29조)
- 본 선언의 규정된 권리와 자유 획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제30조)

## 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2016)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의의

-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

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

- NAP는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 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목표

- NAP는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확인
  -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
  -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종합
  -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 개발
  -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제고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인권 영역 및 쟁점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편의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영역으로 세분함
  - 생명권 관련 쟁점사항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선, 자살예방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자살률 억제 등이 있음
  -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보

- 호법」상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선진 외국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 대용감방 폐지 및 폐지 이전까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교정시설 간 수용 편차 및 과밀 수용 해소,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 소년보호 관련 법률 및 시설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약물치료명령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보호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 정신보건 법령 개정을 통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소) 환자의 권리 보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준수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 도서관 여객선 운임 지원 지속 등이 있음
  -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관련 쟁점으로는 보안관찰제도의 신중하고 엄격한 운영,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 방지 대책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CCTV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개정보 악용 금지 등이 있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개정 또는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권 인정 및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등을 쟁점으로 하고 있음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 관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장애인방송의 편성 확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방송환경 개선,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제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등의 쟁점이 있음
  -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여성에게 균형 있는 공직 진출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장애·지역·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등의 쟁점이 있음
  -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와 관련해서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 및 신속한 구제, 군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조정 지속 추진, 사회적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쟁점이 있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로 세

## 분합

- 교육을 받을 권리 부문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정서·행동발달 장애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체제 마련,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송 및 인터넷 영어교육 접근권 확대와 활용도 및 콘텐츠 강화, 수혜 가능한 학자금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 종합 제공 체계 구축,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맞춤형 대안교육 확대 및 안정적 대안교육 여건 확보 등의 쟁점이 있음
- 근로의 권리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방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보호 대책 마련,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간 장애인 취업 관련 사업 연계 강화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고려한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및 수혜 확대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관행 개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 제고 방안 검토,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음
- 근로3권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대학교원의 단결권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와 관련해서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반 확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의 쟁점이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의 직업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탈수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 사고 농가 및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제도 개선, 농어촌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전기 공급, 가스 및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 조성 지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관리, 농축수산물의 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속, 거주민의 거주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를」의 충실한 시행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건강·보건 및 환경권과 관련된 쟁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치매관리사업의 지속적 확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지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군 의료체계 개선, 미등록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초·중등교육과정 내 성교육의 정규화·체계화·실질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오염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 주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변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음
-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부문에서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문화 활동 증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문화를 통한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 확대,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부문에서는 입양허가제 등 입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충실한 시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가정 내 돌봄 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안정적 법적 지원 보장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추진과제 중 해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들을 분류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로 편성했으며,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분류 내에 북한인권을 추가함
- 여성인권의 관련 쟁점
  -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제도’ 실효성 제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및 성희롱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강화, 농촌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등의 쟁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인권의 관련 쟁점

-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자치활동 예산 확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추진 및 운영 내실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지속적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확대 및 연계·조정 기능 강화, Wee 프로젝트(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예방 강화 및 피해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내실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기능 강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 조성,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독립성 강화,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장애인인권의 관련 쟁점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상법」 제732조의 개정 등의 쟁점 사항이 있음

• 노인인권의 관련 쟁점

- 노인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농지연금제도의 활성화,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상담,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충족 등이 있음

• 범죄피해자인권의 관련 쟁점

-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상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외국인·이주민인권의 관련 쟁점

- 외국인·이주민 부문에서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이민자

관련 정책 개발·추진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내실 있는 체류지원 서비스, 이주민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재외동포인권의 관련 쟁점

- 재외동포 부문에서는 방문취업제 시행과 내국인 취업취약계층 보호, 재외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의 장기적 해소 방안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난민인권의 관련 쟁점

-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 및 기준,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직업훈련 및 언어 교육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인권의 관련 쟁점

-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등의 쟁점사항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인권의 관련 쟁점

- 북한이탈주민 부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관련 법·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등이 쟁점사항임

- 북한인권의 관련 쟁점

- 북한인권 관련 쟁점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등이 있음

## ■ 인권교육

- 인권교육 일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점검 기능 강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학교 인권교육 부문에서는

-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강화,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등이 모색되었음

-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일반 공무원, 지방공무원, 법무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을 교육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개최,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

### 3. 국내·외 사례 검토

#### 가. 국내 인권도시 현황

##### ■ 인권도시 규범

- 인권헌장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시가 제정하였고, 서울시가 제정 중에 있음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인권선언문을 제정함
- 조례
  - 2007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광역차원에서는 13곳,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48곳이 제정함

##### ■ 제도

- 집행기구
  -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집행부 내 전담조직으로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함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인권팀을, 광주 동구가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함
- 인권위원회
  - 광역차원에서는 충남을 비롯하여 5개 시도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인권보호관, 옴부즈맨
  -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제,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제도를 실시함

##### ■ 정책

- 인권기본계획
  - 2013년까지 광주광역시,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충남을 비롯하여 4개 광역시도가 수립 중에 있음
- 인권영향평가
  - 서울 성북구는 공공청사 신축 및 예산설정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인권지표·지수
  -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구는 인권지표·지수를 개발하여 주민의 인권을 관리함

〈표 42〉 국내 인권도시 현황

인권도시의 구조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道)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규범	헌장	· 광주시 광주 인권헌장 (2012) · 서울시 2014년에 헌장 제정 계획	· 서울 성북구 성북구민 인권선언문 (2013)
	조례	· 광주시(2007)를 시작으로 2014년 1월 현재 인천시, 대구시, 제주도, 세종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총 13곳 제정 (17개 중)	· 부산 해운대구(2010)를 시작으로 2014년 1월 현재 총 48곳 제정 (227개 중)
	그 외의 규범	· 서울시 서울시민 권리선언 (2011) ·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 (2013)	· 울산 동구 인권도시 울산동구 선언문(2013)
제도	인권 담당관실	· 광주시인권정책담당관실 (2010) · 서울시인권담당관실(인권센터) (2012)	· 서울 성북구 인권팀 (2011) · 광주 동구 인권담당관실 (2013)
	인권위원회	·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2012) ·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2) · 울산시 인권위원회 (2013) · 대전시 인권정책위원회 (2013) ·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 (2013)	· 서울 성북구 인권위원회 (2012) · 울산 동구 인권위원회 (2012) · 울산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2013) · 광주 광산구 인권위원회 (2013) · 광주 동구 인권보장증진위원회 (2013) · 광주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2013) · 경기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2012) · 경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2013) · 서울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구성 중
	인권보호관 옴부즈맨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012) ·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2013)	· 경기 광명시 공무원 전체 인권 교육 (2013)
	인권센터		· 경기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2012) · 울산 동구 인권 두드림방 (2013)
정책	인권 기본계획	· 광주시 인권도시 기본계획 (2011-2016),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대전광역시 2014년 4월까지 수립예정 ·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수립 중에 있음	· 부산 해운대구 (인권 기본계획, 2013-2017) ·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 (2013-2015) · 울산 북구인권증진 기본계획 (2013-2015) · 경기 광명시시민인권 5개년 계획 (2013-2017) · 서울 성북구 2014년 수립 예정
	인권 영향평가		· 서울 성북구 공공청사 신축 및 예산 설정에 인권영향 평가 도입 (2012)
	인권지표 /지수	· 광주시 광주 인권지표 (2012)	· 서울 성북구 인권지표/지수 개발 예정
	공무원 인권교육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2시간 의무교육) (2013) · 광주시 상설강좌 마련 (2012)	

## 나. 해외 사례 검토

### ■ 해외의 인권도시 운동 등장 배경

- 도시와 지역 간 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권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음
- 각 도시와 지방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 인권도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된 삶의 환경에서 지방정부, 국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인권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사고됨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으로 도시와 지역차원의 인권향상을 중요한 방법으로 여겼고, 국제 시민사회 역시 인권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운동과 인권 관련 NGO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 개념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를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도시 및 지방정부 사이의 네트워크와 연합들은 인권을 주요의제 및 행동계획에 포함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유엔 해비타드가 주관하는 ‘세계 도시포럼’,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인종차별반대도시국제연합’,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2011. 4)’ 및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세계헌장(2005. 9)’은 대표적인 인권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임

### ■ PDHRE(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인권교육 민중연합) 인권도시 프로그램

- 인권도시 실천운동은 1989년 설립된 인권 관련 국제 NPO인 인권교육 민중연합(PDHRE)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 단체는 인권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재구성을 이념적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PDHRE는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관한 세미나, 워크숍,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시행

- 인권도시는 인권학습과정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틀로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 PDHRE는 도시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인권틀(human rights framework)에 따라 지역의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면서, 인권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
- PDHRE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리더와 활동가를 교육하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PDHRE는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인권도시 계획과 운영은 지역사회가 전부 책임을 짐
- 현재 60여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100여 개 도시들의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권교육이 생활양식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
- PDHR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1997년 처음으로 인권도시로 선포된 이래, 2010년 기준으로 29개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되었고, 아시아에는 인도의 Nagpur, 필리핀의 Bucuy Municipality, 대만의 Kaohsiung 등 세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됨

#### ■ PDHRE 인권도시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

-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사례
  - PDHRE의 라틴아메리카 본부(1995)로 1997년 로사리오 시 여성부 자문위원회의 특별 세션에서 100여 명의 시민 대표자들과 시 공무원들이 모여 로사리오의 인권공동체 수립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
  - 1999년 포드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 경찰학교, 지역 인권비서, 움부즈만 사무실 등 12개 조직과 여러 개인이 참여해 인권도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지역 전체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경찰과 함께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무모한 경찰 발포로 인한 사망



- 자 수를 감소시켰고, 경찰학교는 인권을 상설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였음
- 2001년에는 인권단체·국회의원·교원단체대표 등이 학교에서 인권교육 필수화를 규정한 지방법을 제정하였고, 시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인권조약을 만들기도 했음
- 자치단체에 ‘인권장관실’ 두어 공공영역의 안전 및 불차별의 원칙을 촉진
- 오스트리아 그라츠 사례
  - 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남부의 인구 27만 명의 문화도시로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공표되었고, 2001년 시의회는 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그라츠를 인권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그라츠 대학과 협력으로 유럽훈련 인권 민주주의 연구센터(ETC)가 개설하고 인권, 민주, 법적 조항에 관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의식을 고취함
  - 2002년 그라츠 인권상황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우선 순위별로 행동계획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노인 등 여섯 가지 분야의 인권문제 목록을 작성해 실천함
  - 2005년에는 그라츠 사형제 폐지 선언이 있었고, ETC의 훈련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세미나와 워크숍 조직을 활용해 다른 인권도시들을 지원함
  - 인권도시로 지정된 이래로 지금도 시정부, 국회, 시민들이 인권도시 건설과 도시에서의 인권적 삶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논의하고 있음
  - 대표성을 지닌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실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 인권헌장 제정 및 실천: 캐나다 몬트리올시

- 인권헌장 제정
  -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연방 및 주, 시 헌법에도 담겨 있음
  - 주 및 시 법에 도시의 인권헌장을 제정토록 의무화 되어 헌장의 법적 효력을 강화함
  - 도시 인권헌장을 폐지하고 싶을 경우, 시 법은 물론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도시 인권헌장 제정은 시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모든 대표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이 공포
  - 헌장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팜플렛, 책자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보급

- 시장은 인권헌장의 책임과 의무의 구체적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19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TF팀(실행위원회)을 시장 직속에 두고 10년 동안 운영
- 인권헌장의 구성 내용
  - 「권리와 책임의 몬트리올 헌장」은 원리와 가치 부문 14개 조항(전문에 해당) 권리와 책무 부문에서 7장에 걸쳐 15조~28조, 이행수단 부문에서 29조, 41조, 헌장 개정 부문에 42조로 구성
  - 인권헌장은 주 헌법을 초월할 수 없으며, 주 헌법 내에서 효력을 발휘
  - 인권헌장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옴부즈만의 설치와 기능 및 역할을 명시
  - 옴부즈맨은 인권헌장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의 시민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
  - 옴부즈맨은 시, 공공기관,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대표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 의회에서 임명(임기4년 인데 임기관계 없이 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및 변경할 수 있음)
  - 옴부즈맨은 시민이 제기한 인권침해민원을 조사하고 판정하여 개선권고 및 명령을 내리고, 연말에는 인권상황 및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권침해 민원제기 및 개선명령 절차
  - 일반시민이 인권헌장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일반 시(몬트리올 내부 19개 구) 및 몬트리올시 공무국 또는 옴부즈맨에 제기
  - 공무국(우리의 경우 민원실)에서는 311 민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311 및 또는 상담을 통한 각 민원을 분류하여 옴부즈맨 및 해당 부서로 배분
  - 일반 시(구의 개념) 및 시 공무국에 제기한 민원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옴부즈맨에 신고
  - 민원을 제기 받은 옴부즈맨은 조사하여 해당 시에 개선 권고
  - 옴부즈맨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
  - 검·경찰이나 사법부로 가지 않고 옴부즈맨에게 가는 것은 범죄와 달리 인권침해사태이며,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도 들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기 때문임 매우 편리함
  -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줌

## 4.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가. 대외적 여건변화<sup>2)</sup>

#### ■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1993년 UN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많은 권고와 제안을 담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함
-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UN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 ■ UN차원의 인권도시 강조

- 199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등 통합적 인권이 중요시됨
  - 이에 UN에서도 차별과 관련된 생활 속의 인권문제를 강조하면서, 지역·도시 단위의 인권의식 증진과 실천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2001년 5월 21일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함

####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세

-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1년 3월 현재 약 3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 나. 대내적 여건변화<sup>3)</sup>

### ■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한국 인권운동 전개

-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국민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항목을 제도적으로 갖추었지만, 인권활동으로는 형식적인 인권주간 행사뿐이었음.
- 4·19혁명은 1950년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인권의 시각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었음
  - － 한국전쟁 이후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민간인학살피해자 가족들이 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음
-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은 한국인권의 분기점이었음
  - － 전태일의 분신은 1950~196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도시빈민층이 계속되는 궁핍과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선언이며, 자생적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음
- 유신체제 아래 긴급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제한에 종교단체 중심의 인권운동은 한국 인권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함
  - － 1972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설립되어,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였음
  - － 유신체제 긴급조치 이후 민청학련 사건 발생후,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가 조직되어 한국인권의 중심이 되었음. 이들 운동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정치투쟁으로 수렴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는 종교계와 연대한 소규모 피해자가족 운동조직이 인권운동을 이어갔음
  - － 당시 인권운동에는 종교계와 연대한 소규모 피해자가족 운동조직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전문화된 인권조직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이 됨
  - －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인간존엄성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고문추방운동으로 이어졌고 인권조직이 조직되는 촉발제가 되었음

3) 정진성 외, 『인권사회학』, 다산출판사. 2014. 참조.

- 군사독재체제에서의 고문, 조작사건, 의문사 등 총체적인 인권 위기상황에 피해자가족운동이 확대되어 1985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조직되어, 활발한 인권운동을 전개하였음
- 이 시기의 인권은 개인의 행복권리 신장이라는 문제보다, 국가의 정치적 폭력으로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 확보와 민주주의 쟁취가 중요한 목표이었음

## ■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권의 전개

- 인권운동의 전문적인 사회운동으로 성장
  - 국가의 억압과 제한에 대한 실질영장심사제의 도입/고문/임의동행,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참정권 문제 등 인권의 내용이 다양화됨
  - 민주화시대의 주요 인권의제이었던 사상·양심의 문제, 신체의 자유 등을 다루는 인권운동들이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함
-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의 외형 확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별도로 평신도들의 모임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1988년 조직되고, 산하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짐
  - 불교계에서도 1990년 불교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인권운동을 전개함
- 재야단체에서의 인권운동
  - 재야단체는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연합은 1991년 특별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두고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함
- 인권의 영역 확대 및 다양화
  - 1980년대 인권변호에 앞장섰던 변호인들이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결성하고, 연구조사사업, 악법개폐사업, 연대사업, 출판사업, 국제인권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대함
  - 부천서 성고문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노동인권회관은 정치적 고문/폭력 뿐만아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인권보고서 등을 발간함
  - 1987년에는 장애인 인권단체가 처음으로 조직되었고, 199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인권을 위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었음.

##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민주화 이후 인권의 성장,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2001년 설립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특한 성격

- 형식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이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사(公私)기업 또는 민간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역할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구’의 역할을 수행
- 국가 인권행정을 시행하는 행정기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과 국내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인권기준의 발전이라는 쌍방향 매개자 역할을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의 차별폐지 및 사회적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이 진행됨
- 그러나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독립적 성격과 위상이 변하고 있는 실정임

## ■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보호 기반 마련

- 소수자운동의 출현과 함께 인권 차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진행
  - 민간인학살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규명을 위해 2000년 민주화운동 보상과 의문사 진상규명 관련 법률이 제정됨
  - 특히,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에 조작 결정은 군사독재기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역사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됨.

## ■ 국가폭력에 대한 대응에서 개별 주체의 인권으로 인권확산

- 민주화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청산을 계기로 사회취약층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되고 있음
- 침해에 대한 대응차원의 피동차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취약층의 평등권, 생활권 등의 능동차원 권리로 인권개념이 확대되고 있음

## 5. 지역 인권여건 분석

### 가. SWOT분석

#### ■ 강점(Strengths)

- 충남은 동학혁명 등 평등, 연대 등의 인권의 가치를 경험함
- 도시화, 도내 대학생 증가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음

#### ■ 약점(Weaknesses)

- 인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혼재됨
- 인권정책은 중앙정부와 사법부의 업무라는 인식으로 지방차원의 인식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고, 인권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상존함

#### ■ 기회(Opportunities)

- 민주적 가치가 사회 전반부에 확대되어, 인권에 관한 도민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짐
- 민선5기 균형, 행복, 인권 등 민주적 가치가 도정의 핵심 지향점으로 설정되어, 인권신장을 위한 강한 추진력을 얻음

#### ■ 위협(Threats)

- 지역에 외국인 이주자 등 인권취약층이 증가함
-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나. 계획과제

### ■ 인권취약계층의 기본권, 평등권 향상을 위한 실태 및 방안을 마련

- 빈곤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충남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 타율적 강압과 지역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도농 간의 지역적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검토하고 총체적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
- 유교의 가부장적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각 부문에 양성평등권이 확립
-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의 정책적 방안 마련

###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인권친화적으로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인권기관의 역할을 제고

### ■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

- 인권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정비
-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

### ■ 효율적 인권논의와 인권사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 시민참여에 기반한 인권 문화를 조성



## 제3장

### 기본구상

#### 1. 계획의 비전 · 추진전략

---



## 1. 계획의 비전·추진전략

### 가. 비전

#### ■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 도민의 인간적 삶에 대한 권리 확보
  - － 신자유주의 시대 확대되는 양극화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을 확보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문화, 교육 등에 대한 폭넓은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관행적 편견·차별을 해소

### 나. 목표

####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지역의 인권취약층에 대한 차별을 극복
  - －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불평등을 해소
- 지역의 특수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
  - － FTA확대와 더불어 열악한 생활여건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

#### ■ 인권제도 정비

- 인권취약계층과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정비
  -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정제도 정비, 안전체계를 구축

#### ■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 － 효율적인 인권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인권감수성을 고양

#### ■ 인권 협력체계 구축

-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

## 다. 추진전략

부 문	세부분문	인 권 영 역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노인	-노인학대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
	아동·청소년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반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촉진과 생존·발달 보장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 -법적 분쟁 및 착취상황의 해소
	장애인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여성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소수자정책 강화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
	이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기본권 보장
	농업인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어업인	-사회적 기반 구축 -실질적 기본권 보장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전담부서 신설 -인권센터 설립
인권 협력체계 구축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와 인권센터의 연계망 구축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제4장

### 부문별 계획

1. 아동·청소년

---

2. 장애인

---

3. 노인

---

4. 여성

---

5. 이주민

---

6. 농업인

---

7. 어업인

---



# 1. 아동·청소년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 ■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정책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내림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각 학교에서 강제이발 금지, 과도한 복장검사 지양,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지양할 계획을 밝힘
-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함
  -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제도와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교사에 의한 체벌과 관련 현행 법령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을 금지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 이 만들어져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두어 학교폭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 참여기구로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과 침해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

- 대부분 학교의 규율과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쟁점과 논란이 존재함

-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의 사생활 침해 항목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남
- 학교관계자들은 학생들의 관리감독 및 학교 내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들 간의 인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
- 학교 내에서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검사와 통제가 아닌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여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의 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됨
- 아동·청소년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함
- 학교 및 기타 여러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교사 및 상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시됨

#### ■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보호정책의 혼란 야기

-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법률 등에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보호 연령이 상이함
- 매체물 관련 부서와 아동·청소년 보호 담당부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친권자 동의, 심야시간 제한, 경고문구 등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이 유해매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이용환경 정책의 시행필요성이 제시됨

#### ■ 학교 내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교 폭력의 존재

- 실제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이 체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벌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제시됨
- 학교사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있지 못함
- 정부에서 매월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과 협조하여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적절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리적, 생활지도적, 상담적, 학교자치적, 교육정책적, 법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필요성이 제기됨

### ■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과 참여율 저조

-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참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조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율 저조는 참여와 관련한 정보 부족,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분위기 만연 등의 이유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 홍보 및 사회적 시각 개선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됨
- 청소년 참여기구가 극히 소수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

### ■ 아동·청소년들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와 헌법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함
  - 법률적·제도적 근거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사회적 시각은 아동·청소년들의 집회 행위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지배적임
  - 참여의 기반은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 등으로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함

##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정책

- 요보호아동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제3조와 제10조에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개념 및 조치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요보호아동의 보호 정책을 관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시설양육,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시설보호는 가정보호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생활시설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 교육과 훈련과정이 제공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 및 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운영비, 인건비, 시설기능보강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해 주고 있음
- 가정위탁사업의 경우 기존 소년소녀가정은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있으며 양육보조비, 기초생활수급지원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전세자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입양지원사업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기반하여 장애아동 입양보조금,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대규모 집단시설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하는 형태로 이 시설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응급치료 및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서비스와 신고의무자,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요보호아동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의 한계

- 정책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 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적어 가정위탁, 입양 가정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지역 및 보호체계마다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 요보호아동에게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지원금액의 보장과 더불어 지역의 각 보호체계 지원과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시됨

- 학대를 경험하거나 장애 등을 가진 요보호아동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 고등교육 참여 등 다양한 지원책도 미흡함
-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확충이 요구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시설양육보다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이 더 적절하나, 이들 보호체계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미흡함
  - 특히, 입양에 대한 편견이 높고 입양부담으로 인하여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필요성이 제시됨

#### ■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관리체계의 미흡

-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 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의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학대행위자를 원가정으로 부터 강제 퇴거시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분리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됨
-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시됨
- 아동성폭력예방사업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관리되고 기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는 학대 사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시스템 필요성이 제시됨
-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예비부모 교육이나 학교와 연계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됨

## ■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제도 운영

-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평가인증 사실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일부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보육시설물들을 평가기간에만 대여하거나 초과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심사기간 동안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가인증제도의 심사 및 사후관리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 3)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 ■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관련 정책

-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이들이 교육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와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 장애인 대학생 및 장애인 성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영역의 차별금지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2009년 국·공·사립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각 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 급 학교,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교육기관으로 적용되어 시행중임
- 2011년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 급 학교,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 특수학습 뿐 만 아니라 일반학급에도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로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 0-12세 아동·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교육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해 주는 서비스임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표준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권장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약물남용방지 대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주관 사업과 대한보건협회의 금연운동협의회로 대표되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성됨
  -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특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나 약물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임
  - 이외 아동·청소년 약물사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주류 및 담배 구입 허용 연령 제한과 주류용기 및 담배갑에 청소년 유해물질 표시를 하고 있음
- 빈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음
  - 빈곤 아동·청소년 정책은 아동아동급식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CDA),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이 있음

## ■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본권적 지원체계의 미확립

-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애아 통합교육의 비율이 높지 않음
  - 일반 학급에 대한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배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정원 초과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통합교육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함
-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에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

어져 있지 않음

- 기본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제공 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장애차별 시정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더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미흡한 질병 대처체계

-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인 종류와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책의 강구 필요성을 제시함

## ■ 보호자 부재 비율 증가에 따른 방과 후 보육대책 필요

-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보내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보호자 부재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저소득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방과 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지원체계 필요성을 제시함

## ■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

-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의 원인은 학교 성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 청소년들은 학업을 위해 아파도 참고 견디며 수면부족과 개인적 일상을 저버리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과반수가 학업이나 친구관계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
-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시됨

## ■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욕구에 따른 성교육 미흡

- 성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생물학 강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에 대해 배운다는 명목으로 성인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관념들을 갖게 되고 청소년



년 임신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생식건강 사업들은 모성건강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로 가임기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생식건강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및 잘못된 성가치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성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필요성을 제시함

### ■ 약물남용 방지대책이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 효과에 한계

- 약물예방교육은 해악에 관한 지식이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생활기술이나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미약하여 효과가 미미함
- 주류와 담배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단속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중매체에서 주류와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마련된 법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조직, 체계, 인력 및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며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대상 담배 및 주류 판매 제한 법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와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음

### ■ 빈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학교 급식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결식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상당수는 상당히 빈번하게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빈곤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빈곤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 등 한 영역에만 치중되어 통합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서비스의 내용이 비슷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며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음
  -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들이 발생하며, 지원사업이 식비 및 학비지원, 인지 발달 위주의 서비스에 치우쳐 있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체계 발굴 필요성이 제기됨

####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관련정책

-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음
  - 법적으로 보장된 대안학교 이외 미인가 대안학교도 존재하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안학교 법적 근거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각 부처별로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습득체계 미흡

- 아동·청소년들이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함
  -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낮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정보 제공 및 인권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시됨

#####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외활동 여건이 미흡

-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안전 불감증, 고착화된 사회부조리의 결과임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재난재해분야의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함

##### ■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의 다양화

- 과거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경제의 빈곤과 일탈행동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자발적 중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제도권의 학교에 대한 인식의 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세분화하여 학업중단자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탈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대안학교 및 학업중단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고 있지 못해 이들의 공백기간도 길어지고 있음

- 학업 중단 후 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소속이 없이 떠도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활동 공간 및 제도, 프로그램의 부재

-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활동은 학업과 연계된 활동이 중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문화활동으로 이해되기 어려움
-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과 여유도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기에 문화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 5) 특별보호조치

### ■ 특별보호조치 관련 정책

- 근로청소년의 특별보호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의 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62조에 근로청소년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가증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 근로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 및 학대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일 경우 이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주도 하에 성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사업, 성보호제도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 연소자 근로조건 범위반의 증가

- 연소자 근로조건외 범위반 사례의 증가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법에 대한 미흡한 홍보가 원인임
  - 실제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비정기적인 검문검색 실시의 필요성을 제시함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함
  - 근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등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성을 제기함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적 착취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약함
  -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로부터 이후 보복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오히려 감추고 성적인 피해로 오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나타남
  -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의 강화와 사후관리와 함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나. 관계계획 검토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추진과제

#### ■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 범정부차원의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5개년 아동정책기본계획('13년) 수립·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정비로 위원회 기능 복구 및 강화 추진

## ■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확대

##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확대
-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 시·도 교육청별 공·사립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협조사항으로 학교 예산에 학생회 운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전국 200개소)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자기주도학습, 전문체험활동, 상담지원, 캠프, 급식, 귀가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업 평가 실시

## ■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지속 추진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
  - 8개 시·도(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조례 개정 추진

##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 드림스타트 센터 전국 시·군·구 1개씩 설치 및 시·군·구 내 사업 지역 확대 필요
  - ’12년에는 181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50개 추가 설치),
  - ’13년 이후 전국 확대 단계적 추진

-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
  - 지역 내 아동지원체계 연계 및 아동 통합실태조사를 통한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자원 연계·조정 기능 강화

## ■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단위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상담인력,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교내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 교내 학생 사례 판정 협의체인 학교상담위원회,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상담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효과적 운영 제고
  - Wee 클래스 담당자의 독단적 판단을 보완하고, 학부모,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유입·연계 지원 활성화
- Wee 센터 내 외부 상담자원 봉사 및 재능 나눔·기부 구체화 운영으로 지역병원, 사회적 기업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 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인근 Wee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선도역할 및 연계·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 학생상담의 종합 구심점 역할 수행
  - 상담인력 맞춤형 연수, 사례 발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단위 중점 운영

## ■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 2012. 4.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또래문화 선진화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는 문화 조성
  - 외국 출신 아동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조치 강화
  -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 전국 CYS-Net과 Wee 센터를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로 지정하여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서 이송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법률·의료 지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피해 학생의 즉각적 격리 및 피해 학생 치유 지원과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규정 마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교육·치료 대기기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 구축
  - Wee 스쿨·병원학교 등 피해 및 가해학생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 지역적 편차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노력
  -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 설명 및 설치 권고를 통한 증설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예산 확대 권고를 통한 지원 강화 추진
- 학대 유형, 장애 여부, 성별 등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호체계 마련
-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설치·운영

#### ■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피해 아동은 원가정복귀가 불가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 하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시설 입소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스포츠 권익센터 운영
- 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
- 탈성매매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유입예방 강화
- 성매매 알선 여자청소년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대안교육 위탁기관(2개소) 운영 개선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CYS-Net 구축 확대 및 인력 확충, 시민 및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업운영 내실화
  -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위기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증설
- 확정, 추후 3년간 예산 및 인력 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설 예정
- 학교폭력 등 비행관련 특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고도화
- 유관 기관과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긴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확대 실시

#### ■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인터넷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17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4시간 전화상담
- (1388), 1:1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 인터넷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청소년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일명 ‘셋다운제’)의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및 안정성 강화
- 옴부즈퍼슨 운영 방안의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화

#### ■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와 연계하여 권리침해 청소년 발굴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권리침해 사례조사 및 기획과제 발굴 추진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확대 실시
- 청소년 권리 관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 2)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추진과제

- 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임

- 제1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93년 9월 수립한 이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 ■ 계획의 기본성격은 선제적 청소년정책에 있음

-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 부여
  -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 및 지역사회 연계·발전과 주관부처의 총고라조정기능 강화

#### ■ 정책대상은 포괄적 청소년정책임

- 문제중심의 청소년 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정책 수립
  -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추진

#### ■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균형적 청소년정책에 있음

-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활동·복지·자립·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책서비스 지원

#### ■ 제5차 기본계획의 특징

-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정책 기본계획으로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 제4차 기본계획 연속성 담보
  - 가족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
- 선제적·실질적 청소년정책
  -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및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 포괄적·균형적 청소년 정책
  -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균형적 지원



## ■ 향후 5년간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추진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의 필수역량 함양’ 최우선 과제 설정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권리증진 중점 추진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안 및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영역 부각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 청소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과제 보완

## ■ 본 계획의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3) 행복출발 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2014-2018)

#### ■ 본 계획의 주요 내용적 범위

- 4대 영역별 실행가능 계획 수립
  - 충남 아동복지 관련 전략과제, 아동희망프로젝트 성과분석, 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
  - 4대 영역별(생활안정 지원, 학습환경 조성, 안전·권리 증진,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로 이전 계획에 관한 평가와 충남 아동정책의 공급 및 수요예측을 통해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 생활안정지원

- 취약아동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아동지원을 내실화
- 중점추진과제
  -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등
  -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
  -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전문 위탁 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 ■ 어려운 아동 학습환경 조성

- 자기주도적 역량을 증진하고, 활동지원을 확대
- 중점추진과제
  - 중고교 신입생교복 구입비 지원
  - 미취학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지역 아동센터 안전 점검비 지원
- 시설 아동 우수시설 문화체험 지원

### ■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호체계를 구축
- 국가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연계
- 중점추진과제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충남아동꿈나무대축제
  - 실종아동 예방 교육 및 홍보
  - 여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업 지원
  -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운영지원)

### ■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조정체계 구축

- 정책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책지원 인프라를 정비
- 중점추진과제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토론회
  - 드림스타트 평가우수기관 시상
  - 아동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워크숍
  - 지역아동센터컨설팅지원

## 다. 기본방향

###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도내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사항과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기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아동청소년인권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인권보장 협력체계 구축
  - 일반행정 내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분절된 업무의 연계 협력방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행정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청소년인권보장시스템 마련
  - 인권센터 내 아동청소년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아동청소년의 행정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 관련 계획추진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

## ■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 보장

-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 헌법과 국제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당사자로서 관련된 제반 문제와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함
-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은 물론 특히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원가정에서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학대예방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등 부모교육을 강화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아동학대보호기관의 서비스 역량 강화
  - 분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응급치료 및 심리치료를 포함 사례관리 등 필요한 모든 보호와 지원을 강화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여성가족부에 의해 관리되는 아동성폭력예방사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취학, 영유아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발견 방안을 마련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 발달권 보장

-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고등교육 참여,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발달권을 보장해야 하며, 발견부터 자립까지 사례관리추진
- 가출 등 가정에서 이탈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 방치되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청소년에게 급식과 위생, 기초보건과 의복, 잠자리와 상담 등 긴급지원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청소년쉼터 지원을 확대
- 대안양육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설양육을 지양하고 그룹홈,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의 위탁, 입양 문화 인식 개선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장치 마련
  - 시설 아동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기관과 종사자들의 아동인권 인식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 장애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 모든 아동 기초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

-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권을 보장하며,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교사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교육행정과의 협력을 강화
- 청소년 자살률로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정신보건 증진 방안을 마련
  - 정신건강 실태 및 원인 조사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 정책 마련,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검진과정에서 아동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함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을 강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 성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연령과 욕구에 맞춘 현실성 있는 성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

- 기초보전 서비스의 확대
  - 드림스타트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특히 영유아를 비롯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기초보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 ■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

- 학업중단/이탈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기반 마련
  - 학업중단 이후 대안학교나 유학 등 소속이 있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소속없이 떠도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발굴, 지원 시스템을 마련
- 실질적인 진로직업관련 교육 기반 구축
  - 도내 청소년의 직업 체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함. 청소년의 소질, 적성, 흥미와 욕구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하고 교육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협력하며 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를 구축
-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도내 청소년수련기관 등 청소년기관의 문화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이용 소비자가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문화활동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운영에 참여하며 접근이 용이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

## ■ 특별보호조치

- 청소년 노동권 보호 장치 마련
  -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집중관리 사업장과 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행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내용과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함. 청소년노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권리를 알 권리,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인권교육이며, 이는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할 모든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 시범학교와 기관을 선정하여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거쳐 인권교육모델을 정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 관련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인권교육 실시
    - 사회복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
  -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0	20	20	40	40	40
국 비						
도 비	160	20	20	40	40	4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가칭)충남인권센터

### ■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전도민들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권관련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권리현장의 내용을 제작하여 영유아시설, 학교, 복지기관, 청소년 기관 등 유관시설에 배포하고 홍보

- 권리내용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과 절차 및 구제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관기관과 함께 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중 공공시설과도 연계협력을 통해 홍보
-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중학교부터 실시
  - 연소자 고용이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실시
  -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우수업체 대상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사업장을 선정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50	50	50	50	50	50
국 비						
도 비	250	50	50	50	50	5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가칭)충남인권센터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가 국가승인통계로서 매년 생산되어 공표되고 있으나,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국비교를 위한 데이터 생산보다는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실태조사가 요구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충남의 현황과 실태가 반영된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 일반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시설 아동인권 등 연차별 병행조사를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50	50		50		50
국 비						
도 비	150	50		50		5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촉진



- 중앙정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개요(신규사업)
  - CYS-Net 연계기관, 보호관찰소, 비인가 대안학교 등 사례를 발굴
  - 학력취득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리
  - 학교적응 및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
  - 전화, 전자우편 또는 SNS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 정책방향
  - 지방차원에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별 사업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control tower 설치를 검토
  -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one-stop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검토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1,000	200	200	200	200	200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
- 사업개요(지속사업)
  - 아동·청소년 기초건강관리 사업 추진
    -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질병유소건강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
  - 자살예방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상담

- 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전문교육강사단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
-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사례관리협의회 추진
  - 발견부터 보호, 교육, 자립까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과 협의를 위한 사례관리협의회를 추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유아	계		724	746	776	799	821
건강검진비	국 비		134	138	142	146	150
지원 등	도 비		130	134	146	150	154
5개 사업	시군비		460	474	488	503	517
자살예방	계						
전문강사단	도 비	250	50	50	50	50	50
사례관리	계						
협의회	도 비	250	50	50	50	50	5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2. 장애인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사회적 기반

##### ■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음

-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세심한 사회적 관심이 결여됨
  - －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 신축건물과 증개축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필요
- 장애인은 아파트 등 거주지역내에서 주정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
  - －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이 더 필요함(특히 폭설, 강우시)
  - －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이 부족함
- 건축법, 소방법상 아파트 주출입구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출입구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휠체어의 이동이 제약받고 있음
  - －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에서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주차를 단속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차량 주차단속은 교통과, 장애인차량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어 장애인주차장이 단속되지 않고 있음
  - － 장애인주차장 단속의 권한을 교통과나 외국의 사례처럼 경찰에서 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시민의식은 심각한 수준임
-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거리, 시간규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됨
  - － 현재 18:0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야간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음
  - － 지역경계를 벗어날 경우 콜택시가 운행되지 않아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어려움

- 사전예약제 또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함
-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의 운영이 필요함
- 농어촌의 경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더 필요함에도 실상은 더 부족한 현실임
- 버스터미널의 경우 기차역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도착 음성 서비스 및 도우미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교통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항공과 여객 그리고 철도노선과 같은 지원방법이 필요함
- 인터넷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됨
  - 현재 장애인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로 장년 장애인의 인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음
  -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 관련정보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보호자의 퇴직 이후에 보호자와 장애인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경우가 있음
  - 고령 장애인과 단독가구 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고령인 경우에 관련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농아인의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경비로 수화통역사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자부담으로 수화통역사비를 지불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은 글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음.
- 경찰 관련 업무에서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 농아인의 경우 경찰관련 업무를 문자를 통해 대화하지만, 의사소통체계가 달라서 답을 못할 경우가 있음. 경찰이 유선으로 전화할 경우 농아인과 경찰과의 대화가 불가능하여 인권침해를 유발함
- 경찰, 법원,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련 공무원의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함

## ■ 잘 연계되지 않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

- 장애인정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
  - 장애인정책이 전체 행정부서와 관련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
  - 도지사 산하의 상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필요함
- 기관 중심의 장애인 관련 사업 운영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이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장장애인활동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이용자중심의 전달체계가 필요함
  - 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한 접근권에 어려움을 가지는 중증과 저학력의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 지원이 어렵고,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증과 고학력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음
- 장애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남장애인홈페이지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이어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저학력,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정보접근이 어려워 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장애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 복지서비스 소외를 상당부분 방지 할 수 있음

## ■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족한 인식, 미흡한 장애인 인권교육

- 장애인의 교통이용에 대한 편견이 상존함
  -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의 주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하차시 시간지연에 대해 비장애인의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함
- 장애인권강사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있는 장애인권교육 실시가 어려움
  - 장애당사자의 장애인권강사 양성이 필요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됨
  - 장애당사자의 장애인권강의가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장애인 인권교육 확대
  -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관의 장애인권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평등교육 등을 장애인권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
- 장애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2) 실질적 기본권 보장

### ■ 주거권

- 중증장애인의 주거권은 심각한 수준임
  - 중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병원생활을 연장하거나 퇴원을 하지 못해 장기간 입원하는 실태임
- 장애인의 주거지원은 크게 농어촌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촌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일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신규 중도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때부터 휠체어장애인의 주거가 가능한 설계가 필요함. 이후 준공검사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위협받는 장애인의 건강권

- 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국민건강검진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과 후유증상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건강보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은 비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음
- 의료·보건기관에서는 장애인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 의료·보건기관에서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X레이 촬영기가 미비하여, 많은 장애인은 기본적인 X레이 촬영 시에 많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음

- 의료기관의 접근권 부족과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은 결국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회피하는 결과로 나타남(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장애인 48.3%, 중증장애인 30.9%)
- 이를 위해 병원의 장애인접근성과 의료종사자들의 장애인권교육이 필요함
- 충남 도립의료원부터 장애인접근성과 의료종사자들의 장애인권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종합병원 외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원과 의원들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짐
  - 충남의 경우 농·어촌이 다른 시도 보다 많음. 농어촌은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 농·어촌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원 등의 접근성이 부족해 접근이 가능한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함
  - 종합병원 외의 일반병원, 의원에 장애인접근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불충분한 교육권

- 제한된 교육권은 장애인의 능력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취약한 정보접근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와 장애이혼가정의 경우, 장애인부모의 결손아동에 대한 인권적 시각에서의 지원이 요구됨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음
  -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부족해서 장애인은 평생교육의 대상자 선정에서 차별을 받음
  - 평생교육기관에도, 중증발달장애인 문화체육여가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임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발달장애 대상 평생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인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장애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우선 개설과 장애인의 우선 기회 제공이 필요함
  -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성인은 교육청 등과 연계되지 않아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음
- 중증장애인의 야학의 경우 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증장애인의 야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중증 성인 장애인의 문해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문해 교육” 서비스가 필요함

## ■ 미흡한 자립생활 지원

- 활동보조가 접근성을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활동보조는 주어진 시간만 이동을 보조하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가족이외에는 이동보조가 불가함
  - 주말에는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음
  - 농아인의 경우 현재 수화통역영역에서만 활동보조를 지원받음. 그러나 수화통역이 가능한 활동보조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아인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함
  - 중증장애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탈진(burn-out)으로 인한 가족해체, 혹은 가족 집단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지원이 필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함
  - 2014년 충남의 경우 천안과 홍성 등 일부지역에만 자립생활센터가 있음
  - 시 지역은 1개소 이상, 군 지역은 인근 시지역의 자립생활센터와 연계서비스 혹은 두 개 이상의 군지역에 1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인근의 대전과 충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였음
  - 중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확대설치와 예산지원이 필요함

## ■ 낮은 소득은 인간적 삶(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을 위협함

-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연령대가 확대되었으나, 부모가 장애인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보험혜택이 없음. 이에 대해서는 충남도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협의가 요구됨
- 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소득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이 되지 못함



- 현재 보호작업장은 확대되었지만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함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현재 월 30여만원의 근로소득을 최저생활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등인력 활용 지원체계가 미흡함
  - 고학력의 지체장애인, 경력보유 지체장애인이 오히려 더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력 단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 대학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 고등인력에 대한 공급·수요 상황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고학력 경력단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경력개발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 제한적인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 이동권 제약으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권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
  - 극장 등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야외 시설 및 (개인)관광지에도 휠체어 등이 왕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지 않음
  - 일부 극장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여가활동도 한정되어 있음
- 정보와 기회부족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시설미비, 정보부족으로 장애인은 거의 한정된 장소만을 여행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전문여행사가 없어, 단체여행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함께 여행해야 하므로 여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충남도내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와 시설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 여행하기 좋은 곳 충남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장애인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편견과 행정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 휠체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바닥 손상, 화장실 불결 등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음
  - 같은 체육행사라도 장애인들의 체육행사와 비장애인의 체육행사에 예산지원의 차별이 있음
  - 동일 종목 동일인원이 참여하는 장애인체육행사에 동일한 예산지원이 요구됨
- 소모성 오락, 문화행사에 전시적인 장애인 동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 예산소모용 행사에 장애인을 동원하여 촬영하는 전시성 행사에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인권침해를 받음
-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을 소모성 오락이나 문화행사에서 생산성 있는 교육 등의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문화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 문화바우처사업 등 사업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 정보 인지자만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예술인의 작품 활동 지원이 필요함

## ■ 장애인가족의 가계운영, 개인생활이 제약되고 있음

- 장애인 당사자는 기초수급자로 인정되지만 장애인가족은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인가족의 안정된 경제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 대한 세심한 사회적 관심이 결여됨
  - 장애인의 가족이 아플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가족쉼터 등의 운영으로 중증장애인가족의 탈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중도장애인의 발생 초기에 적절한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가족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이 제외되었거나 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을 긴급지원해줄 서비스가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경우, 제대로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음
- 가족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함

## ■ 장애여성

-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여성의 가사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와는 다른 지원이 필요
- 장애여성의 성폭력 성추행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필요
-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쉼터가 필요함
- 발달장애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가족의 멘토링 제도가 필요함

###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 ■ 자립생활센터지원 확대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경증장애인위주의 지원이 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이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이 인근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충남의 경우 국비, 지방비 지원을 받는 자립생활 센터가 4개소에 불과 함

#### ■ 시설내 인권보호 및 시설인권피해자 보호

- 거주시설의 장애인인권침해 사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시설내 종사자와 거주장애인의 인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함
- 거주시설의 종사자와 장애인대상 인권교육이 실질적 효과가 적음
- 장애당사자 인권강사의 인권교육이 절실함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의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정보가 늦은 장애인들은 꼭 필요한 보조기기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장애인보조기구를 판매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함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전달체계가 필요함
- 장애인보조기기의 사후관리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금 확대

- 충남의 경우 시설장애인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임
- 타시도의 경우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탈시설로드맵 등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는 전무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 체험홈, 기술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나. 관계계획 검토

### 1)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추진과제

####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이 수립중에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을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 수립(’ 12.)
  - －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통해 물리적 장애 환경 개선
  - － ’ 15년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단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수립
  - ※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 소요예산 등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 ■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1. 8. 4. 제정)의 시행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 ※ ’ 12. 8. 5.부터 시행
- 중앙 및 지방의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복지 정보,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 ■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진(’ 12년 신규사업)
  - － 중증(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에 대한 1인당 1백만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 장려
-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과제 개발 검토
  - －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결과 및 그 간의 정책 연구 등을 망라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과제 개발 검토

####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 추진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내실화
  - 심신상태, 생활환경, 복지욕구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의 보장성 강화

#### ■ 「상법」 제732조 개정 추진

-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상법」 제732조에 대한 개정안 국회 제출
  - 심신미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 보호를 위해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2013-2017)

#### ■ 주요 추진과제

- 생활안정 지원
  - 희망나눔 결연사업 등 37개 과제
- 이동 및 접근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 등 10 과제
-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사업 등 26개 과제
- 교육 및 정보화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과제
-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지원
  - 장애인 관악단 희망울림 육성 등 18개 과제

#### ■ 검토의견

- 장기적으로 탈시설 패러다임 대응 미흡
  - 향후 대규모 시설중심의 복지에서 사회와 가족 중심의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장기적 준비가 미흡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에 미흡

- 법에 의거 이동·접근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door to door”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시설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다. 기본방향

### ■ 사회적 기반 구축

-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남녀화장실, 대중음식점에 장애인을 위한 입식 식탁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률을 제고함
- 민·형사사건 등에서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
-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접근권이 더 필요한, 더 소외된 장애인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
- 인터넷을 통해 장애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강화

### ■ 실질적 기본권 보장

- 중도·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을 신장
- 의료·보건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농·어촌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의 장애인접근성을 개선
-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의 교육권을 개선
-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학력(경력단절)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확립
- 편견,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여가 향유권을 개선

-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접근권, 정보제공, 콘텐츠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향유권 보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도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가계운영과 개인생활을 불편을 해소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예방·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

## ■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 자립생활센터를 추가로 설치
  -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추가 설치
-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과 시설장애인의 인권교육을 강화
-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확립
  - 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등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정보접근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재활공학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
- 의사(언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보급하여 활용
-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 홈 및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① 장애인 웹접근성 확대

#### ■ 홈페이지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인터넷 정보시대에 시각장애인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나, 실제로는 장애로 인해 인터넷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는 첨부화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웹을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 모색이 필요
- 정책방향(신규사업)
  -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프로그램 구입을 지원
  - 장애인 단체를 통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사용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0				50	50
국 비	100				50	50
도 비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 ②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복지보건중장기계획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기반여건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기존사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조사)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0				170	
도 비	51				51	
시군비	119				119	

-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7	17	20	20	-	20
도 비	77	17	20	20	-	20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주차단속 권한 통합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차량 주차단속은 교통과, 장애인차량 주차단속은 장애인과로 분리되어 장애인주차장이 단속되지 않고 있음

- 관련 법규 검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17조1항)
    -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제17조1항)

- 정책방향(신규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혹은 국토부 등으로 통합(중앙정부 건의사항)
  - 충남도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과와 도로교통과의 권한 공유 협의
  - 시군 차원에서는 관련 실과의 차적조회 등 업무정보를 공유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도·시·군 협의사항

## ■ 장애인 콜택시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장애인 콜택시) 확충하여 교통복지 추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시장, 군수가 5년 단위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사업내용(지속사업)
  - 년차적으로 법적대수인 134대를 도입(' 13년까지 49대 기 도입)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40	560	600	600	600	680
국 비	1,520	280	300	300	300	340
도 비	450	80	90	90	90	100
시군비	1,070	200	210	210	210	240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책방향(지속사업)
  - 저상버스 도입은 구입비 2억원 중 약 1억원을 보조하고(국비 50%, 시군비 50%), 나머지는 버스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임
  - 따라서 충남도는 시·군과 버스업체의 적극적인 증차를 유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200	560	660	660	660	660
국 비	1,600	280	330	330	330	330
시군비	1,600	280	330	330	330	330
자 담		2억원중 1억원 보조, 잔액은 버스업체 부담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 지역 버스터미널 음성서비스 실시 및 도우미 배치

- 배경 및 필요성
  - 버스터미널의 경우 기차역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도착 음성 서비스 및 도우미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교통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시·군에서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에 음성서비스를 실시
  -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우미를 배치(병무청 협의사업)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0		1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시군비	400		100	100	100	100

- 담당부서
  - 시군, 병무청

## ③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 ■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농아인의 경우, 형·민사사건의 경우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음
  -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관련 법률지식을 지닌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민사관련 법률지식을 지닌 수화통역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자기 변호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민사관련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검토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20		20
국 비						
도 비	40			20		2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권강사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있는 장애인권교육 실시가 어려움
- 장애당사자의 장애인권강사 양성이 필요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됨
- 장애당사자의 장애인권강의가 효과가 높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 비						
도 비	40		10	10	10	10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④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본시간(390여 시간) 이외에, 나머지 추가시간은 도, 시군의 예산으로 급여를 지원 중
- 현재 충남은 사회활동에 따라서 10~40시간의 추가시간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보건복지부에서는 총 273시간의 추가시간을 보장)

- 사업개요(지속사업)
  - 수요조사를 통해 외상환자와 같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확대
  - 신청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확대를 시범사업으로 검토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0,611	18,835	19,511	20,194	20,847	21,224
국 비	81,772	15,713	16,027	16,348	16,675	17,009
도 비	18,839	3,122	3,484	3,846	4,172	4,215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중 자립생활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규칙을 정해야 함에도 아직 제정되지 못한 실정임
  - 전국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300여개 있으나, 충남에는 4개에 불과
  - 충남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확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과 지원이 미약함
- 정책방향(신규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확대 설치 검토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600	800	800	1,000	1,000	1,000
국 비	800	160	160	160	160	160
도 비	2,960	472	472	672	672	672
시군비	840	168	168	168	168	168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자립생활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전환하려는 앞

으로의 탈시설의 패턴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이라는 향후 패턴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 정책방향(신규사업)
  -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교육을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 비						
도 비	40		10	10	10	10

• 담당부서

- (가칭) 충남인권센터

## ⑤ 장애인 가족지원

###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역할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충남도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천안, 아산, 홍성, 서산에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전 장애영역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다른 시군에도 확대 설치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50	54	72	90	108	126
국 비						
도 비	450	54	72	90	108	12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시·군

## ⑥ 장애여성 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장애여성의 출산장려금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 비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이외에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 － 가사 도우미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0		20	20	20	20
국 비						
도 비						
시군비	80		20	20	20	20

- 담당부서
  - － 시·군

## ⑦ 문화향유권 보장

## ■ 충남 장애인예술제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 장애인 예술인의 예술·작품·전시활동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 장애인체육대회와 더불어 장애인예술제를 개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			10	10	10
국 비						
도 비	30			10	10	10

- 담당부서
  - － 장애인복지과

## ⑧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보조기구가 꼭 필요한 도구임
  - 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등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정보접근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 경기도, 서울시 등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재활공학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충남에도 재활보조공학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광역보조기구센터 공모를 통해 센터를 설치

####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000	400	400	400	400	400
국 비	1,000	200	200	200	200	200
도 비	1,000	200	200	200	200	200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3. 노인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노인학대

##### ■ 노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 시설입소 이후 성(性)인권 확보
  - 시설 입소시 4인 내지 6인 생활시설들의 설치로 인해, 노인의 성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 노인의 성인권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서비스 등이 요구됨
- 시설입소시 대부분 동의서를 동반가족에게만 받고, 당사자인 입소대상 노인에게는 설명이 전무함
  - 입소 노인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입소노인에게 시설의 현황과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 설명의 노력이 없음
  - 대부분 생활환경이 좁게 제공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문을 잠그어 놓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바깥 공기나 햇볕을 제대로 쬌지 못함
- 요양시설 대부분이 4인 이상 다인실로 개별화 서비스가 결핍
  - 생활시설의 경우 4인 또는 6인실의 공간들이 많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입소노인에게 서비스 개별화가 존중되지 않음
  - 개별 공간이 없이 모두 공용 시설이 되어 편안한 분위기의 생활이 불가능함
- 동성의 케어자가 채용되지 않아 신체적 수발시 인권침해 발생
  - 남성노인에 대한 목욕을 여성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수행하여 무의식적인 성추행 가해자로 남성노인이 전락함
  -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경우 여성 노인에 대한 목욕케어 및 신체수발을 이성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일면식 없는 목욕봉사자의 서비스로 수치심을 유발
  - 목욕케어가 힘들다는 핑계로 기관을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입소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목욕서비스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음
- 부적절한 케어 용품으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 원칙상 목욕서비스는 반신이상 몸을 담그어 입욕형태로 실시해야 하지만, 목

- 욕탕보다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은 화장실에서 목욕서비스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건강보험공단이 권장하는 목욕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실 변기에 노인을 앉히고 목욕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 주 케어자의 입소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다반사
  - 입소노인에게 친하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모든 말투가 반말인 경우가 있음
  - 입소노인에게 간식 제공의 댓가로 성인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인권침해 발생
- 무분별하거나 횡포에 가까운 신체강박이나 약물 투여
  -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신체강박을 실시하여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 식재료 및 조리환경 열악
  -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낡은 조리도구로 노인의 음식을 조리함
  -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있음

## ■ 노인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자의 인권 감수성 열악

- 입소노인 인권 지킴이가 인권 침해 가해자
  - 노인복지를 이끌어야 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을 억누르는 간접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자신의 인권을 표현하는 노인에게 편견을 주어 타인 앞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 노인을 직접 케어하는 종사자들에 의해 노인인권의 보장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요구됨
- 노인 생활시설 운영자의 학대지침 몰이해
  - 보건복지부의 노인 생활시설 학대예방지침에 대한 종사자의 교육이 소홀함
  -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안되는 직원에게 인권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부탁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가 많음
- 노인 생활시설 내 학대사태를 고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지만, 처벌기준에 대한 미미한 정도와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 내부고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접 신고를 기피하여 노인인권 유린 현장을 남 일처럼 여기게 함

- 시설에의 악영향을 염려하여 인권 침해나 학대사례 고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시설내 학대가 은폐되어 있음

### ■ 가정내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미흡

- 학대관련 신고시 자녀나 가족과의 갈등을 가정문제로 치부하여 인권 침해 관련 개입을 거부
  - 가정폭력의 하나로 부모자식간 또는 배우자간 폭력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단순한 갈등문제로 판단하여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
  - 친고죄 성립으로 인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이 어려움

### ■ 노인인권 관련 상담창구 미흡

- 노인상담 전용 전화가 없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전용 상담 창구가 없어 노인의 인권 등 전문상담 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실적위주의 사업만 전개
  - 건강문제, 정서문제, 경제문제 등 종합적인 상담기관이 없음

### ■ 노인당사자의 인권 인지도 부족

- 생활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생활시설(특히 인지가 가능한 양로시설) 입소노인에게 직접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노인 스스로 입소환경에 대한 인권친화적 제도 건의가 불가능함
- 노인인권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 부족
  - 지자체의 노인인권감수성교육이 부족
- 청소년, 성인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초, 중, 고의 공교육 과정에서 사례중심의 인권교육이 부족
  - 성인의 노인에 대한 인권 의식 결핍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됨

## 2) 노인의 기본적 권리 침해

### ■ 노인학대 등 인권 침해 사례 은폐

- 이미지로 인한 노인학대 등 인권 침해사례 은폐 경향
  - 지역사회 내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자녀나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를 창피하

게 생각하여 학대사실을 은폐하여, 차후에 극단적인 학대 행위로 고통을 당한 후 비로소 학대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학대가 일어난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문제로 치부하여 노인학대가 신고되지 못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방치된 노인이 발생함

## ■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미흡

- 노인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준비기능 미흡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가족구성원 갈등으로 고독사를 맞는 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범 도민적 대책이 미흡
  -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사회가 돕고, 죽음에 관련된 의학적, 법적, 윤리적 문제를 가르치고, 자신의 장례식을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하도록 격려하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노력이 미흡
- 노인자살을 상위권 차지, 충남에 대한 이미지 악영향
  - 치매어르신인 경우 치매증상으로 인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게 됨. 치매어르신에 대한 토달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2013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충남이 인구 10만명당 37.2명으로 전국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함.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2%를 차지하여, 자살 위험군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등 노인자살 관련 안전망 구축이 미흡
  -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노인 생활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미흡
- 예비 노인(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은퇴준비 교육이 미흡
  - 예비 노인에 대한 노인문제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일부 대기업에서만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교육을 시키고 있어 당장의 생계에 연연하여 미처 준비되지 못한 은퇴를 맞이하는 예비노인에 대한 공공의 정책이 미흡함
- 노인 민원이나 공무처리 문건에 대한 노인 배려 소홀
  - 노인의 신체적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부족함

## ■ 의존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낮은 질(質)

- 노인소유 주택에 대한 개조비용 지원 필요
  - 노인이 되기까지 지켜온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몸이 불편해지는 정도

에 따른 주거서비스가 절실

-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주택을 개조하여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재택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터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개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나 관련 정책이 미흡함
-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기능 미흡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급여일 경우 20%의 본인부담(약 40~50만원)이 발생하고, 재가급여일 경우 15%의 본인부담(약 9~14만원)액이 발생함
  - 물론 나머지 80~85%는 국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금조차 여유가 없는 노인들의 건강보장정책의 공백이 발생함
  - 인구가 밀집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서비스경쟁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지만, 시골지역일수록 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거나 자녀가 지정해 준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 노인장기요양 등급예외자인 독거노인 또는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시골지역 서비스가 간헐적이거나 질이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

## ■ 농촌지역일수록 노인의 공공의료서비스 소외 심각

-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질병 치료에 대한 무감각 양산
  - 충남에는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원거리 지역의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까운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종합건강검진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촌각을 다투는 심근경색이나 심장질환 발생시 종합병원과의 거리가 모두 멀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차별을 받게 됨
- 충남지역 공식적 호스피스 병동 전무
  - 보호자가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호스피스가 전무한 실정임
  - 호스피스 대상자로서 노인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공공의 인식 필요

## ■ 일하고 싶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미흡

- 노인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창출
  - 노인일자리 업무 추진시 날씨나 물리적 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

- 농축산관련 노인의 안전 불감증
  - 농기계의 도로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 영농기계 조작미숙으로 안전사고 발생, 농기계 경광등 미부착 상태로 야간 운행
  - 철저한 농약 규제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여 노인이 급성 중독될 위험이 있음
-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서비스 연계 부족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빈곤과 가족 간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복지체계가 전무함
  - 선택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되는 근로 계약의 행태(경비, 환경, 현장근무 등)에 대한 점검 노력이 요망됨

## ■ 불안정한 노인의 고용환경

- 시니어클럽 형태 노인일자리 창출 미흡
  - 시군별 시니어클럽이 1개소로 제한되어 있어, 노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개발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함
  - 노인일자리에 대한 저비용, 빈곤노동자라는 편견을 해소할만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미흡
- 노인 고용률 저조
  - 단순히 일자리 개수 늘리기의 창출사업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함
  - 빈곤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고용률 선정 등 적극적 대책이 미흡
- 노인의 적합 직종 선정의 한계
  - 고령친화직종의 구분에 의한 노인에게 우선 고려되는 직종을 선별하였으나 50대 후반부터 100세까지 적용되는 광범위한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노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55세~65세를 young old, 66세~75세를 middle old, 76세 이상을 old-old로 구분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노인 적합직종을 최소 3개 분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 정년연장 관련 지원금 편중 해소
  - 정년연장과 관련한 제도이행시 중형 또는 대형 기업 중심으로 지원금이 배

분되고 있음

- 임금피크제나 노인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이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제도에 대한 알람이나 적극적 확대노력이 요구됨

## ■ 노인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 고령운전자 증가로 위험천만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음
  - 주간 또는 야간 보행시 노약자의 보행중임을 알릴 수 있는 장비 지원 필요
- 노인여가시설 노후화 및 이미지 낙후
  -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일수록 안전체감도가 낮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경로당 등 노인 관련 시설물의 이용적합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
  - 시설물 주변 안내판이나 주의사항 문구, 활자 일부가 노인에게 부적합
  - 시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노후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
  - 위험상황시 응급조치에 대한 고령친화용품 보급이 미흡
  - 소비를 촉진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여가시설은 매우 화려하고 접근성이 높으나, 반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는 무거운 분위기와 초라한 장식품이 대조적임
  - 현재의 여가시설에 대한 적절한 질적 보강 및 신규 여가시설 인프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확장이 필요함
  - 농촌지역 노인일수록 보건소 등에서 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강사풀 구성 등이 다소 미흡하여 질이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나. 관계계획 검토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추진과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양적 증가를 강조한 동전의 양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실시 및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등급외(A, B등급)자에 대한 서비스 추가

- 등급완화 기준이 겨우 1점이며, 양적인 대상자 증가만을 앞세워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급작스런 정책 팽창만을 보여 주고 있음

## ■ 농지연금 활성화

-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한 농업인 회의, 교육시 현장설명회 실시 등 홍보
- 연금가입시 의논 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및 상담
  - 극단적인 비판일 수 있으나, 노인의 재산관련 자녀의 욕구에 호소하여 평생의 농지에 대한 노인의 의지를 자녀의 설득력 앞에 굴복시키려 하는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함

## ■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학대피해노인 쉼터 거주기간 만료자 중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입소기간 추가 연장
  - 입소기간 추가 연장이 아직 내부적으로 공론화 되지 않고 있으며, 되더라도 1개월 연장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아도 1개월 연장만 고려되고 있으며, 연장되더라도 쉼터의 기능이 기간을 연장하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음
-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다각적 치료방식을 꾀하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를 교육에 참여시키거나 치료 개입에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학대행위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의해 노인학대 전문상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언어적 폭력 및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학대행위자 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노인학대 관련 사항 등 시설평가 실시
  -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대응 교육관련 세부지침이 없어 단순히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는 주간회의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노인시설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 종사자 대상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함
  -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몇몇 기관에 치중하거나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함
-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은 충청남도 자체 사업으로 불가능한 정책임

## ■ 검토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내실화에 대한 정책이 평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 비교적 저렴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을 케어하는 기관의 서비스 역시 저렴한 품질,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서비스로 전락하여 노인의 요양환경을 위한 수급질서를 오히려 이윤추구의 현장으로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을 외면하고, 현황파악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
- 아무리 저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일지라도 소외된 노인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지 못함
  - 80%나 지원하는 국가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세심한 대안이 보이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경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임
  - 등급을 받았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조사하여 근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품질에 대한 국가적 수준을 증명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이 노인복지시설을 직영하여 노인요양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증명하고, 서비스 제공시 민간에서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 보급을 실천해야 함
- 노인학대 예방이나 치유 프로그램의 현실적 대안 마련 부족
  -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광역 노인인권의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학대에 대한 노인의 존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노인학대피해자 일시보호를 감당하는 쉼터에 대한 기간 연장은 시급한 사안이 아님
  - 2004년 신설 이후 인원의 보충이 없이 진행되어 온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적극적 예방 및 홍보정책도 펼칠 수 있게 지원

해야 함

-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 및 근절 정책은 오히려 현재 노인 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임
- 현재의 노인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저렴하게 보급되는 것도 좋지만,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학적 산업들이 함께 연구되고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 추진과제

###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시니어 창업 지원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농지연금 도입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고품질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독거노인 보호 강화(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 ■ 검토의견

- 노인의 고용장려정책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기술
  - 고령자 재취업의 어려움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기술함
  - 정년연장에 대한 방안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함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었으나, 여전히 고령자를 약 50년의 주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추진하려 함(세 분류로 나누어 고령자 적합 직종을 우선 선발해야 함)
- 고령전문인력에 대한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업들에 우선 채용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일자리 영역 개발에는 미흡
  - 사회적 기업에도 우선채용을 지원하지만, 고령 인력에 대한 새로운 창업 분야를 만들어주기에는 미흡함
  - 시니어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지원자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퇴직자 중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진로방안만 제시하여, 생계형이나 빈곤을 탈피하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충청남도가 도정으로 추진하기에 버거운 정책들이 열거되어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 정책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 가입자

- 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대상이 매우 협소함
-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은 생계여건상 개인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기반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음
- 건강보장에 대한 정보제공 전달체계의 한계점
  - 건강증진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건강정보포털”에 접근성을 가진 일부 노인에 한정된 정책을 우선 구현하여 소외감을 줌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건강관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느껴지나 현재 1인 1보건지소 또는 거점 보건소와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해 아쉬움
-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의 지정이 시군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음
  - 공공의 서비스를 구현하기보다 민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정보제공이나 권한위임에 대한 실질적 고려가 요구됨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계획의 긍정적 기대
  - 공공보건정보화사업과 연계, 국가치매등록관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사업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권역별 치매예방관리, 치매 전문인력 양성, 치매상담센터를 강화함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시·지각 인지반응 검사, 노인교통사고 유형 등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추진
  - 대도시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무료 교육 시범 실시
  - 야광지팡이·모자조끼 등 안전용품 제작 및 배부 추진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사후 모니터링 강화만 언급됨
  - 이미 학대가 발생한 대상자에 한하여 모니터링만 한다면 예방적 차원의 노인학대방지정책이 미흡함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에 그쳐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강제적 조항이 아쉽음

### 3)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 주요 추진과제

-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방함
- 노인일자리사업
  - 근로가능한 노인에게 취업기회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 독거노인행복프로젝트
  -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 빨래 차량, 목욕차량 운영
- 무료 경로식당
  - 저소득 노인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 보장
- 저소득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
  -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보장
- 거점 경로당 증·개보수 사업
  - 노후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 필요
-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사업
  - 경로당의 기능개선 및 노인들의 문화활동장소 확대가 필요

## ■ 검토의견

-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차원의 대안이 전무
  -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 친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에 대한 정책사업이 없어 아쉬움
  - 혐오스럽거나 치부로 여겨지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해결하도록 노인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음
- 시설내 노인의 안전여부와 시설학대 발생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제도 전무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내에서 은폐된 환경으로부터 오는 단절감뿐만 아니라 종사자나 입소노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도외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기존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
  - 노인의 사회적 문제시 저소득 고소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 사회적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묵인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

- 경로당활성화 사업이나 독거노인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등의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

## 다. 기본방향

###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보장

- 시설입소 이전과 이후의 노인인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실현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평가하고, 모든 케어환경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충남도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함
- 다인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입소노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고 시설의 관리중심으로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입소시부터 임종 또는 기타 사유의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에 노인인권 침해 요소의 유무,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지도방침을 마련함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입소자 또는 입소자 가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입소노인 당사자 중심의 인권 수준을 확보하고, 가정보다 더 편안한 국가지원 공공의 서비스로 향상시켜야 함
- 자녀나 기존 개인소득을 통한 사적노후보장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공적 연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사유로 인하여 효자보험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현황파악 및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
- 인권존중 서비스를 실현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요원들에 대한 노인인권 감수성 교육을 정례화

###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점으로 한 인권 종합 상담 창구 일원화

- 건강문제, 정서문제, 경제문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문의 등 각종의 노인상담을 종합적으로 대처 가능한 노인 전용 상담창구가 필요함
- 위험상황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최대, 최적의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
- 최소한의 노인인권을 교육하고, 인권친화적 제도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평가기관으로서 이미 구축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인권상담, 노인학대 스크리닝 및 판정, 학대행위 조사 및 사후관리 등 One-Stop Solution을 추진

- 노인 당사자, 공무원(소방, 행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등 노인의 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유아, 청소년, 일반 성인에 대한 노인의 공경심과 효사상, 노인의 인권 교육(타 영역의 인권과 동시 가능)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노인의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마련

### ■ 전체 노인에 대한 삶의 이면(裏面) 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에 치중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전체 노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노인의 종합적 문제해결을 꾀하여야 다층적인 접근과 소외되지 않는 인권정책이 가능함
- 죽음, 자살, 호스피스, 건강보장 등 노인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정책을 피하고, 직접적으로 어둡고 노인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선을 지켜줄 수 있는 적극적 인권을 실현해야 함
- 노인의 여가문화 등 소비적 공간에 대한 유니버설한 디자인과 공공성을 한층 강조하는 차원으로의 변모를 꾀하여,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한 삶의 이면을 긍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 ■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 구현

- 변화없는 단순한 일자리갯수 늘리기에 동참하기 보다 노인을 최소한 세 분류(57세~65세 young-old, 66세~75세 middle-old, 76세~이후 old-old)로 세분화하여 고령인력 적합 직종을 재편성함
-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직종별로 점검하여, 노인이 충분한 조건하에서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장과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홍보
- 노인의 빈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군별로 일률적인 시니어클럽 지원형태로부터 다양한 직종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정책 선회가 요구됨

-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직종 등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1% 의무고용률을 제정하여 노후의 소득보장 및 자아실현을 범국가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노인장기요양기관 ombudsman제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ombudsman 제도는 기관내부에서 합의되지 않거나 해소  
가 어려운 구조일 때 외부에 의한 조정장치임
  - 현재 시행중인 ombudsman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를 예방함
- 사업개요(지속사업)
  - 젊은이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ombudsman 역할을 강화
  - 매년 ombudsman 활동 평가 및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한 ombudsman 평가서(백  
서)를 발간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은 노인학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  
재함
  -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인들의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  
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이 주체가 되어 노인 및 가족들에게 인권(예방)  
교육을 실시함
  - 노인인권교육과 함께 노인인권에 대한 홍보사업을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 비						
도 비	40		10	10	10	10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가칭)충남인권센터

## ■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
- 충남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노동 및 복지정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사업개요(지속사업)

- 현재 충남에 3개밖에 되지 않은 시니어클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군에 개소
- 현재 사업이 부진한 시니어클럽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50	210	210	210	210	210
국 비						
도 비	1,050	210	210	210	210	210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경로당, 마을회관,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을 위한 공간을 누구나 어울리고 싶은 디자인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여가 및 문화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공성을 강조한 심미적 리모델링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행복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 시범사업을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	10	10	10	10	10
국 비						
도 비	50	10	10	10	10	10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구체적인 인권보장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함
- 현재 보건복지부의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이 제정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 사례별 대응법을 보완해야 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충남도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 신고체계, ombudsman 제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보장 가이드 제작

• 담당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남인권센터

## 4. 여성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 ■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음

-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으로 가부장성이 강하고, 대중여성들, 도민 전반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음
  -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임
  -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함
- 인권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정책과제로 개선 필요함
  - 인권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 구체적,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인권교육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있음
  - ‘다름’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육체계 필요

#####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 및 환류가 잘 되지 않음

- 성인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
  - 도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개선책이 환류되지 않고 보고서 작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여러 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후에도 해당 정책의 정책개선안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루어지고 개선안도 계속 축적되고 있으나 실제 도민들은 성평등한 정책을 체감할 수 없음
  - 그 결과 성평등한 정책변화의 경험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한계가 큼

## ■ 여성들의 정치, 사회참여 수준이 낮음

-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평균 100% 중 19.1%가 여성이지만, 우리나라 여성 선출직은 7%밖에 불과함
- 충남은 다른 전국평균보다 여성의 정치참여 수치가 전체적으로 저조함
  - 충청남도 여성의원 당선자 수는 비례대표 포함하여 18%정도이며, 여성 공천율도 매우 낮음
  - 여성 후보도 많지 않아 발굴이 필요함
  -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광명 33%에 비해 충남 18%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충남이 특히 더 저조한 편임.
-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정치참여, 5급이상 여성공무원확대)를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이 필요함

## 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 폭력예방교육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의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대규모 강의 중심, 보수적인 교육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식 제고의 실효성이 낮음
  - 여전히 이러한 교육이 도민 전반에 저변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임

###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쉼터와 같은 공동시설생활의 어려움이 큼
  - 다수의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생활과 같은 형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LH 공사와 협력하여 임대아파트 등 그룹홈 형태의 주거제공이 필요함
  - 천안에 가정폭력 그룹홈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홍성이 그룹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통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마을단위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요구됨
  -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차원에서의 접

- 근이 필요함. 가해자 및 가족도 같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함
- 피해자, 가해자, 그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함. 한 예로 마을단위에서 여성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후견인(부녀회장 등)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 가해자 교정치료가 미비함

-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가해자문제가 매우 중요하나 교정치료 등이 미약함
- 현재 복권기금에 의해 보호관찰소 관리하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치료수준으로는 미약함
- 보호관찰의 확대도 필요함
- 교정치료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연계가 요구됨

#### ■ 성매매에 대한 범죄인식이 미약함

- 성폭력은 범죄화 인식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약함
-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 사회현실과 유사성매매업 등이 지역 곳곳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3)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 ■ 여성장애인 보건,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보호관리가 필요
  - 지적, 정신, 발달 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음.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의 부녀회장, 이장 등 1:1 상담 및 지속적인 가정방문 등 보호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함
  - 마을단위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여성정신장애인 집중지원 mentoring'이 필요하며, 이때 mentor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
- 장애인 대상 성 인권교육이 부족함
  - 충남의 특수학교 6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차 나아가 특수학급,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의

확대가 요구됨

### ■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미흡, 보건·복지여건이 열악함

- 다문화가족을 위한 멘토-멘티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다문화가족은 멘토-멘티 제도를 많이 맺고 있으나, 부녀회, 새마을지도회 등 마을 회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 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보건지원 확대 필요함
  -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폭력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보건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북한이탈주민 보건,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지원 미흡

-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현재 경찰이 지도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보아야할 부분임

### ■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 대처방안 미흡

-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주고 있지 못함
  - 성적소수자의 경우는 존재 자체가 가려지거나 부정되고 있음
  - ‘다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에서 강조되어야 함
- 마을단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서울 은평구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 경찰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음
  - 마을단위에서 멘토링 시스템 관리 및 인권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 사후관리가 필요함

## 4)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

### ■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충남도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취약함

- 충남지역은 고학력 여성경제활동률이 낮는데,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과도 연결되어 있음
- 보육환경(특히 공보육)이 미흡함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약계층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비정규저임금직)에서는 지원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취약계층 여성들, 특히 한부모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함

###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가 낮음

- 농어촌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은 그 역할에 비해 2차적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임
  - 농어업에 대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노동하지만,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남편)에게 주어지며, 재산권도 매우 약한 실정임
  -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 등에서도 남성에 비해 수혜율이 매우 낮음
- 여성농어업인 가구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함
  - 여성농어업종사자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큼
  - 농어촌 지역에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흡함
  - 특히 여성고령농어업인이 증가되고 있어 의료비 지원, 생활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함

### ■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여성이 대다수인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 최저임금 이외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
  -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중 성희롱 등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은 계속 확대되고 그 요구도 폭발적일 것임
  - 사회서비스 시설종사자들 또한 저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에 내몰려 있음
  -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정책이 시급히 요구됨

## 나. 관계계획 검토

###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추진과제

####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여성분야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내실화
  - 성매매 예방 국민의식 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전국적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 폭력방지 중장기계획 마련
  -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령 개선 과제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교육
  - 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 피해자와 가족 보호·지원 강화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 시스템 확대 및 내실화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조사 등 종합평가체계 구축 및 정기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재사회화



-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 성범죄자가 출소 시 출소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 추진
-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 현행 법령상 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친고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
-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긴급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성희롱 예방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성희롱 금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 성희롱 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추진 및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 강화
  - 성별통계 생산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 검토의견

-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선정하고 편성하였음
  -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전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향유하여야 함에 의미가 있음
- 여성인권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의 강화,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참여권의 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2) 충남 여성정책 5개년 계획(2011~2015)

### ■ 비전

- 함께하는 평등사회, 여성이 행복한 충남
  -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일구어내고 이를 통해 여성가족, 도민이 모두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고자 함

### ■ 정책목표

- 첫째,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환경 구축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함
- 둘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자 보호, 장애인 권익증진, 취약계층 및 소수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함
- 셋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충청남도 도정의 실질적인 성 주류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평등 문화 확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통합적 여성정책으로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조성함

### ■ 핵심영역 및 정책과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활동 등 여성일자리 확대
  - 여성의 평생 직업능력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교육기회 제공
  -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확대
  - 중앙과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여성의 정치·사회·문화 활동 증진
  - 여성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기반 확대
  -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 역량강화와 평생교육기반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여성교류협력 강화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증대와 지위·권리 향상
  - 차세대 여성농업인 인력육성과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 생애주기별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증진
-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인권보호
  - 성,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인권보호체계를 구축
  -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통한 성매매방지 정책 일관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및 사회적 의식제고
- 취약계층·소수자의 복지 및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 기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와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인프라 확충
- 일·가정 양립지원 환경 구축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
  - 가정내 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직장여건 개선과 사회환경 조성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성인지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 여성정책 추진기구 강화 및 여성정책협력체계 구축
  -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여성위원, 여성정치인의 체계적 육성, 관리
  - 대상별 성평등 교육 확산을 통한 평등문화 확산
-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조성 및 지원
  - 여성과 가족이 살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 ■ 검토의견

-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여성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선 5기 도정 출범에 따른 여성정책의 방향성과 다양한 정책요구를 반영한

충청남도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음

- 충청남도의 향후 5년간 여성정책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남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점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였음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고를 위한 정책이 미흡함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 다. 기본방향

### ■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인식이 도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 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성차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정책개선안들이 환류되어 정책체감도를 높여야 함
-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서는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므로 항시적이고 예방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및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업, 인신매매 등과 얽힌 사회구조적인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제고하고자 함

### ■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성소수자의 보건·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을 높여야 함

- 여성소수자들은 여성이면서 소수자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일 가능성이 높음.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마을단위에서의 보호체계가 필요함

### ■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

-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정규직, 좋은 일자리 중심의 제도화된 일·가정 양립제도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취업지원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재산권,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고해야 함
-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열악한 노동환경분야이므로 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히 요구됨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양성평등인권교육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으로 가부장성이 강하고, 대중여성들, 도민 전반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음
  -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이므로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함
  - ‘다름’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체계 필요함
  - 양성평등인권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정책과제로 개선이 필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 구체적, 단계적으로 실시
  - 인권교육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0		20	30	30	30
국 비						
도 비	110		20	30	30	30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성별분리통계 구축 · 생산**

• 배경 및 필요성

- 성별분리통계는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이며,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임
- 여성의 현실과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의 구축은 중요한 요소임
- 도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성별분리통계 구축 사업이 필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정책기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등 성별통계 여부 검토
- 각 부문별 주요통계 수집·정리
- 정책(사업)관련 성별 수요차이 분석 및 제시
-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시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	10		10		10
국 비						
도 비	30	10		10		10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안전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마을단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서울 은평구와 중구 2곳에서 마을단위로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 경찰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적, 정신, 발달 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마을의 부녀회장, 이장 등 1:1 상담 및 지속적인 가정방문 등 보호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마을주민, 교회, 경찰, 지구대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 안전망을 강화
  - 마을단위에서 멘토링 시스템 관리 및 인권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 사후관리 추진
  - 가정폭력, 성폭력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연계,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0	32	32	32	32	32
국 비	80	16	16	16	16	16
도 비	80	16	16	16	16	16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미혼모부자의 자립을 위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혼모부자 구성원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심리적 고민 상담과 양육정보 교류 등 소통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
  - 사회적 낙인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기 쉬운 미혼모부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
- 사업개요(지속사업)
  -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사업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45	49	49	49	49	49
국 비	122.5	24.5	24.5	24.5	24.5	24.5
도 비	122.5	24.5	24.5	24.5	24.5	24.5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5. 이주민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 ■ 입국 전 정보 제공 미흡

- (노동자) 입국 전 한국과 작업장,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
  - 한국의 직장이나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바로 시작함으로써 산재위험이 높음
- (결혼이주여성)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중매업소를 통한 1(남성) 대 多(여성)의 반인권적 결혼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결혼 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남성에 대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정보가 대부분임
  - 결혼 정보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친구 소개, 지인 소개, 한국에서의 연애를 통한 결혼 등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경로는 다양해 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문화와 결혼 대상 남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부족한 형편임

##### ■ 입국 후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기본 정보제공 및 교육 부족

- (노동자)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노동자는 입국 후 3일 간의 교육만 받고, 각 직장으로 이동하여 기본적인 직업 훈련 없이 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 언어 등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여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직장에서의 작업의 미숙은 동료들의 언어폭력 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주여성) 한국의 문화나 언어 교육을 하여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의 미비하여 결혼 후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함

## ■ 한국생활에서의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민간 프로그램 부족

- (노동자) 임금체불, 작업장에서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 및 민간단체(NGO)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제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식적인 지원과 도움을 얻지 못하고, 본국 출신자들의 모임 등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국의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주여성)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민간 프로그램이 부족
  -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의 문제나 개인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 상담원들의 경우 상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되어있지 않고, 통역 과정에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개인 신상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 (공통)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개인적이고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일 자리를 옮기고,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주민들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출신국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이주민들의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시간, 언어 소통의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편임
  - 농어촌 지역의 이주민들과 출신국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한 이주민들은 사적 네트워크에도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 적응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부족으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료급여 등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사전공지·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생활에서 이의신청사항이 있다 해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정보가 부족함
- 공무원들은 해결책을 알려주기 보다는 “이래서 안 됩니다” 를 먼저 설명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체제의 습성상 공무원의 말을 100%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 북한체제에서의 수동적 생활자세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함
- 지역 하나센터의 복지사들은 법률·행정사항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센터를 통한 체제·생활적응에는 한계가 있음

## 2)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 ■ 기본적인 생활환경 보장 미흡

- (노동자 공통) 기숙사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음
  - 심한 경우 한 컨테이너를 6명의 노동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여, 기본적인 숙소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기숙사 사용료를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음
  - 컨테이너를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기세, 수도세, 기숙사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음
  - 기숙사의 경우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 제한 등의 문제 등으로 기본적 주거권의 침해 심각함
  -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기숙사 제공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해야 하므로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됨
- (여성노동자) 공동화장실 사용, 난방 제한, 온수사용 제한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비 취약 등 여성의 안전 고려하지 않는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음
- (농어촌노동자) 농어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기숙사로 비닐하우스를 제공 받는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음

### ■ 질병 치료의 어려움으로 건강권 침해의 가능성 높음

- (공통) 이주민의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 제도를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건강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음
  - 이주민들은 아픈 곳이 있어 병원을 찾아도 정확한 증상을 얘기할 수 없고, 진료의 내용을 알기 어려움
  -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보건소 등의 공공 진료시설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설 진료소의 위치로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보건소 등의 공공진료시설의 경우 통역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통역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 민간기관의 통역에 의존하여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형편임
- (결혼이주여성) 임신 및 육아에 필요한 필수적 진료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움
- (미등록 노동자) 산재 등 건강 이상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미가입한 관계로 치료비용이 상승하여 많은 경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이주민들의 체류의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함

-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1년~2년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높음
  -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간마다, 혹은 상담사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제도의 불안정으로 체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함
  - 다문화 가족 지원은 가족단위의 지원체제이기 때문에 사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이혼 등의 경우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이에 따른 체류의 불안정성이 존재함
- (노동자) 고용허가의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절차가 복잡하여, 재입국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자발적으로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 기본적 노동권의 침해 문제

- (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 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최장 5년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근로기간을 확보는 고용주의 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노동행위를 견디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부당 노동행위로 직장을 옮기고자 할 때 고용주가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주의 허가를 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자) 전문 직업교육이나 직업정보의 제공이 부족하여 이직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 있음
- (미등록 노동자) 자발적인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 이직, 체류기간 5년 이상, 39세 이상의 사유의 노동자들이 계속 한국에서 근로를 원할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고, 자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이 미등록 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 미등록 상태의 노동자들은 신분상 작업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의 차별이 존재하고, 신분의 취약성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임금과 노동조건
  -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탈주민에는 주말/야근 기회를 주지 않음
  - 기업주가 이탈주민의 수습기간 동안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
  - 취업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 ■ 경제적 어려움

- (노동자) 임금체불, 산재 등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 임금 미지급의 문제는 거의 없으나, 임금 체불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산재 등의 문제로 질병 상태에 있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산재로 인한 장애발생시 장애심사가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닌 본국 기

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고, 또한 산재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이중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음

- (미등록 노동자) 신분상의 이유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비해 빈곤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미등록 노동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금 수령, 송금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브로커를 통한 송금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행
  - 숙소를 자가 비용으로 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용의 증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 (결혼이주 여성) 중매업체에서 얻은 정보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한국사회 적응 교육 및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취업의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많으나, 직업교육,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부족
- (북한이탈주민)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중국에 있는 가족들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할 경우,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

## ■ 언어폭력 등 폭력에의 노출

- (공통) 육체적 폭력의 문제는 많이 줄었으나, 상시적 언어폭력에 노출
  - 직장이나 가정에서 상시적인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나, 언어 문제로 대응이 어려워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여성 이주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 문제가 발생 시 피해 여성이 모든 잘못이 이주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음
- (결혼이주여성) 가정 내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등의 문제로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가 많음

## ■ 인종차별 등 편향적 시각의 문제

- (공통) 이전과는 다르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는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은 겪고 있음
  - 일부 노동자들은 택시 이용 시 폭언과 부당한 요금 청구의 경험 토로
  - 많은 이주여성들은 준 생활공간인 마트, 목욕탕 등에서 공공연한 인종 차별

을 경험

-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다문화’ 라는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을 차별하는 용어로 사용됨. 선생님들도 무의식적으로 “야 ‘다문화’ 손들어 봐” 와 같은 차별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열등 국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빈번함
  - 아파트에서 카드와 같은 여가생활시에도 주민들의 방해와 “시끄럽다” 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을 “다문화 가정,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고 속이기도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웃주민들의 몰이해와 냉대로 많은 외로움을 느낌

##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 침해

- (공통)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박탈됨
  -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면 절차가 복잡함 초청이 어려움
  -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가족의 초청의 경우 이주민의 가족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음
- (공통) 이주민 본국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가 일상적임
-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가 적발될 경우 수갑을 채우고, 개인적인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고 있음
  - 상시적 단속으로 기본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 (농어촌 노동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슬람계 노동자가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코란과 여권을 압수하고, 고용주에 의해 특정 종교를 강요당하는 사례 존재
  - 종교적 금기(금식 기간, 음식)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결혼이주 여성의 의사 반영 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
  - 다문화지원센터의 정책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좋은 정책은 담당직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소수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등의 특혜 제공
  - 농어촌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공공행사에 지나치게 동원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 교육권

- (북한이탈주민) 학교에서의 학년차이로 교육받을 권리에서 침해됨
  - 예컨대 북한에서 초등교육 3년을 졸업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초등 6년생의 나이가 되어, 3년 어린 동생들과 같이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나. 관련계획 검토

### 1)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주요 추진과제

####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찾아 가는 서비스 확대
- 이민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체류허가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 이주민 문화 지원

- 이주민의 문화지원정책의 사회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현지사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 ■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 교육 실시

-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11개 국어) 긴급 상담 실시

## ■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예방 홍보
- 이주여성 폭력 피해 재발 방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 개선
  - 영농정착지원, 지방거주 장려금 제도 등 취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종 정착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거주지 초기 정착 지원 강화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 탈북여성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내실화
  -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 부적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입국초기 적응교육 강화
  -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체제 강화

## 2) 국가 인권위원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배경

-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있음
-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됨

###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분야 및 과제

-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
- 7개 영역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 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
  -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임
  -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

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함

-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업이 가장 큰 문제임
  -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 2011년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임
  -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모니터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 예정임

〈표 4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주거권 개	I-6-1. 주거자유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모성 보호 보장
	9.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 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해외투자기 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예술흥행공 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결혼이주 민의 인권 보호 강화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1.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2.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3.가정폭력으로 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산국 경험을 살릴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 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 무 면제
IV.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 의료조치 교육 강화
	3.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 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 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제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 서비스 확대

## 다. 기본방향

### 1)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 입국 전후의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일을 시작하여 산재위험이 높음
-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중매업소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한국 작업 환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 사회적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 제공

- 이주 노동자의 경우 기본 교육 없이 작업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한국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교육은 직장 내 폭력 예방에도 효과적임
- 충분한 한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정착에 도움을 제공

#### ■ 한국에서 생활에 문제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에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상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역량을 강화
  - 상담을 위한 통번역지원시스템 강화
- 출신국의 네트워크는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 2)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 ■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을 위한 노력

- 공장노동자의 부적절한 숙소(컨테이너 박스 등), 과당 요금 징수(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난방 및 온수 사용 제한 등의 기본적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음
- 여성노동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 주거권 이외에 경비 등의 여성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숙소 제공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
- 특히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숙사로 비닐하우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있음
- 충남 내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이주여성 쉼터를 경유(퇴소)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

### ■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

- 이주민에 대한 의료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의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필수적 진료나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한편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음

- 기존의 의료제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번역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및 노동권 보장

- 이주여성의 비자문제 및 노동자의 고용 허가기관 이후의 복잡한 재계약 절차의 문제로 체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됨
  - 특히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문제와 결합되어 의도하지 않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발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음
-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이주민의 체류안정성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 ■ 이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 이주민의 경우 임금체불, 산재, 신분상의 이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인권을 보장 받는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함
  -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나 산재 등의 문제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취업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

- 육체적 폭력의 문제는 많이 줄었지만, 언어폭력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마련
- 종교적 자유의 침해(특히 이슬람) 문제 등을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정책을 마련
-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정책을 마련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1577-5432(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통합 설치하고 운영하는 콜센터의 대전·충남지부가 2014. 4월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센터의 운영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운영 형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와 긴박한 상황의 예방적 차원에서 마을 단위(동장, 이장, 부녀회장 등)의 일차상담과 이를 센터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강화가 보다 효율적일 것임
- 사업개요(지속사업)
  -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홍보와 안내의 강화 필요
  - 상담을 긴급/일상으로 구분하여 일상은 마을 단위 일차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센터는 긴급 상황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역할 전환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중앙정부 건의사업

### ■ 인권 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결혼 이주여성 상담의 경우 상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주여성의 인권적 차원보다는 가족유지의 관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
  - 통역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됨
  -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도 요구됨
  -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 강화도 필요
- 사업개요(신규사업)
  - 상담자와 통역자의 인권차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족 남성의 상담 확대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상담 확대 강화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0	20	20	20	25	25
국비						
도비	110	20	20	20	25	25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관리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 계약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 중개업체에 대한 인권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중개업체에 대한 인권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 내용도 실질적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

- 담당부서

- 중앙정부 건의 사업

## ■ 다문화 가족 어울림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 가족 어울림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벤트성 사업의 성격임
- 이벤트성 행사에서는 이주민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이주민을 동원하는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이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일반 주민이 어우러지는 실질적 행사를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630	1,118	1,118	1,128	1,128	1,138
국비						
도비	1,128	224	224	226	226	228
시군비	4,502	894	894	902	902	910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민 사업의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용 대상자가 편중 혹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수혜(예컨대,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공평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
- 사업개요(지속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센터의 기능을 인권적 측면에서 확대
  - 센터의 평가 시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845	3,529	3,529	3,529	3,629	3,629
국비	12,490	2,470	2,470	2,470	2,540	2,540
도비	1,608	318	318	318	327	327
시군비	3,747	741	741	741	762	762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종합적 이주민 자립역량 강화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이주민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이주민의 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직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사업개요(지속사업)
  -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취업지원 등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및 대학 학위취득 지원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850	150	150	150	200	200	680	85	85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110	20	20	20	25	25	-	22	88
결혼이민자 활용 외국어 교육	1,382	270	270	270	286	286	-	415	967
결혼이민자 학위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학위취득 지원 : 도와 순천향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14.8.1.)이후 논의 예정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등 단계적 성장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

- 사업개요(지속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805	549	549	549	579	579
국비	1965	385	385	385	405	405
도비	251	49	49	49	52	52
시군비	589	115	115	115	122	122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강화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들이 언어소통 및 생활문화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이 어려워 이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충남도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중 이주여성 쉼터 (1차적 생활·회복 지원)는 운영 중이지만, 이주여성 그룹홈(2차적 주거 지원)은 미설치 상태(전국 2개소 운영 / 서울)
- 사업개요(지속사업)
  - (이주여성 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및 동반아동의 긴급피난, 일시보호, 상담·의료·법률·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주 여성 쉼터	계	719	141	141	141	148	148
	국비	505	99	99	99	104	104
	도비	107	21	21	21	22	22
	시군비	107	21	21	21	22	22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지역 균형을 맞춘 외국인 노동자 보호단체 지원 및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천안과 아산 등 북부권 도시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단체가 운영되어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임. 이들 단체에 대한 계속적 지원 필요
  - 그러나 충남 중서부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단체가 없어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조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도모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농어촌지역의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도모
- 사업개요(지속 및 신규사업)
  - 현재 지원중인 천안 및 아산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상담운영비 지원



-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서천, 홍성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담운영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외국인인력 센터 지원	200	40	40	40	40	40	-	100	100
아산외국인노동 자지원센터 지원	400	80	80	80	80	80	-	100	300
서천외국인지원 센터 지원	80	-	20	20	20	20	-	80	-
홍성이주민센터 지원	60	-	-	20	20	20	-	60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을 지역, 유형, 국적, 성별로 조사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자료에 불과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개요(신규사업)

- 충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실태 조사
- 조사 내용은 기존 조사에 생활, 인권, 고충, 복지, 의료, 노동환경 등이 포함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내용을 기초로 정책을 수립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

- 배경 및 필요성
  - 이주민들도 한 인간으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이주노동자들도 일정 기준을 정하여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이주여성들의 가족 초청은 자녀돌보는 일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경우 가족 초청을 불법화 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중앙정부 건의사업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로서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개정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및 사후관리 접근성 제고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착 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
- 사업개요(지속사업)
  - 운영기관 : 2개소(천안/서북부 관할, 공주/중남부 관할)
  - 첫 거주지 편입자의 초기집중교육 및 사후관리

단계	교육과정	교육(사업) 내용
1	초기 집중교육(4주)	진학, 가족관계, 취업, 건강 등 일상생활
2	사후 지원(상시)	직업훈련·취업, 정기 모임지원 등
3	지역주민 교류(상시)	친목모임,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65	233	233	233	233	233
국비	1,165	233	233	233	233	233
도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 건강한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구성원으로서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개요(지속사업)
  - － 사업량 : 연2개소(일자리창출형 1, 풀뿌리형/마을기업 1)
  - － 육성분야 : 대북지원물품 생산업체, 지역특산물 공동생산법인
  - － 채용대상 : 북한이탈여성, 영농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	10	10	10	10	10
국비						
도비	50	10	10	10	10	10

- 담당부서
  -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 배경 및 필요성
  -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와의 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 공직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
- 담당부서
  -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의 고통과 정신·신체적 외상 후 스트레스의 치료를 통하여 건강 회복과 조기 정착의지 부여
- 사업개요(지속사업)
  - －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상담, 건강검진, 맞춤형 진료, 치유교실 등을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50	30	30	30	30	30
국비						
도비	150	30	30	30	30	3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 사회참여 동기 부여가 필요

- 사업개요(지속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함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행사 자원봉사,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역할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0	15	15	30	30	30
국비						
도비	120	15	15	30	30	3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과정 적응 및 문화의 동일성 회복을 통하여 통일세대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사업개요(지속사업)

- 비재학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학교에 상급학교 입학 검정고시반 운영을 운영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5	3.5	3.5	3.5	3.5	3.5
국비						
도비	17.5	3.5	3.5	3.5	3.5	3.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 이후 상이한 교육내용으로 어려움을 겪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지역내 대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지도, 상담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5	3.5	3.5	3.5	3.5	3.5
국비						
도비	17.5	3.5	3.5	3.5	3.5	3.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 캠프

- 배경 및 필요성

- 어린 나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청소년은 새로운 체제를 접하며,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북한이탈청소년과 우리 학생과의 마음의 벽 허물기, 자존감 회복 등 소통과 역량향상을 위한 행사 개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0	10	10	10	10	10
국비						
도비	50	10	10	10	10	1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적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

- 사업개요(지속사업)

- 행정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운영을 개편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을 활성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6. 농업인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사회적 기반

##### ■ 농민·농촌·농업의 가치 인식 부족

- 농민·농촌·농업은 많은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 도시와 공업의 확장은 생명의 토대인 흙을 죽이지만 농촌의 농민들은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국토를 가꾸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농민은 못 배운 사람들이며, 농촌은 투박하고 못 사는 곳이며, 농업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에 대해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종종 나타나는 농민, 농촌, 농업에 대한 편견과 폄훼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동시에 농업 관련 단체와 정부기관이 협력해 이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의 농민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2%, 우리나라는 현재 6%를 차지함. 또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단순히 인구비중이나 GDP 비중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님. 미국의 경우 전체인구 가운데 농업과 식품관련 종사인구가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 또한 농업인구는 감소해도 농업, 식품, 음식서비스업 관련 사업은 확대되고 있음

##### ■ 표준적 삶을 누릴 보장체계 미흡

-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이후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됨
  - 따라서 농업직불금의 확대 또는 기본소득과 같이 농촌주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농촌의 과소고령화로 도시에 비해 복지, 교육, 문화수준이 현격히 낮은 상태임

- 도시와 농촌의 사회복지서비스 비교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기준을 설정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지역개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참여권 미흡

-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지역농민의 감시 및 심의권이 사라지거나 배제되고 있음
  - 현재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근거해 크고 작은 개발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행위들로 인해 우량의 농지들이 잠식되고 있음
  - 특히 농지개발의 경우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체의 폐기물과 축산오폐수 등의 관리부실과 한계로 농촌에서의 환경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행정기관에서 지역의 환경오염과 피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 주도의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청양군 강정리에서는 2001년 석연치 않은 허가 과정을 통해 석면광산 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10년 넘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예산군 궤곡리의 산촌마을은 사기업의 3만여 평의 부지에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둘러싸고 고통을 받고 있음

## ■ 향토지식과 지역문화 퇴조

- 농촌의 인구감소와 현대적 규범으로 인해 전통(향토)음식, 전통음악, 전통(민중)의학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
  -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향토지식과 문화자원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 향토지식에 대한 특허로 인해 다른 지역이 피해는 입는 경우도 있음
- 농업의 고도산업화와 다국적 기업의 농업시장 진출로 GMO 종자 등이 지역의 농업에까지 침투해 농민들이 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초래됨
  - 현재 우리나라 종자시장은 대부분 외국계 종자회사들에 의해 잠식된 상태여서 농민들은 종자선택에 대한 자유권이 거의 없음
  - 특히 이들 회사의 종자들은 다수확과 고품질을 홍보하지만 실제 비료, 농약 등 화학제를 필요로 하고 2대에서 종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농민



들은 외국계 종자회사에 종속되어 가는 실정임

### ■ 식량자급률 하락 및 토지소유권 약화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현재 약 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생존권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의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규정해 농업을 지켜야 할 것임
-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권력기관과 자본의 토지침탈은 심각한 상황임
  - 농민들에게 농지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터전이자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농지의 소멸은 곧 농민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해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하며 대농 위주보다는 소농보호 위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 농림사업 관련 정보 전달체계 미흡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각종 시책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장의 농민들은 정보를 몰라 사업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정부의 정책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손쉽게 이해하고 시책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 개발이 필요함

### ■ 농산물가격 결정권에 대한 농민의 참여권 부족

- 농산물은 농민들이 생산하지만 가격은 정부와 시장에서 결정함. 하지만 많은 경우 도시소비자의 편의 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항상 불합리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농산물 가격결정체계에서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또한 각종 재해 및 개발에 관한 보상체계에서 농민들이 배제됨으로써 낮은 보상가격을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에서의 농민 참여 확대가 필요함

### ■ 포괄적 정의(justice)문제로 농민인권문제 승화 필요

- 농민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농민권리의 문제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권, 환경권, 식품안전권, 식량주권, 평등권 등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포괄적 정의의 문제로 확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민인권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시혜적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임

## 2) 실질적 기본권 보장(UN농민인권선언 결의(안)의 주요 규정 의거)

### ■ 농민의 권리

- 남녀 농민의 동등권
  - 농업 및 가사노동의 분담, 소유권에 대한 분담이 필요함. 특히 여성농민의 노동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책 구상, 이행, 모니터링 과정 참여권
- 식량주권 요구 권리
  - 농민은 국가는 적정한 수준에서 식량자급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 ■ 생명권과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 존엄하게 살 권리
  -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
  -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 보장과 농업직불제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 의료, 교통, 통신, 주거 등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 농화학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여성농민이 폭력과 통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토지와 영토를 보존할 권리

-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권리
  -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고 부채지주는 억제할 권리
- 어떤 이주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일방적 토지 및 농지개발로 인해 강제적 이주를 거부할 권리
- 토지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 ■ 종자, 전통지식, 실행에 관한 권리

-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
  - 정부 및 공적기관에서의 토종종자 보호와 보급 확대를 요청할 권리
-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
  - 다국적 기업, 대기업의 농업 진출, GMO 농작물의 확산을 억제할 권리
-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 지역 고유의 영농기술과 자재를 보전할 권리
- 영농방식과 기술을 선택할 권리

### ■ 농업생산 수단을 가질 권리

- 영농자금과 농자재를 획득할 권리
- 적절한 기술과 도구를 획득할 권리
  -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영농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
- 지속가능한 관개와 농업생산을 위한 수리권을 가질 권리
- 정부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참여할 권리
  -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정보획득의 권리

-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 도구와 방법의 다양화로 필요한 농업정보를 적절히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 유전자 보호와 관련해 국내외 수준에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 지역 토종종자가 보호되고 다양한 생물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권리

- 전통적인 지역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권리
  - 전통시장과 지역 내 직판장의 확대에 의해 직거래 활성화 필요
-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권리

- 가격결정 기제에서 농민의 참여권 확대와 농민 조직화를 통한 가격협상력 증대
-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획득할 권리

### ■ 농업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

- 농민의 문화와 지역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
- 농업에서 지역지식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권리
  - 지역고유의 농업과 생활양식을 보전하고 전통적 농업유산을 보호받을 권리
-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
  - 농지 및 토지개발 시에는 토지적정성심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차단

### ■ 생물다양성을 지킬 권리

-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을 거부할 권리
  - 특히 GMO 농산물의 개발, 유입, 확대를 차단
- 지역 농민공동체 소유의 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 정부의 농민단체 지원으로 지역보장정책의 증진 및 보호받을 권리
  - 농민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복지정책의 확대

### ■ 환경을 보존할 권리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 정부의 지나친 개발행위와 환경오염 유발사업의 진입을 거부할 권리
-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

### ■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 결사의 자유와 의견을 표현할 권리
- 자신의 이해를 위해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화 되지 않을 권리
-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행동에 호소할 권리

### ■ 정의에 접근할 권리

-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
-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 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제도 등 농민들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증대

## 나. 관계계획 검토

### 1)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 ■ 비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기초 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나가 찾고 살고 살고 싶은 농어촌

#### ■ 부문별 목표

- 농어민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강화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을 창조
-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 조성
-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조

#### ■ 추진전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대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지방계획 내실화

## ■ 검토의견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인권의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강조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서비스 기준 설정, 지역이 주도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지방정부의 계획 및 추진체계 강화를 강조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범 부처 차원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가 필요
  - 현재 농특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2) 2020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종합발전계획(2009-2020)

- 농어업 미래를 짊어질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
  - 후계인력 육성, 외국 및 이주여성농업인 체계적 지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 인력절감형 영농기반 해결
  - 농자재·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 효율적 관리
-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
  - IT·BT활용 미래농업육성, 로열티 절감 위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 해외농업 개발, 연구소와 시험장의 R&D 강화
- 산업화 역군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 사회안전망 구축, 정주기능 강화, 면소재지 중심 농촌인프라 구축, 주민 건강 관리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체험마을 육성, 휴양시설 확충, 관광산업 발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 탄소흡수원 육성, 녹색경관조성, 에너지 사용 개선

### 3) 충청남도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 ■ 발전 비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충남 농어촌 구현
  - 누구나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경쟁력 있고 다양한 농어촌산업이 활성화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공간이 조성되어, 누구나 찾고 살고 살고 싶은 농어촌

#### ■ 발전 목표

- 편리하고 건강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
  - 누구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구현
-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 활성화
  - 기존 농어업의 혁신과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로 21C형 고부가 농산업 다각화를 실현
- 지속가능한 농어촌환경·경관 조성
  - 편리하면서도 자연성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의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공간의 유지·발전

#### ■ 추진전략과 주요 시책과제

- 보건·복지 증진 :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강화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 확보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을 창조
  -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활성화 촉진
  - 농어촌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정주공간 조성
  - 지속적인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문화여가 여건 향상 :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는 품격있는 농어촌 조성
  - 생활친화형 문화여가인프라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확대
  - 다양한 지역문화의 창출 및 활성화
- 환경·경관 개선 :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
  - 농어촌 경관자원의 보전·정비·창출
  -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농공간 조성
  - 에너지 순환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지역발전 역량강화 :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화
  - 농어촌 주민과 마을 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 농어촌지역 핵심리더 육성 및 체계적 관리
  -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체계 정착을 위해 자문컨설팅 지원 내실화

## ■ 검토의견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 실행 지표 설정
  - 농업인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관련 시책과제들이 대부분 기존의 사업들 가운데 선별해 정리한 수준
  - 인권의 관점에서 중요한 보건·복지 증진과 문화여가여건 향상 부분에서는 미흡



## 다. 기본방향<sup>4)</sup>

###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반 구축

-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담당하는 먹거리, 문화, 환경,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의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 ■ 표준적 삶을 누릴 기반 구축

- 현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50%로 하락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가 점점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들 직불금은 농업인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라도 그 외 농촌주민에게는 별다른 혜택임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음으로 중요한 격차문제는 교육과 복지부문의 격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폐교가 늘어나 농촌지역 학생들은 통학이 더욱 불편함
  - 이런 학생들은 더욱 도시로 이동해 농촌지역 교육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
- 농촌의 복지문제는 도시와는 달리 과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주민의 노령화로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나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 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기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
  - ※ 옥천군의 경우 면내 순환버스(마이크로버스) 운행 결과 마을일자리도 창출되고 농촌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됨

### ■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참여와 감시체계 구축

- 농촌의 환경과 지역공동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4) 기본방향은 유엔인권위원회 농민인권선언(안)(2013년 6월 20일 발표)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 지역의 환경보존체계에 참여권 보장

- 현재 농촌생활권 환경보전에서 농민이 배제되고 있는 상태임
  -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민 참여가 필요하며, 개발에 관한 정보공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감시 및 조정 역할도 고려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면 정부의 지원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함

## ■ 향토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존 및 유지, 발전체계 구축

- 농촌지역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는 농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존, 유지, 발전 방안이 필요
  - 예를 들어, 향토(전통)음식과 전통음악, 전통의학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적 가치이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이러한 지역지식과 문화가 유지되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 특허나 상표등록 등을 출원해 다른 지역의 전통지식과 문화가 쇠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향토(전통)음식, 전통음악, 전통(민중)의학은 시군단위 행정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하여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 토지를 가꾸고 보존할 권리체계 구축

-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져야 하며, 대농 위주의 정부정책에서 소농들이 토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정책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 우리 토양과 환경에 적합한 농사를 지을 권리 보장

- 최근 외국계 종자회사들은 GMO 종자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
  - 따라서 종자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토종종자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만큼 우리 고유의 종자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기계 등은 개별 농가가 구입하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농기계 관리가 필요

## ■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 기반 구축

-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많은 기관에서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정보를 몰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 주된 원인은 정부정책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해의 정부시책사업을 책자로 만들어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을에 비치해 두면 농촌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시 범위가 좁고 농촌에 전문 관리인이 없다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 농산물 가격 및 보상체계에서 농민참여의 확대 실현

-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도시소비자 위주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결정체계에서 늘 배제됨
-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산물과 재산피해에 관한 보상체계 역시 도시소비자에 비해 농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상가격은 대부분 농민의 기대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수매가 등 농산물가격 결정 시 농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계상 시에도 농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 농민인권을 포괄적 정의(justice)문제로 승화

- 농민인권의 핵심은 공유자원(토지 등)과 생태환경자원(물)을 국가와 자본(기업)이 독점해 소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임
- 근래 들어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 유통 등으로 인해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농민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민인권을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정의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농민은 국토를 보호하고,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아가 직업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충남도 내외 대도시지역에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수반한 이벤트를 개최
  - 2014년부터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고향마실·여름휴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체험마을 주민들과 도시민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
  - 언론·방송과 동영상 등을 통해 농민·농촌·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적극 홍보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10	280	280	350	350	350
국비						
도비	1,610	280	280	350	350	350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적 혜택 기회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소외지역 농촌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의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소외 농촌지역에 우선 배정함

- 소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발적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 경우 소외지역 주민들도 문화적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음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100	1500	1500	1500	1800	1800
국비	5,670	1,050	1,050	1,050	1,260	1,260
도비	810	150	150	150	180	180
시군비	1,620	300	300	300	360	360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과소고령화 되고 있어 출행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소외지역 농촌주민의 교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지속사업)

- 최근 산간 오지 등 소외지역 농촌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등 광역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경우 아산시(마중택시)와 서천군(희망택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당진시(대호지면)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타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수요도 기존의 장보기와 병원진료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으로도 확대가 필요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500	300	400	500	600	700
국비						
도비	450	30	60	90	120	150
시군비	2,050	270	340	410	480	550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각 시군

## ■ 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도내 많은 산업단지와 축산시설의 유입으로 지역 내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농촌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역 내 환경문제에 관해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민간 및 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지속사업)
  - 현재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와 창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관」 제도를 적극 활용함
  - 농촌지역 면단위에도 최소 1명의 환경감시관을 두어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함
  - 현재 충남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환경운동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를 강화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40	180	180	180	200	200
국비						
도비	282	54	54	54	60	60
시군비	658	126	126	126	140	14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시군

## ■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다양화, 다문화, 다분화 되어 가는 농촌사회의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해를 증진해야 함
- 사업개요
  - (농민)인권의 개념 및 내용 교육
  - 농업인 부부 양성 평등 교육(노동 및 재산권 등)
  - 농촌지역 내 결혼이주자 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교육

- 농업생산, 토지 및 주거에 대한 분쟁 사례와 해결에 관한 교육
- 재해 및 재난 시 권리 행사 및 보상 방법 교육
- 농민인권 관련 세계적 흐름과 활동 사례 교육
- 기타 농민인권 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 ※ 마을변호사제(법무부) 연계 교육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7. 어업인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사회적 기반

##### ■ 제한적인 접근성(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 수산물 관련 직불제 실시 등으로 어업인의 정주여건 보장 필요
  - 현재 조건불리지역(도서)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 중이나, 연안지역의 오지어촌에 대한 직불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어촌은 집과 집사이의 간격이 넓고, 도심부와 멀어 고립성이 있음
  - 주민의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인권 침해

- 불법어업 등의 단속 시,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 단속 공무원과 어업인 간의 갈등 발생으로 어업인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큼
- 어업권 취득에 따른 행정기관과 협력기관, 어업인간의 갈등 발생
  - 어업권 취득시 협력기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수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함

##### ■ 어촌주변 개발, 어업인간, 어업인과 타지인간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 인근지역 화력발전소와의 갈등으로 어업인의 생존권, 인권에 대한 우려
  - 태안, 보령화력의 온배수 문제로 어업인과의 갈등이 계속됨
  - 반대집회, 이의제기 등에 있어 어업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됨
- 유류사고 이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어업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음
  - 유류사고 이후, 어업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심적·물질적 어려움 산재해 있음
- 농업과의 비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음
  - 영어자금 대출이 매우 부족한 반면, 영농자금 대출은 수월함



- 영어자금 지원에서의 불평등 (영어자금 이자 3.0%, 영농자금 이자 1.5%)
- 연근해 어선에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위험이 상존
- 어촌계의 폐쇄성으로 타지인의 귀어귀촌에 어려움이 발생함
  - 어촌계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어촌인구의 증가가 가능함
  - 폐쇄성의 원인은 재산권 분배, 입어료 문제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같은 어업인 사이에도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어촌계간 갈등, 어촌계와 어선업자들간 갈등, 어선업자들간 갈등 존재
  - 특히, 공유수면을 둘러싼 어업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 어업인 인권교육이 전무

- 어업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전무하므로, 어업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 ■ 오지 어촌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필요

- 도서를 포함한 오지 어촌주민의 지속적인 의료지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현재 도서만 운행하고 있는 병원선을 연안 어촌계로 확대하고, 도서지역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선을 운행
- 현재는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조례」와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도서지역에 한하여 병원선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음

## 2) 실질적 기본권

### ■ 제한된 주거권

- 어촌에 고령인이 많으므로, 사랑방을 조성하여 고령인들이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 ■ 위협받는 건강권

- 어촌의 의료시설 부족
  - 어촌인구가 고령화 된 것에 반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병원선도 도서지역만 순시하기에 연안 오지어촌의 경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임

## ■ 부실한 교육환경

- 어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도시의 아이들은 컴퓨터, 놀이터 등의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어촌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촌 아이들이 놀 곳, 지낼 곳이 매우 부족함
  - 방과 후 교육, 스쿨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함

## ■ 부족한 자립생활지원·활동

- 지역 어촌계가 자립하고, 어촌리더가 양성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 확대가 필요

## ■ 낮은 소득(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

- 어업경영자·선주들의 경영피해 및 위험 산존
  - 어업고용인 내국인 임금 300~600만원/월 수준, 외국인 200~400만원/월 수준으로 노동강도와 비례하여 높은 수준이나, 많은 어업고용인들이 선급 수취 후, 잠적하여 그에 따른 경영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어업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워 어업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어촌 근로자와 도시 근로자의 정년 비교 불가
  - 어촌에서는 근로자는 70~80대가 많으나, 도시는 60세 이상이면 은퇴자임
  - 정년의 측면에서 보면 어촌 근로자는 70~80대도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이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 ■ 부족한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 지역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여가활동 지원 필요
  - 지역마다 있는 어업인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교육, 문화의 장소로의 발전을 도모
- 과도한 노동으로 문화, 의료, 복지를 영위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

## ■ 어촌 다문화 가정의 인권 침해

-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
  - 모국방문, 자녀교육 지원 등

### ■ 제한적인 여성 어업인에 대한 교육

-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여성 어업후계자 양성, 전문적인 교육, 사회참여 강화가 필요

### ■ 무너지는 어촌의 환경

- 매년 바다를 통하여 쓰레기가 연안 및 도서 어촌계로 밀려 옴
  -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최소한 어민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

## 나. 관계계획 검토

### 1)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 ■ 비전

-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개

#### ■ 주요 활동

-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활성화
- 어촌사회의 유지·발전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검토의견

- 2007년 수협중앙회에 의해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를 위한 재단이 설립되어 어업인 인권에 도움이 됨
- 어업인 의료지원협약체결 및 경영마인드 제고,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하여 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도됨
- 어업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 기본방향

### ■ 어업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기반 강화

- 어업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권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
- 어업분야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접근

### ■ 오지 어촌의 의료 및 교육 강화

-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어촌이탈 주민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외 어업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어업인이 인권에 대한 제대로 이해로 갖추지 못한 채 수산업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예, 염전 근로자, 어선어업 근로자 등)
  - 어업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인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어업인 인권교육을 실시
  -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권감수성 교육과 사례를 통한 인권침해 사례 교육
  - 고용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 어업인 인권 외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 (가칭)충남인권센터



## 제5장

### 인권제도 정비

#### 1. 인권전담조직의 운영(안)

---

#### 2. (가칭)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





# 1. 인권전담조직의 운영(안)

## 가. 현황

### 1) 여건과 환경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관심 필요

-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우선해야 하며 다른 도민들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 인권지향적 환경 조성 요구

- 인권지향적 환경은 누구에게나 장벽과 차별 없이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의미하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차별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합적 조정과 정책이 필요함

#### ■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 인권의 가치와 문화는 인권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로써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과 도민감수성 향상, 인권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 ■ 인권관련 제도 마련 필요

- 인권보호를 위해 충청남도의 행정과정에 인권이 기반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것이 중요
- 인권행정 체계 강화 및 인권을 기반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은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도정이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시 됨

## ■ 전문 인력 및 전담 부서의 부재

- 현재 충남도는 앞서 제시된 인권의 현황과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가 부재함
-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충남도의 인권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부응한 전담조직 및 인권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음

## 2) 조직

### ■ 충청남도

- 조직
  - 자치협력팀
- 인력
  - 2명 : 1팀
- 주요업무
  - 도민인권증진 관련 업무 및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과거사, 반상회 등 중복

### ■ 서울특별시

- 조직
  - 인권담당관
- 인력
  - 19명 : 1담당관, 3보호관, 3팀
- 주요업무
  -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사향조사
  - 인권정책팀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실태조사, 인권현장, 관련제도 인권위원회운영, 기관협력, 보고서발간
  - 인권보호팀 : 인권침해사향조사지원, 시민참여배심원제, 시민인권보호관운영, 법률상담
  - 인권협력팀 : 인권교육계획 수립·시행,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강사,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도·점검

## ■ 광주광역시

- 조직
  - 인권담당관실
- 인력
  - 25명 : 1담당관, 5담당
- 주요업무
  - 민주인권정책담당 : 인권지표,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정책, 인권현장, 인권교육, 민주장정 100년사 등
  - 인권평화교류담당 :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
  -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접수·조사,
  - 5·18선양담당 : 5·18선양, 민주인권평화센터, 5·18아카이브 구축, 5·18보상관련
  - 4·19민주담당 : 4·19민주업무

## 나. 조직운영방안(안)

## ■ 1안 - 단기적 운영(안) : 담당(팀)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충남도는 새롭게 인권에 관심을 두고 정책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며,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보다는 자치행정과의 팀 단위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한 조직 확장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충남도의 인권정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며, 타 부서와의 협력과 인권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우선으로 둘 필요가 있음
- 조직운영방안
  - 자치행정과 내 인권정책담당 설치
  - 4-5명으로 조직 구성
- 주요업무
  - 인권정책수립 및 운영

- 인권정책 수립, 시행 및 모니터링
-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인권실태 조사
-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 문화행사 운영(인권 주간 등)
-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보호
  - 인권침해사향 조사
  -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 인권침해사향 접수
  - 시민인권 배심원제 운영
  - 인권 관련 법률상담 지원
- 인권협력
  - (가칭)충남인권센터 지원
  - 인권행정협력 네트워크 지원

## ■ 2안 - 장기적 운영(안) : 담당관(과)제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산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를 지나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담당관(과) 수준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이루어야 함
- 조직운영방안
  - 인권정책담당관 또는 인권정책, 3-4개 담당
  - 충남의 특징적 인권사업 전담부서 운영
- 주요업무
  -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본격적 추진
  - 일반적 인권관련 사업과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인권사업을 발굴 추진

## 다. 세부사업 및 시책

### ■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배경 및 필요성
  -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 도민의 법률접근권을 보장
  - 인권취약계층의 경우, 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신규사업)
  - 인권 관련 공익변호사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인권실태조사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역의 많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지역의 인권침해사안을 시정하고 인권사각지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가 요구됨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남도청과 산하유관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가칭)인권보호팀을 통해 접수된 사항, 인권 관련 기관·위원회를 통해 진정된 사안에 대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외주형태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인권 문화행사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보호는 인권의식이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도민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행사가 없음
  - 인권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실시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청남도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 교육청, 유관기관,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0		20	20	20	20
국비						
도비	80		20	20	20	2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인권보고서 발간

-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도의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수록 하는 기록물을 발간
- 사업내용(신규사업)
  - 기본계획의 인권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문제점, 향후 개선점 등을 매년 평가하여 수록
  - 기본계획의 인권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수록
  - 2년 주기로 발간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0			30		30
국비						
도비	60			30		3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가칭)충남인권센터 설립

-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인권증진조례 17조에는 다음과 같이 인권센터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신규사업)

- 충남도는 (가칭)충남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
  - (가칭)충남인권센터는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인권교육기능과 지역 인권단체 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00		300	300	300	300
국비						
도비	1,200		300	300	300	30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시민참여배심원제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인권사안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사업내용(신규사업)
  - 인권증진위원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배심원제를 운영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0		5	5	5	5
국비						
도비	20		5	5	5	5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인권지킴이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이미 구성된 도민참여단 105명의 인권선포식 이후 역할 부여 필요성 대두
- 사업내용(신규사업)
  - 인권지킴이단 150명 구성·운영(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 + 45명)
  - 각 지역별로 인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제보 등 현장옴부즈맨 역할 부여
  - 인권 관련 홍보활동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5	25	25	25	25	25
국비						
도비	125	25	25	25	25	25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 [가칭]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 1) 추진 배경

- 충남인권증진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기구 필요
-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을 위한 추진체 구성 필요
- 도 단위의 인권정책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상시 기구 필요

### 2) 근거

- 충청남도 인권증진 조례
  - 제17조(인권센터 설치)
-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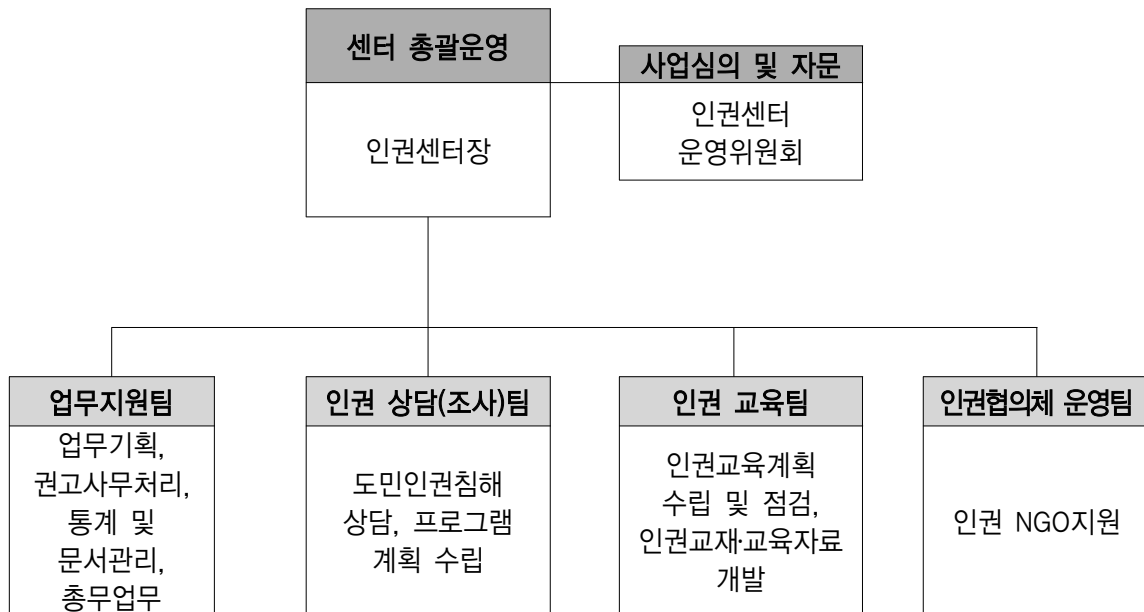
### 3) 인권센터 설치의 목적

- 도민들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 권고 등의 효과적 대응
-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인권교육 추진체로서 상설적인 인권교육 기획과 프로그램 실시
-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4) [가칭]충남 인권센터의 기능

- 종합적인 인권교육계획 마련과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시행
- 시군 인권센터의 역량강화, 교육·훈련기능을 지원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권고 및 진정
- 인권증진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교육교재 및 교구 개발을 통해 시군을 지원
- 인권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
- 도내 인권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체(가칭) 구성 운영

## 5) (가칭)충남인권센터의 체계(안)



## 6) (가칭)충남인권센터의 운영방식

- (가칭)충남인권센터의 운영방식은 외부 위탁방식과 자체운영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조직운영 및 예산운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권전담부서의 운영 방식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① 외부기관 위탁 방식

- 현재 충남도의 경우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하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인권센터 설립시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도의 조직이 팀 수준으로 조직되어 운영된다면, 인권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권센터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도의 관련부서는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장점
  - 도 조직구성에 있어 단기간에 큰 무리가 없는 팀 범위에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인권센터의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 확보
  -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간적 시설 확보
  - 이해당사자간 신뢰성 확보
- 단점
  - 사업추진의 책임성 한계 존재
  - 위탁비용 등 운영비 증가
  - 도 공무원의 인권전문성 축적 한계
  - 관련 기관 간 사업추진상의 갈등조정 미흡

## ② 도 자체 조직운영 방식

- 충남도의 인권전담조직을 담당관 또는 과 수준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계획과 집행, 추진 등 모든 인권관련 정책을 전담조직에서 추진하는 방식임
- 충남도의 인력과 조직 운영상황을 고려한 대폭적인 조직변화가 동반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운영방식 임
- 장점
  - 인권정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집행 및 실천을 통한 정책의 실행력 확보
  - 자체 사업추진을 통한 운영비의 감소
  - 인권정책에 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
  - 대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정책적 마케팅 효과
- 단점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성 부족
  - 담당관 또는 과 단위 조직운영에 대한 조직구성의 부담
  -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상호교류 시설 부재
  - 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성과를 위한 보완 인력충원 및 사업추진예산 필요



## 제6장

##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 1. 인권 교육의 의의

---

### 2. 타 시도의 인권교육 추진현황

---

### 3.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계획

---



# 1. 인권 교육의 의의

## 가. UN의 인권교육 정의

### 1) 세계인권선언

- 1948년 UN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前文)은 “모든 개인과 사회 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이라고 명시해 교육을 통한 인권신장을 요구함
- 본문 제26조 또한 교육의 권리를 강조하며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음

### 2) 유엔인권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

- 1994년 유엔은 유엔인권교육 10년을 발표하며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의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 3)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의 인권교육 정의(2011년 3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활동”

#### 4)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교육 필요

-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및 자유권, 사회권, 고문방지, 인종차별 철폐, 여성차별 철폐 등 유엔의 7대 규약 위원회에서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함
- 또한 이행사항을 2015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공직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하여 국제적 모범 창출이 필요함

###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계획(NAP)의 인권교육

#### 1) NAP의 인권교육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교육 추진 사안

##### ■ 1기 NAP(2007년-2011년)

- 공직 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권교육 의무화
-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 인권교육 인프라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및 의료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 2기 NAP(2012년-2016년)

- 검찰 경찰 교도관 등 사법집행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지방행정공무원 등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의무화(재권고)
-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 포함 및 관련 임용·승진 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재권고)
-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재권고)



## 2) NAP의 시민사회 인권교육 핵심추진과제

### ■ 1기 NAP(2007-2011)

- 자기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지원 강화
-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
-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2기 NAP(2012-2016)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해당자 본인의 자기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 활성화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체계 구축(재권고)
- 기업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교육 도입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인권교육 확대(재권고)
- 언론인, 의료인,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 인권옹호집단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신규)
-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중매체 활용 활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재권고)

## 다. 충청남도 인권증진조례

###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6조(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2. 타 시도의 인권교육 추진현황

### 가.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현황

#### 1)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현황(2013년)

#####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 대 상 :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등 (연1회 이상, 의무교육)

구 분	합 계	서 울 시		투자·출연기관	시 위탁 복지시설
		본 청	시의회, 사업소 등		
기 관	156	24	49	16	67
교육대상	33,369	4,085	6,163	20,817	2,304

##### ■ 운영방법 : 전문교육기관 선정 위탁운영

- 대상별 추진내용

① 인권행정 리더 특강 : 시장단, 4급이상 간부

－ 운 영 : 반기별 1회, 명사 초청 강의

－ 내 용 :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 개발을 위한 인권 의식 향상 및 공유

② 「서울 인권 아카데미 I.Ⅱ 과정」 운영

- 대 상 :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총 262회)
- 내 용 : 인권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 함양 교육 내용
- 방 법 : 중점·일반 그룹 등으로 분리하여 토론, 체험식 교육 진행

구분		횟수	시간	교육대상
I 과 정	중점그룹	42회	4시간	■ 본청 인권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 (복지, 여성, 주택, 교통 등)
	일반그룹	43회	2시간	■ 본청 일반행정업무 부서
II 과 정	사업소	73회	2시간	■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투자출연기관 및 시 위탁 복지시설
	투자·출연기관 복지시설	62회		

### ③ 인재개발원 : 인권교육과정 개설

- 대 상 : 신규, 승진자 등
- 운 영 : 인권과목 및 특강개설

과정명	교육대상	인권관련 강의주제	교육 기간	교육 시간	교육 인원
7급 신입리더	7급신임자	서울시 인권정책 등	4주	1시간	173명
8.9급 신입리더	8.9급신임자	서울시 인권정책 등	4주	1시간	743명
다문화이해 과정 등 3개과정	5급이하	다문화사회와 인권 등	3일	3시간	100명

### ④ 국가인권위원회 :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

- 대상/기간 : 시 소속 공무원/ '13. 7월 ~ ' 13. 11월  
(월 1회 수강생 모집)
- 내 용 : 행정과 인권, 인권의 이해 등 6개 과목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이 인정되는 무료 교육 과정)
- 신청방법 : 개별 온라인 신청(<http://humanrights.coti.go.kr>)

## 2) 시민대상 인권교육 추진계획(서울시 인권기본계획)

### ■ 홍보방법

-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 보유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 전개
- 시 보유 지하철 영상매체,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문자 및 영상광고

추진

- 서울시 홈페이지, 블로그 서울마니아, 트위터 서울마니아 등 SNS 활용 홍보
- 월간 서울사랑, 서울톡톡,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 ■ 시민인권학교 운영 : 10회

- 대 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운영방법 : 시민청, 청사 내 회의실 등 활용하여 저녁강좌 등으로 개설
- 교육내용 :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지식 습득,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 및 각 영역별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 ■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수시

- 대 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협동조합 등
- 운영방법 :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 강사 파견
- 교육내용 :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영역별·분야별 욕구에 맞는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 ■ 시설대상 인권교육 지원 : 수시

- 대 상 :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다수인 보호시설 및 관련부서 추천 등
- 운영방법 :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 강사 파견
- 교육내용 : 분야별(아동, 장애인, 노인 등) 현장중심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 ■ 기업대상 인권교육 지원 : 수시

- 대 상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중 외국인, 장애인 고용기업 등
- 운영방법 : 중소기업 경영인 및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교육내용 사회적 책임(CSR) 및 인권경영 등 기업의 인권원칙에 대한 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ISO)
- 사회책임 표준규범 ISO 26000 등 세계의 인권경영 흐름에 맞는 교육

## 나.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시행현황

### 1) 광주시의 인권교육 추진근거

####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며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나 시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 2)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2013년 5,844명 참여)

#### ■ 시청사 내 상설강좌 개설, 인권전문 강사 초빙으로 전문교육 실시

##### 2013년 운영 실적

- 시청사 내 상설강좌 「수요인권강좌」 개설(전국 유일) : 총 18회 / 2,982명 이수
  - 상반기 : 기업, 환경, 복지, 역사, 차별, 평화, 도시계획, 노동, 여성과 인권 등 전문적 주제로 총 9강 진행
  - 하반기 : 민주주의, 행정, 노동, 문화, 빈곤, 이주노동자, 평화, 경제, 환경과 인권 등 총 9강 진행

#### ■ 공무원교육원 인권교육 확대

##### 2013년 운영 실적

- 공무원교육원 인권교육 확대 : 총 286명 / 1,215시간 이수
  - 정규과정 : 인권테마 역사 과정 2개반, 인권정책리더과정 2개반 운영
  - 일반과정 : 우리문화바로알기과정 등 일반과정 27개반에 소양강좌(2시간) 편성
  - 신임실무리더과정에 인권과 행정 교과목 편성(3회)
  -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인권과 행정 교과목 편성(2회)
  - 전입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과정에 인권과 행정 교과목 편성(1회)

## ■ 사이버 인권교육 확대

### 2013년 운영 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 확대(전국 최다 참석)  
: 6개 과목 / 1,378명 / 12,739시간 이수

## ■ 공무원 인권교육 조기 안정화를 위한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2013년 운영 실적

- 부서장 BSC 성과평가 공통지표에 반영(전국 유일) : 부서 평균 83.0점 획득
  - 16개 국, 96개 살과소 별 인권교육 이수 실적 관리,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 전년도 78.3점에 비해 4.7점 증가

## ■ 자치구 공직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2013년 운영 실적

- 자치구 공직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동·서·남·북·광산구 공직자 238명 이수

## ■ 명사초청 특강, 인권담당관실 전문교육 등 실시

### 2013년 운영 실적

- 인권특강(빛고을E&C아카데미,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720명 참여),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시 주관 인권행사 참여(136명), 국가인권위원회 각종 인권교육 참여(34명) 등  
: 890명 / 1,591시간 이수
- 사구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2회, 40명),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권교육(1회, 30명) 등 전문분야 인권행정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3회 / 70명 이수
- 인권담당관실 직원 인권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화요인권공부방·현장방문학습 운영  
: 총 4회, 장애아동·다문화 관련 세미나 및 장애체험교육 실시

## 3) 시민 인권교육 성과(8,702명 참여)

## ■ 다양한 시민 참여 강좌 운영

**2013년 운영 실적**

- 인권문화공동체 ‘인권마을만들기’ 시민참여 강좌 운영 : 1,010명 참여
  - 일곡마을 · 운남마을 · 밤실마을 등 3개 마을에서 주민참여 인권강좌 운영
  - 노인부터 아동, 주부와 직장인을 망라하여 마을에서 인권을 확산하고자 마음을 모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
- 지역 오피니언리더 찾아가는 인권특강(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 : 688명 참여
  - 동구 13회, 서구 4회, 광산구 10회 등 총 27회에 걸쳐 통장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참여 인권 특강 개최
- 시민인권강좌 ‘인권, 세상을 말하다’ (광주인권평화재단) : 450명 참여
  - 강의 및 참여형 강좌 4강, 현장견학(부산)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실시
- 우리동네 인권찾기(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 270명 참여
  - 시민인권교실(4개 강좌), 5월 인권강좌, 도서관! 인권을 만나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인권교육 진행
- 기업인권증진 워크숍(대한상공회의소) : 100명 참여
  - 2013.7.11(CSR을 통한 기업가치 증진 특강), 11.27(인권경영 특강,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례발표) 등 2회에 걸쳐 기업 CEO 및 CSR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스포츠 인권교육(광주광역시 체육회) : 1,581명 참여
  - 국제고 태권도부, 광주공고 씨름부 등 학생 및 각급 단위 체육지도자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실시(12회)
- 소방안전교육 시 인권교육 병행(소방서) : 4,603명 참여
  - 소방서 주관 안전체험아카데미 및 소방안전교육 중 인권교육 병행(안전권, 생명권 등)

## ■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13년 운영 실적

- 사회복무요원 인권교육(시, 병무청 등 공동 주관) : 1,000명 참여
  - 2013.5.6(사서구·남구·광산구), 11.12(동구·북구) 2회에 걸쳐 시민과 인권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감수성 함양
- 이주민 인권캠프 및 교육(무지개다문화가족) : 231명 참여
  - 이주노동자 방문 인권교육(50회), 인권문화캠프(2013.8.1~8.3)를 통해 이주민의 인권의식 확산
- 이주노동자 인권교실(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 65명 참여
  - 2013.4월~11월까지 총5개 강좌 운영, 이주노동자 뿐만아니라 관련 활동가들이 참여
- 결혼이민자 여성인권 프로젝트(cosmos외국인센터) : 37명 참여
  - 결혼이민자 가정 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부부교육, 부모교육, 시부모교육 등)
- 여성장애인 인권교육(광주여성장애인연대) : 280명 참여
  - 강의형 인권교육 7강(2013.7.1~7.22), 1박2일 인권캠프로 구성된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 장애인이 스스로의 편견을 뛰어 넘어 권리 의식을 갖는 장 마련
- 장애인·노인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광산구장애인협회) : 390명 참여
  -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지역 장애인, 노인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당사자 인권의식 향상 등) 실시(9회)
- 장애인 가족 인권 따라잡기 ‘인권 어디가’ (장애인부모연대) : 152명 참여
  -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인권캠프 2회(2013.10.19~20 / 2014.2.8~9, 인권퀴즈 풀기 및 부모 인권교육 등 진행), 장애인권상담가 양성과정 11강 운영
- 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인권캠프(광주여성민우회 다솜누리) : 14명 참여
  - 2013.10.3~5(2박3일)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해 배우고 인권감수성 함양을 통해 치유의 힘과 지역사회 복귀 의지 고취
- 새터민 인권대학 ‘공감과 동행’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 265명 참여
  - 신규 전입 새터민이 참여하여 5·18민주화운동 체험학교 ‘공감’ (1일 현장체험, 7회), 인문학 인권학교 ‘동행’ (6개 강좌, 총 8회) 운영



### 3.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계획

#### 가. 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에 대한 총량과 질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음
- 지방정부, 국가기관, 교육계, 시민사회 등의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운영과 인권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음으로 인해 전체적인 파악은 어려운 상태임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활동하는 영남권역(부산사무소), 전라제주권역(광주사무소), 경북권역(대구사무소)의 경우는 지역 인권사무소 단위의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충남은 그마저도 없음
- 공공영역의 경우 충청남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교육은 거의 없거나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음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의 2014년 교육계획에 포함된 인권교육은 ‘인권정책 리더과정’ 단 한 개 과정으로 1년에 30명이 수강 가능한 규모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자체 보수교육 계획에 따라 제각기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학교인권교육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는 타시도와 달리 인권교육 체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 민간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며, 다만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드물게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나. 충청남도의 인권교육 기본 방향

### 1) 충청남도 인권교육의 비전과 과제

#### 비전 : 다양함과 인간존중이 보장받는 충남 인권교육

- 1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광역도의 특성에 맞춰 제 각기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계층별 이해관계의 다양함을 보장하는데 인권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편적 인권이 도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권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다양함과 인간존중의 교육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충청남도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함과 인간존중이 보장받는 충남 인권교육’이라는 인권 교육비전을 제시함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

-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공공과 시민영역을 가리지 않고 충남의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한 과제임
-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 공공과 시민영역,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다양성과 공공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어촌), 대도시와 소도시 등 충청남도가 처한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따른 다양성을 살린 인권교육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풍부한 인권문화 구축과 실천사례 발굴이 필요함

## 2) 3대 핵심 과제별 실천사항

핵심과제	실천사항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을 담당할 (가칭)충남인권센터 설립</li> <li>-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li> <li>-인권교육 강사진 구축</li> <li>-충남 인권교육협의체 구성</li> <li>-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li> </ul>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영역 인권교육 의무화</li> <li>-부문별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li> <li>-학교인권교육 지원</li> <li>-도내 사군간 균형 있는 인권교육 실현</li> </ul>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에 대한 인권프로그램 지원</li> <li>-인권교육 실천사례 공유</li> <li>-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인권프로그램 개최</li> <li>-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li> </ul>

## 다. 세부사업 및 시책

## ①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각 영역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신규사업)
  -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UN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교육안을 수용하되, 충남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고려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인권증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향후 인권교육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약해 인권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각 영역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인권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은 교육영역, 사회복지영역, 공공영역, 시민사회영역 등의 영역별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은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각 영역의 독자성에 맞게 운영함

• 정책방향(신규사업)

- 실제 인권현장의 경험이 반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강사진을 배출 시켜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가칭)충남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내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 주체들이 모여서 인권교육을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영역 간, 지역 간 균형 있는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남도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남교육청, (가칭)충남인권센터, 각 시군별 인권교육 담당자, 시민사회의 인권교육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

여 각 영역의 인권현황과 인권 교육사례 등을 공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②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 ■ 공공영역 인권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16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2013년 9월 현재 충청남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직무의 특성과 직급, 근무여건을 파악한 다양한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충청남도의 모든 공무원이 인권마인드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위원회	별도정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현원
합 계	3,902	1,165	74	2,314	311	38	94

- 사업내용(신규사업)
  -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본청과 각 시·군별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강좌를 개설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권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모든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권교육 외에 인권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복지, 여성, 주택, 교통 등)는 교육 기준을 달리해서 보다 심화된 교육기준을 적용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인권감수성, 시민 권리 이해 등의 기본과 개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인권교육을 마련함
- 사업내용(신규사업)
  - 시·군별 시민대학과 주민자치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기관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아카데미 형식의 대 시민 특별 인권프로그램도 시행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농·어민 등의 시민사회 영역별 인권교육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시민 사회 영역별로 장, 단기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설치함
  - 소수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증진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으로서의 시민적 긍지를 갖도록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0		15	15	15	15
국비						
도비	60		15	15	15	15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 학교인권교육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부터 초, 중등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이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청남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인권교육의 의무화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		10	10	10	10
국비						
도비	40		1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 공무원·주민 인권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의 지역화, 도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부족

- 사용내용(신규사업)

- 「공무원 인권학교」: 총5회(집합교육 400명 / 직장교육 300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 총4회(4개 권역 400명)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0	20	20	20	20	20
국비						
도비	100	20	20	20	20	2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③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 ■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분야별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교육은 현재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실천문화를 확산한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충청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남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사회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0		15	15	15	15
국비						
도비	60		15	15	15	15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문화확산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등 살아 있는 인권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신규사업)
  - 충청남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과 충남출신의 고전 위인 등을 인권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관련 유적을 탐방하는 충남인권투어를 실시
  - 과거의 반성과 인권지향적인 미래를 위한 충남형 인권프로그램으로 충청남도에 한국 전쟁 당시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현장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시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			10	10	10
국비						
도비	30			10	10	10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제7장

## 인권 협력체계 구축

### 1. 인권 협력체계 구축

---



## 1. 인권 협력체계 구축

### 가. 인권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 ■ 인권 협력체계 구축의 의미

- 도민의 인권 감수성 제고
  - － 인권 협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인권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자발적 교류와 인권증진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 아래로부터의 인권 운동의 등장

- 18세기 이래로 인권담론은 헌법으로서의 보장과 국제인권법의 제정이라는 제도화를 통해서 인권보장의 방향성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의 확장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권요구가 등장하지만, 법이라는 제도로서 답을 수 없는 인권의 영역이 등장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인권요구가 등장
  - － 정부의 약화된 자원동원능력을 보완
  - －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적 다원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 증가
- 인권공동체 운동의 핵심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이 기초 요소이고, 생활 속의 인권보장이 그 핵심적 내용임

#### ■ 충청남도의 인권정책 수행의 인프라 부족

- 인권정책의 수립과 실현에 대한 행정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상태임
- 이러한 자원부족은 한 순간의 계기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 인프라와 자원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
- 인권정책 수행을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증가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자원의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을 기존의 자원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효과적 방안임

#### ■ 충청남도의 인권전문가 집단의 부족과 시민사회의 취약성

- 인권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 되지만, 이에 대해 실천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지역의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적 실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과 이를 확산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충남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부족과 시민사회의 취약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실임
- 이러한 취약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 자원 활용은 필수적 요소임

###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 권고안

#### ■ 제1기 인권 NAP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권고안

- 공익적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과 직접지원(민관협력 공공사업의 확대 등) 확대
-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시민사회 단체의 인적 자원 양성 지원
-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활성화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 ■ 제1기 인권 NAP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평가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협력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위원회나 지원 사업 이외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채택된 수단은 협소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나 제도적인 개선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 참여원칙을 지침으로 수립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을 인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필수적 전제조건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그러나 세제와 우편료 감면 등 간접지원, 지역단위 NGO센터 건립과 인적 자원 양성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시민단체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의 경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공동 협력 차원으로 확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음
-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종 시민참여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가 도입되고 다양한 민관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광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가 공동으로 NGO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제2기 인권 NAP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권고안

- 목표 : 민관 협력패러다임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 국가 정책방향 :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및 역할 분담 강화
- 핵심 추진과제
  -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우편료 감면,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과 함께 인적 자원 양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재권고)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마련(재권고)

-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민간단체 보조금사업) 방식을 단순 지원에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도 활성화하여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공영역의 효율성 제고 도모(재권고)
- 정부 정책 결정(예산 편성 등)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활성화 필요(재권고)

## ■ 제2기 인권 NAP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권고의 배경

- 시민사회의 성장과 다원화 경향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영역이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향후 일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발성에 기초하고, 자원봉사나 기부문화의 비활성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다. 기본 방향

### ■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와 (가칭)충남인권센터의 연계망 구축

-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는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가칭)충남인권센터를 지원하고, (가칭)충남인권센터는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권 증진 정책을 펼치는 인권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 충남의 인권담당 부서와 (가칭)충남인권센터의 협력하여 관-관, 민-관, 민-민 네트워크의 허브 구축
  - 인권담당 부서와 (가칭)충남인권센터의 협력적 허브를 통해 중앙정부, 다른 시도, 충남의 15개 시군, 중앙 및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자원을 공유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그림 2〉 인권 협력체계 구축 체계도



##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 충남도와 중앙정부(국가인권위원회 및 대전사무소)와 정보, 교육 내용, 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정책의 추진자원을 확보
  -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도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중앙에 제안하는 협력적 환류체계를 구축
- 다른 시도와의 네트워크
  - 지역차원의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서울, 광주, 강원 등 시도와 연계를 도모
  - 중앙의 정책과는 다른 지역 차원의 정책 노하우, 정보, 자원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 네트워크를 형성
- 15개 시군과의 네트워크
  - 충남도의 인권전담 부서는 도의 인권정책을 시군의 협력을 통해 구현하고,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15개 시군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시군의 좋은 정책을 도의 다른 시군에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
  - (가칭)충남인권센터를 중심으로 15개 시군의 인권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

하고, 인권센터를 설립하지 못하는 시군에 지원사업을 전개함

-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 다양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 요소임
  - 중앙 NGO는 일정한 분야에서 인권의 정책을 선도하는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와 다른 시도의 NGO 지역의 생활 속에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NGO들과의 상호 소통은 반드시 필요함
  - NGO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인권증진 정책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

## 라. 세부사업 및 시책

### ■ 도청(인권센터)-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개 시군과의 정책적 협력은 필수적 요소
  - 15개 시군은 도와 도를 통한 중앙정부와의 연계구조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전개
- 사업개요(신규사업)
  - 시군의 인권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15개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인권사업 지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및 협의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됨
  - 다원화된 시기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권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인권정책의 필수요소임
  - 다양한 NGO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의견수렴 채널 및 정책적 반영 기회가 부재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가칭)충남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인권기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 인권협의회를 구성
  -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민-관, 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5	5	5	5	5	5
국비						
도비	25	5	5	5	5	5
시군비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 인권단체 지원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인권단체는 도민과 밀착하여 다양한 인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산 및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 도에서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인권증진 노력을 고무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도내의 인권단체와 활동 내용을 조사하여, 필수사업을 지원함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0		30	30	30	30
국비						
도비	120		30	30	30	30
시군비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지방자치단체 인권협의회 참여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 광주 등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의 증가
  - 지역의 인권문제를 자치단체간에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사업개요(신규사업)
  - 현재 서울이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9개 시도 인권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함
  - 협의를 통해 인권정책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8장

### 충청남도 인권사각지대

1.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 인권

---

3. 비정규직 산재

---



## 1.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sup>5)</sup>

### 가. 배경 및 문제점

#### 1) 송전선로 현황

##### ■ 원거리 전력 수급에 의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지역

-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는 가공 송전선로가 13,252km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초고압인 765KV급 송전선로는 모두가 가공송전선임
- 765kV의 초고압송전선로는 강원도가 165km로 가장 길며, 다음으로 경기(133km), 충남(115km), 경북(10km)의 순
- 충남에는 2013년 9월말 기준 총 1,338km의 송전선로와 4,141개의 송전탑이 위치하는데 송전선로는 154kV 이상의 초고압선으로 대부분이 가공선로이며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함
  - 서산시(168km), 당진시(163km), 아산시(158km) 지역에 가장 많은 송전선로가 지역 내를 통과함

#### 2)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 ■ 피해의 개요

- 우리나라의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선로망,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서 그 피해 범위가 넓음
-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i) 질병유발 등 건강권 침해, ii)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 속하는 선하지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 iii) 지역발전의 기회 박탈 등이 있음

##### ■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

- 전자파 인체 위해성은, 인체가 극저주파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인체 내

5) 이인희·오혜정,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전략연구 2013-14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에 유도전류가 생성되고,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온 등 각종 이온의 방출로 전류가 비선형적 파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호르몬 분비의 변화 및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04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로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833mG로 규정하고 있음
- 전자파가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 및 한전 측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은 고압선에서 인체 및 동식물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남 여수 봉두마을 송전탑 건립반대 대책위는 1970년대 초부터 초고압 송전선로 3개와 송전탑 25기가 들어선 이후, 20명이 암으로 숨지고 백혈병 발생과 가축·양봉 폐사 등이 잇따랐다고 주장하였음
  - 당진 송전탑 피해자 가족모임도 초고압 송전선로 500여개가 들어선 이후 암 환자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였으며, 서산 팔봉송전선로 반대대책위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주변 100m 이내에 살던 주민 18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8명이 투병 중으로, 더 이상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시행해 줄 것을 주장하였음
- 국제암연구위원회(IARC)가 극저주파 자계를 암분류 등급 2B로 분류한 이후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노출 기준치를 낮추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대책(Protective Measure)안을 발표하였는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별로 전자계 저감을 위한 적합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 (전인수·김한나 2006)
- 1979년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해 고압선로와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많은 역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노벨의학상 심사기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페이칭 마리아 연구원 등의 1992년 스웨덴의 고압 송전선과 주변 지역 소아암 발병률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1~2.9mG에 노출된 아동군의 백혈병 유발률은 1.5배, 3mG에 노출된 군은 3.8배였으며, 고압선로 50m 이내 주택의 경우 아동백혈병 유

발률은 2.9배 높았다(김기범 2013).

- 2001년 Schuez의 연구는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발병률에 대한 상관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입증하였는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3-4 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될 경우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힘
- 박재영(박재영·엄정섭 2005)의 연구에 따르면, 154kV 송전선 주변에서는 최소한 30m 이상 떨어져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345kV 송전선 주변에서는 최소한 116m 이상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지가하락,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경제적 피해

- 부동산의 가치 요인은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다른 재화보다도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 고압 가공 송전선에 의한 전자파는 가치 형성의 외부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송전 설비 입지에 의해 기피지역으로 인식됨으로써 지가가 하락하고, 장래 개발가능성과 용도변경 침해로 인한 기대이익이 상실됨
-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토지의 담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농지연금 설정에 곤란을 겪음. 또한 건축허가 시 구분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름
- 공압 가공 송전선이 인근의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경규 2013)에 의하면 고압 가공 송전선 인근토지의 감가율은 전압이 높을수록 크며, 동일한 전압에서는 송전선과의 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감가율의 차이가 있으며, 주거용이 농지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짐
- 손철(2006)은 154kV 송전선 인근의 공동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송전선으로부터 거리가 1% 멀어질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4.5% 증가함을 밝힘
- 한정찬(2011)은 송전 철탑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밝힘
- 한국토지공법학회(2011)는 18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선하지를 중심으로 잔여지까지의 지가하락을 조사한 결과, 765kV 초고압선 주변 지역의 지가 감가율이 선하지 기준 평균 37.15%로 가장 높았으며 345kV(29.76%), 154kV (26.3%)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지가 감가율이 높은 지역은 765kV 초고압선의 선하지 중 택지로 47.1%에 이르며 다음 높은 지역 역시 765kV 선하지로 농지의 경우 39%의 지가감가율을 보였음

## ■ 기타 피해

- 송전선로에 의한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와 등 생활환경의 피해와 전자파에 의한 건강침해 우려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함
  - 마을 한복판으로 고압송전로가 어지럽게 지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붕 위로 고압선로가 지나는 곳도 있음
  - 주민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선로에서 불꽃이 번쩍이고 굉음이 난다고 호소하며, 첩탑이 너무 커서 비가 오면 근처를 걸어가거나 일할 수가 없고, 위험하고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당진군 교로리에 설치한 첩탑이 전파에 영향을 줘 마을 무선방송을 설비하는 데 6개월이 걸렸고, 텔레비전 수신도 어려웠던 사례도 있음
- 기형 가축의 분만, 산란율 감소, 농작물 수확량 감소, 송이버섯 등의 수확감소로 대표되는 가축 및 농작물의 성장장애에 의한 피해 발생
- 송전탑의 낙뢰 사고, 붕괴 사고 등의 발생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송전탑 건설 과정 및 사후에 발생하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의 발생
  - 실제 낙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으며, 이로 인한 컴퓨터 고장,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첩탑붕괴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진입 도로의 통행제한, 진입 도로의 붕괴로 인한 토사 유출 또는 침수 피해를 겪고 있음

## 나. 관련제도 검토

### 1) 전원개발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 ■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비민주성

- 송전선로의 건설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체계와 설립과정의 비민주성임
- 송전선로의 설치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법 제6조 1항에서 송변전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전기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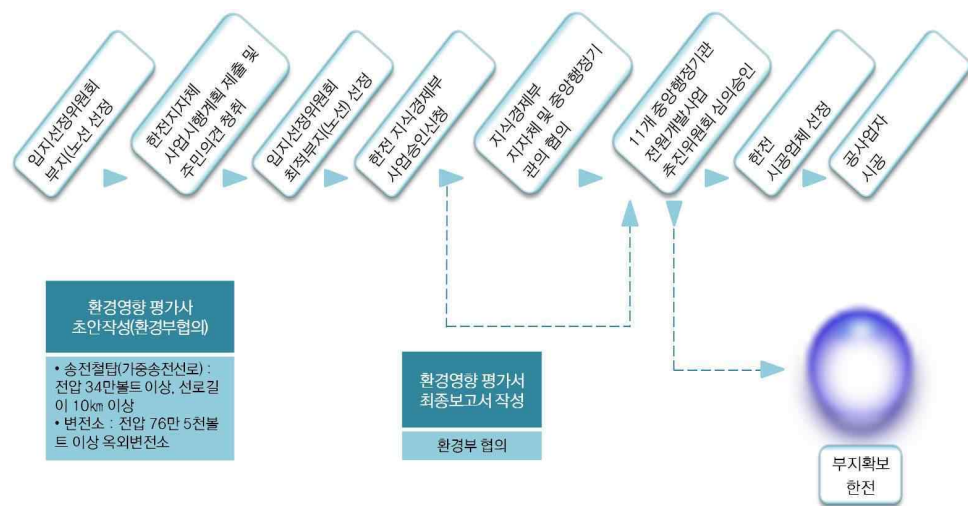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7개의 관련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인가, 면허, 결정, 지정, 승인, 해제, 협의, 처분 등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에 문제의 뿌리가 있음

#### ※ 전원개발 촉진법[시행 2014.7.15.]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개정 2010.4.15., 2010.5.31., 2011.4.14., 2011.7.25.,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 송전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해 평가하면서 전자파는 평가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현재의 제도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나 전자파의 리스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려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송전설비 건설을 위한 승인 절차는 지식경제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결여하고 있고, 또한 심의기구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문제가 있음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부처와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음



〈그림 3〉 송전설비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 2013.3.23]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 ■ 갈등을 유발하였던 비합리적 피해보상제도

- 송전설비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은 사업자가 수행하며, 보상은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으로 나뉜
  - 직접보상은 선하지에 속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며, 간접보상은 선하지에 인접하는 토지 등으로서 특별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여 현금 보상이 지급되는 부분이며, 잔여지는 간접보상의 범주에 속함
  - 지원은 선하지 인근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토지 등으로서 송변전시설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여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 토지 등에 대하여, 지역협력기금 등을 통해 주변지역의 개발, 조성하는 등의 사업임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에 따른 강제 수용의 경우, 철탑부지는 감정가로 매수하지만, 선하지(전선 아래에 있는 땅)의 경우 사용권을 감정가의 일부분을 보상하여 구분지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44〉 송전설비 보상

구분	사업의 성격	손실보상 유형(원칙)		권익확보방법(원칙)
변전설비 건설사업	면적(面)	매수		소유권
송전설비 건설사업	선적(線)	지지물용지	매수	소유권
		선하지	사용	구분지상권

-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면적을 선하지의 피해 보상 구역으로 설정하였음
  - 주민의 토지 면적 및 길이에 관계없이, 또한 송전선로의 전압이 765kV이건 365kV이건 상관없이 3미터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금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었음
  - 이러한 비합리적인 보상제도 탓에 밀양군 단장면 동화전 마을 양모 할아버지 밤나무 밭의 경우 송전선로로 인해 항공 방제를 할 수 없어 땅을 버리게 됐는데도 보상금은 고작 154만원에 불과하였음(장여진 2013)

### ※ 전기사업법[시행 2014.11.21.]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 한전 측은 송전선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을 하면서도 자체 내규인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통해 임의적으로 간접 보상 제도를 운영하였음
  - 이 보상제도의 특이한 점은 직접 피해가 없는 송전탑 부지 멀리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농로, 공용창고,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하는데 이 지원 산출기준도 추상적이고 주민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갈등이 증폭되었음
- 이러한 과거의 비합리적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하지의 넓이를 확대하고 매수 등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말 국회에서 통과 되어 2014.7.29.에 시행되었음

##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154kV를 제외하고 345kV 이상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송전선로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임
- 재산적 보상지역의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임

-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임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6호, 2014.1.2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4.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송전선로 인근지역의 보상은 신규사업에만 적용되며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청구는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송주법 제4조). 2014년 7월 말에 송주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보상에 대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대한 보상은 송주법 제5조에서 주택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의 가액 등은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도록 하였음
- 재산적 보상 지역의 경우는 동법 제4조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고 보상금액은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주택매수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垞)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매수의 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은 행정구역별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수행됨(송주법 제7조).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재원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어려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음(송주법 제10조)

〈표 45〉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종류	세부 지원내용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TV수신료 및 유선료, 인터넷, 상하수도, 난방비 등 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주택개량사업,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 문화 및 행사체험/관광, 교통수단제공사업, 지역도서관, 놀이방/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등
소득증대사업	에너지농장사업, 산림부산물 퇴비화 사업, 특화 농작물·임산물 재배/가공 및 판매(시설), 시설채소 재배/가공 및 판매(시설), 가축 사육 및 판매(시설), 특화 수산물 재배/수산 양식 및 판매(시설) 사업, 영농규모화 사업(예:농지매매,임대차 자금지원) 등
육영사업	평생교육지원, 농·어촌학교 운영,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교육기자재,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주민건강검진 및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가부채지원사업, 송변전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략)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연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금은 송전선로의 회선당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지원금의 기초행정지역별 배분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전체 세대수에 대한 해당 행정지역별 주변지역세대수의 비례로 배분됨(송주법 시행령 제25조)

– 송전선로 지원금 = 전전년도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표 46〉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345kV	765kV
9,100(원/c-m)	36,000(원/c-m)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29.]**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액(이하 "사업자별 지원금"이라 한다)과 사업자별 지원금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이하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자별 지원금과 지역별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지원대상은 동법 제2조에서 주변지역으로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만을 포함시켰으며, 송전 선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 4) 환경분쟁조정법

-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는 『환경분쟁조정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규정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소송에서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환경분쟁 조정법[시행 2014.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4.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기본방향

- 현재의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장기적으로는 송전선로와 관련한 주민과 전력사업자 및 정부와의 갈등의 해

결을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책, 원거리·대용량 전력수급을 기본으로 한 현재의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의 법·제도, 사업자의 운영 시책을 개선
  -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이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에 반영되도록 함
- 송전소 관련 장기적인 연구조사
  - 지중화 등 송전망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충 및 신기술 적용, 전자파의 강도제한, 정기적인 전자파 검사, 송전선로 주변지역 및 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함
  - 또한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입지 선정에 대한 사업자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중·단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책이 필요함
  - ① 송전선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실태 분석
    - 건강피해 실태
    -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 등 생활환경 피해
    - 지가하락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피해
  - ②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민주화
  - ③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의 합리적 보상

## 라. 세부사업

### 1) 송전선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실태 분석

#### ■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 전자파가 833mG를 넘지 않는 시설물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암연구위원회 및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리스크가 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는 것은 그 피해가 현실화 된 이후에나 가능하며, 인체나 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가 이미 발생된 이후에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 및 한전의 입장과 영향을 준다는 주민 및 NGO등의 입장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함

### ■ 생활환경 및 농축산업 피해 조사

- 고압송전로가 마을을 지나는 경우도 있으며, 송전선로에서 소음과 불꽃이 발생하며, TV 수신이 어려우며, 기형가축의 분만, 산란율감소, 송이버섯 등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피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바,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 농축산업 피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

###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조사

- 초고압 가공 송전선이 인근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거래의 실종 및 재산권행사 제한을 체감하고 있음
- 최근 제정된 송주법의 경우 신규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택 매수 청구지역과 재산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없고,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은 없음
-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조사하여 이를 사업자 및 국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 2)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민주화

### ■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

- 전기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7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인허가 등의 절차를 뚫은 것으로 의제되는 전원개발 촉진법의 비민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송전선로 승인절차에 지역사회 의견 반영

- 송전설비 건설을 위한 승인 절차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입지선정위원회의 송전노선 선정과정에 관련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현재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지자체의 도지사 및 시군수가 참여하도록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함

### 3)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보상의 합리화

#### ■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 비합리적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하지의 넓이를 확대하고 매수 등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었지만 154kV 송전선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154kV 송전선로 역시 초고압송전선로로 구분되며,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지역에 가장 많이 지나가는 송전선로는 154kV이라는 점에서 154kV 송전선로가 보상에 포함되도록 송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 그나마 송주법에서 보상하는 345kV 이상의 송전선로 피해보상은 신규 송전선로에만 국한되어 있음
- 기존 송전선로는 신규 송전선로보다 훨씬 긴 연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역시 매우 많다는 점에서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가 제정되어야 함
- 기존 송전선로의 선하지에 속한 토지의 지가하락 및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새로이 제정된 송주법은 2014년 7월 말부터 시행됨. 송주법에서 보상하는 주택매수청구지역과 재산 보상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2. 태안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 가. 실태 및 문제점

#### 1) 사고 개요

##### ■ 사고 발생

- 2007년 12월 7일 07시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중국)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현대오일뱅크 용선)와 충돌

〈그림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지점



-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는 9차례에 걸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반복적으로 충돌하면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고, 이로 인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kl)이 해상에 유출

- 유류오염사고에서 사고 이름은 기름을 유출한 유조선의 이름을 이용하여 명명하는 것이 관례로, 이 사고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로 명명

## ■ 사고 발생 경위

-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07년 11월 16일 아랍에미레이트를 출항하여 2007년 12월 6일 대산항 부근에 도착하여 정박
-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은 인천에서 거제로 운항 중, 2007년 12월 7일 03시 발효된 풍랑주의보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천항 회항을 시도
- 악천후에서의 선박조종 어려움으로 회항을 포기하고 예정된 항로로 복귀를 시도하던 중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인해 크레인 부선이 표류하여 정박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 당시 기상상황으로 선박운항의 시계 확보의 어려움
  - 강한 바람과 파고로 항로 유지를 위한 조정의 어려움
  - 기상 악화에 대한 조기 대처 실패로 예방 능력 상실
  -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리한 항해로 사고 초래

## 2) 피해 상황

### ■ 유류오염사고 오염 상황

-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직후 추정 유출량은 10,500kl로 발표되었으나, 정밀 검량에서 유출유는 12,547kl(10,900톤)로 최종 확인
- 사고당일 유출된 기름은 약 14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으로 확산
- 사고 발생 4일째에는 이원면 내리 만대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km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
  -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는 약 70km에 달함
  -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에서 소원면 파도리 해안까지는 두꺼운 기름층 형성
- 사고 발생 31일째인 2008년 1월 6일에는 사고해역으로부터 약 370km 떨어진 제주도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유입
- 유류가 유출된 지역, 특히 태안지역은 해안선의 30% 이상이 오염되고 넓은 해역에 걸쳐 오염이 확산

### ■ 유류오염사고 지역 주민의 피해

- 유류오염사고 지역, 특히 태안군은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주민 생활을 곤란에 처함
  - 수산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된 양식 수산물의 채취 및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업제한 조치를 시달
  - 태안의 농수산물을 반입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
-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에 관광객이 전년대비 88%가 감소
- 수산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들이 생계수단을 상실
- 피해 규모는 <표 47>와 제한채권신고 현황으로 짐작 가능

〈표 47〉 유류피해 제한채권신고 현황 (2009.05.08)

업 종 별		신고건수	신고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25,511	1,717,017	
수 산	소 계	14,025	532,459	
	서산수협	6,879	257,627	
	안면수협	750	27,285	
	남면수협	4,328	96,765	
	전피해민	1,389	133,575	
	원이대책	659	3,867	
	해산종묘	20	13,340	
비 수 산	소 계	10,943	1,151,594	
	군대책위	7,859	1,092,298	
	태안읍위	2,262	21,880	
	전피해민	822	37,416	
기 타	소 계	543	32,964	
	개인신고자	541	*	금액 미확정
	후순위채권	1	21,547	
	주민방제인건비	1	11,417	

### 3) 방제활동

#### ■ 전국적 역량이 총동원된 방제 활동

- 방제활동에는 인력이 200만 명 이상 되었고, 이 중 순수자원봉사자가



123만 명 이상 참가

- 방제작업에 헬기 346대, 함정 및 어선이 약 2만 척 가까이 동원
- 방제활동의 결과 폐유수거량이 4,175kl, 폐기물량이 약 32,000톤 이름
- 전국민의 협조로 진행된 방제 활동의 결과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방제작업이 마무리되고,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 접수는 2008년 6월 28일자로 종료

#### ■ 환경복원촉진작업

- 2008년 10월 이후,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환경복원촉진작업을 실시
- 2009년 해빙기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은 관계기관(보험사 포함)과 합동 대처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환경복원촉진작업을 추진

### 나. 유류오염사고 극복을 위한 사업과 특별법 검토

#### 1) 피해주민 지원

##### ■ 생계안정자금 지원

- 2007년 12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해양수산부는 12월 16일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추진
- 충청남도에서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충청남도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긴급생계지원 보조금을 교부
  - 보상금이 아니라 유류오염사고 후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의 성격
  - 재원은 해양수산부 예비비 300억원, 충청남도 예비비 100억원, 국민성금 158억원으로 구성
- 태안군의 경우 지원기준을 마련 2번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 태안군 1차 생계안정자금 지원 내역



〈표 48〉 읍면 배정내역 (2008.01.27)

지역	재배정액(단위 : 천원)	비고
태안읍	4,370,638	국민성금
안면읍	4,672,988	국민성금
고남면	1,545,274	국민성금
남면	2,256,993	국민성금
근흥면	5,212,017	국민성금 + 생계지원비
소원면	6,536,100	국민성금 + 생계지원비
원북면	4,359,661	국민성금 + 생계지원비
이원면	2,199,329	국민성금 + 생계지원비

- 2008년 2월 1일 2단계 생계안정자금이 21,021백만 원으로 국비에서 배정, 2008년 4월 13일 태안군에 8,000백만 원의 국민성금이 지원
  - 1단계 지원에서의 주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2단계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준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읍면장회의, 군의회 공청회, 생계안정자금심의위원회 등이 개최
  - 어업활동 중단으로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어가 및 어업관련 종사 영세어가 및 숙박·음식 등 관광 관련 사업 종사가구로 소득원이 급감하였으나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수립

#### ■ 주민방제인건비 지원

- 사고로 인해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상실한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것
- 방제인건비는 하루 남자는 70,000원, 여자는 60,000원으로 임금 책정
- 어선을 이용한 방제작업에서 3톤 이하는 1일간 445,000원, 3톤 이상은 1일간 545,000원으로, 승선 방제인원은 선장 포함 최대 3인까지 인정, 하루 남자 70,000원 여자 60,000원을 지급
- 13개 방제 협회에 고용된 형태로 방제 작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음
-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한 낮은 사정율과 지급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100%지급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불만과 피해의식이 확산되기도 함

## ■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유류대 지원

- 저소득층 생계 지원
  - 태안군에서는 2008년 4월까지 유류피해로 생활고가 심각한 기초 생활수급자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쌀과 구호약품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대당 정부양곡 40kg을 지원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어촌계별로 의약품 1세트(구성: 두통약 1,000정, 소화제 1,000포, 파스 1,000매)를 제공
  - 생계지원을 위한 재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접수한 성금 1억 2천만원 중 31,561천원으로 마련
- 유류대 및 장비지원
  - 출어제한과 고유가로 어업포기 사태에 직면하여 유류대 지원 등으로 침체된 어업 경영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추진
  - 지원대상은 어선어업(낙시어업, 양식장 관리선 포함), 나잠어업, 종묘생산어업으로 허가(신고)된 자로 정함
  - 이와 함께 수협은 태안군으로부터 통보받은 나잠어업 어구지원대상자 중 어업경비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잠수복(코팅납벨트, 수경, 오리발 1세트/1벌)을 일괄 구입하여 지원

## ■ 태안환경보건센터 설립

-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주민 건강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전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 4 및 「환경보건법」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를 근거로 하여 2009년 9월 1일 태안환경보건센터 설립
  - 10월 1일에 산업의학전문가와 사무국장등 5명의 연구 인력이 채용되어 운영을 시작
  - 국고보조금으로 총 3,799백만원의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비를 확보
  - 급성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유류오염사고 후에 주민의 건강영향 자각증상 호소율과 스트레스 증가 결과 도출
  - 태안 방제지역 주민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수행

- 피해지역주민의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유류피해주민의 건강검진 실시

## ■ 특별 공공근로사업 실시

- 생활안정 특별 공공근로사업 실시
  - 어업종사자들이 장기간 조업 중단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련업계 휴업상태로 지역경제의 침체분위기가 지속되고 주민의 생계곤란이 가중되어 사고 직후부터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고용 알선을 지속적 추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특별공공근로사업에 지원
  - 생계안정 특별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공공근로사업과 환경정비 사업으로 구성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유류오염사고지역의 저소득 영세농어가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 피해지역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관리, 폐사 어패류 수거, 해안선 및 수산시장 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
  - 노동부의 비영리 법인·단체 위탁 시행방침에 의거하여 태안군의 경우,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에서 신청하여 결정
  - 노동부 총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1인당 인건비는 월 788,000원 지급
- 희망근로 프로젝트 진행
  - 2009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일자리 제공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태안에서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
  - 일일 참여 인건비, 근로조건은 일반공공근로와 동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30%를 상품권을 발행하여 총 25만장의 상품권을 참여자들에게 지급
  - 유류피해와 직·간접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시행

## ■ 굴 양식장 철거 및 판매지원

- 유류오염사고로 태안지역의 굴 양식장의 오염 피해가 심각하여 오염된 굴 양식장 철거해 2차 오염을 예방을 위해 실시

- 2007년 12월 25일 해양수산부는 태안 굴 양식어장의 오염피해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12월 28일에 의항2구, 의항3구, 소근리, 신두리를 우심 굴 양식장 철거 결정
- 철거 후에 폐기할 수산물(굴)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동사업에 피해어업인을 참여시켜 어업인 생계지원을 도모
- 사업 수행 결과 당초 계획량 대비 102% 높은 15,794톤의 오염양식 시설 및 패각을 수거하였고 완전철거지역의 어장 바닥을 경운
- 굴양식 시설물을 완전 철거한 어장의 면적이 172ha, 시설 면적이 43.71ha에 달함
-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굴판매 촉진 지원

## 2) 특별법 제정

### ■ 배경

-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해안지역의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수립이 필요
- 피해액 산출, 보상기준 등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내용이 모호하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 전 국민적 관심과 봉사참여를 통해 재난을 해결하려는 단합된 국민정서가 발생하였고 정부가 이를 거버넌스적 문제해결능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

### ■ 추진과정

- 법안건의
  - 2007년 12월 14일 충청남도에서 먼저 정부와 정당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
  - 태안군에서는 정부 및 국회 유력인사들이 태안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 제정을 건의
- 법안 작성

- 2008년 1월 28일 태안군은 특별법 제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당의 발의법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법안의 대비표를 작성
- 국회의원을 상대로 특별법 법안에 대한 건의 및 면담을 수차례 실시
- 태안군에서 특별법에 반영을 요구한 주요 골자는 군민들의 피해 구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
- 정책간담회 실시
  - 2008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에서 인수위 제2분과 위원들과 태안군수, 태안군 출신 도의원 및 군의원, 해양수산부 관계 국장, 인수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
  - 유류오염사고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역할 강화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
- 특별법 국회 상정
  - 태안군에서는 세부법안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안의 기본적 틀을 확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면담하여 특별법 상정 건의
  - 법안소위 심사 및 공청회 개최하여 특별법안 통과
- 발의 통과 및 법안 의결, 제정안 통과
  - 2008년 2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법안이 의결
  - 2008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특별법은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5조 및 제6조),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신고에 관한 사항(법 제7조),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 보상에 관한 사항(법 제8조 및 제9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및 특별해양환경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10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표 49〉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조	주요 내용
제5조~ 제6조	○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피해지역 지정, 손해보전의 지원, 해양환경복원계획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
제7조	○ 피해주민단체 구성
제8조	○ 손실보전의 지원 -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 선지급(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 기준으로 산정)
제9조	○ 국제기금의 보상 초과시 정부에서 지원
제10조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무자료, 무신고 등 맨손어업자 등 지원의 근거 마련)
제12조	○ 지역경제 활성화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 다. 기본 방향

### ■ 중앙/지방정부-관계기관-주민들의 효율적 연계 대응

-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 정부-지자체-주민들의 대응 양상에 따라 다양한 보상 체계로 보상이 가능함
- 엑슨발데즈호 사례에서 보면 사고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정부, 연방정부, 공공자문위원회(이해당사자 주민), 과학위원회(전문가)가 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을 기초로 사고의 복원 및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
- 유류피해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이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간접적 피해까지도 그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광범위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음
  - 협력적 노력에 의해 보다 많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의 개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공동의 노력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갈등 극복

- 사고 수습과정에서 심화된 주민 상호간의 갈등 봉합
  - 1, 2단계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과정 등에서 지역 간 차등지급, 주민등록지 위주의 지원 등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원 금액의 편차 등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 주민 간 감정 대립 초래
  -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욕심 보다는 제도의 미비가 더 큰 원인
  - 따라서 이후의 유류오염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사소송과 삼성출연금 활용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다소 지체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사업 진행이 필요
-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 유류유출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고 수습의 종합적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즉흥적이 대처를 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공공부문의 신뢰 하락
  - 공공부문의 신뢰 하락은 연쇄적으로 공공부문에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문가 집단을 불신 초래
  - 공공부문과 전문가의 불신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개별적 갈등으로 초래하고, 이는 주민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 초래
  - 이렇게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의 참여 보장으로 공동체 회복
  -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태계의 회복,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삼성중공업 마을발전기금의 활용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 산적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주민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이 필요
  - 결정을 위한 협의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적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 라. 사업 및 시책

### ■ 「피해주민 민사소송」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대하여 국제기금과 피해민 간 이의의 소송 제기로 재판 진행되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전망

- 해외 사례의 경우도 배상의 최종 판결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사건의 경우도 장기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피해주민 상담, 지원창구 지속 운영( '13년까지 676건)  
(청구인원 및 금액: 21,098건, 2,463억원, 사정재판 결정액 : 3,444억원(청구금액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사무소 운영 지원
  - 피해주민 신속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과 중앙정부-기초단체-피해 주민의 협력 강화
- 담당 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유류오염피해를 입었으나 관련근거의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주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필요
  - 특별법(법률 제9739) 개정안 11조에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
  -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개요
  - 기존의 3차례의 용역을 추진하였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용역 추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용역 결과에 의거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추진
  - 피해주민의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등 피해민 누락 방지 전력
- 담당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 「피해주민 건강관리사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피해주민의 급성 건강 영향 조사 결과 급성 건강영향 자각 증상 호소률과 스트레스 증가



-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에 의하면 피해지역 주민 일부에서 호르몬 대사 변화
- 방제작업자에서 유전물질손상지표의 이상 소견과 신경계통의 기능 저하가 관찰됨
- 초등학생의 천식 유병률이 공단지역 보다 높게 나타남
-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건강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어 주민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사업개요
  - 유류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실시를 통해 환경성 질환 사전 예방
  - 1,000명 고노출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발암성 유류오염물 노출연구 진행
  - 어린이, 청소년 천식환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조사결과 DB구축 및 추적조사로 피해주민 건강관리 강화
- 담당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활용 사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피해지역 주민의 노력의 삼성중공업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발전기금 3,600억원 출연에 대한 기본합의 도출
  - 기존의 사용 금액 500억, 자체진행비 2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을 2014년 1월 출연
  - 삼성중공업 세제혜택, 수탁의 문제, 피해민단체 안정적 배분·운영 등으로 현재 출연금의 11개 시군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 본합의 도출되지 못함
  - 출연기금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본 합의 도출 필요
- 사업개요
  - 삼성중공업 출연금 세제 문제, 수탁 및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피해민 단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11개 시군의 배분을 위해 기준 마련 지원
- 담당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 3. 비정규직 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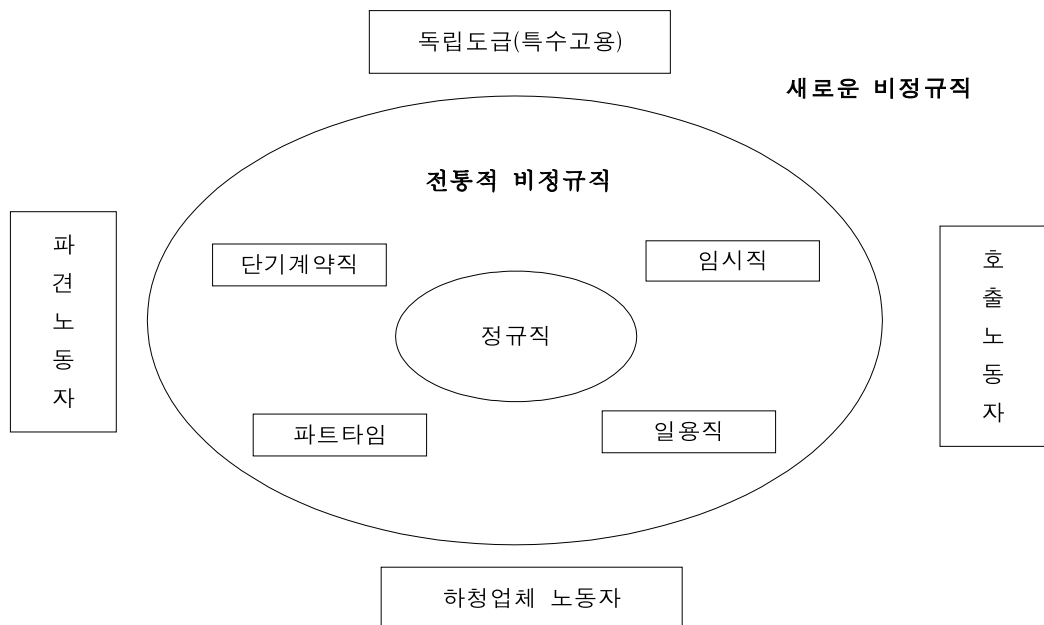
#### 가. 배경 및 문제점

#####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노동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부상

- 비정규노동자는 2012년 8월 현재 1,773여만 명의 임금 노동자 중 노동계의 추산으로 850여만 명으로 약 47.5%, 정부 추산으로는 591만 여명으로 약 33.3%에 달하고 있음

##### ■ 비정규 노동 유형의 다양화

- 시간제(part-time)나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전통적인 비정규직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파견(agency), 용역(contract), 호출(on-call), 독립도급(independent self-employed), 가내근로 등 과거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 노동이 점차 확산
-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들은 고용주가 둘 이상이거나 자영자의 속성이 혼재되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사용자-피고용자)의 관행들을 흔들고 있음



〈그림 5〉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노동

- 새로이 등장하는 고용형태의 특징은 과거 사용자와 피고용주 간의 일대일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근로계약 관계

## ■ 사내하청 노동의 증가와 산재 집중

- 사내하청의 의미
  - 원래 하청(subcontracting)의 기본적인 의미는 발주기업(원청)과 수주기업(하청) 사이에 성립되는 주문생산거래를 지칭함
  - 오늘날 특히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청 노동과 함께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 임
  -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청’은 생산의 외부적인 분할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하청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양태를 지칭함
  -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청은 기업 간의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기업 간 및 기업 내 ‘고용관계’와 중첩되어져(over-determined)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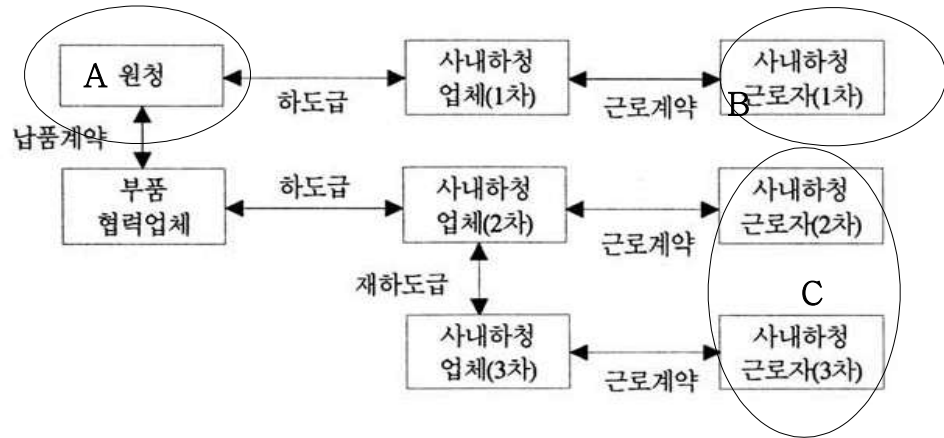
〈그림 6〉 사내하청 노동의 두 가지 특성



- ‘사내하청’의 이와 같은 모순적인 두 가지 속성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짐
  - 노동자의 고용안정의 책임과 인건비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함
  - 동시에 고용에 따른 여러 책임은 ‘하도급계약’을 매개로 사내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전가
- 사내하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청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사내하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사내하청(비정규직 근로자)은 두 가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이게 됨
  -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체불,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

- 열악한 작업환경으로도 내몰리게 되어 산재 위험이 높아짐

〈그림 7〉 사내하청의 확장된 형태



-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의 산재 증가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 산업재해 즉,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1년 내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등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함

## ■ 산재 위험에 노출된 충남의 비정규직 노동자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의 북부권에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에도 대규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의 산재에 상시적으로 노출
  -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공장에서 2013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8명 중 7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 (연합뉴스 2014. 1. 27 “안전대책 무색, 또 사망사고... 현대제철 왜 이러나” )
  - 산재의 위험은 주로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남
- 충남의 비정규직의 규모나 산재 발생 빈도와 정도는 공식적 자료의 부재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인권적 접근이 필요함

## 나. 비정규직 안전에 관한 기존 정책

### ■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문제의 관심의 시작

-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과 제조업은 물론이고 여타의 산업에서도 사내하청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 과거 정부 주도의 안전보건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노동 및 시민단체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
-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기 시작

### ■ 비정규직법의 시행

-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통칭하는 일련의 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보건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환기하여 관련 입법으로 이어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7.25.)을 개정
  - 비정규직의 안전에 대해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법률개정의 최초의 사례
-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 등을 필두로 여수, 울산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건설플랜트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이 계기
-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대상이 확대
  - 2011년 7월 2일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하청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 서비스업에서도 원청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호응

- 2013년 6월에는 산안법 제29조제6항을 개정하여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라고 정함으로써 도급사업주가 하도급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을 방관할 수 없도록 개정

### ■ 비정규직 안전관련 법제도 운영의 의미

- 요약하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음
- 초기에는 주로 정부주도에서 점차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구조로 변화
-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양상이 산업안전보건 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다. 기본 방향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현실 파악

〈표 50〉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중대 산업재해

	사고발생	재해현황	소속	경위
1	2012. 9. 5.	1명 사망	플랜트 하청	구조물이 재해자 덮침
2	2012. 10. 9.	1명 사망	외주 공사업체	감전추락사
3	2012. 11. 2.	1명 사망	외주 공사업체	발판 붕괴 해상으로 추락사
4	2012. 11. 8.	1명 사망	하청업체	추락사
5	2013. 3. 14.	1명 사망	플랜트 하청	공기단축으로 인한 과로사
6	2013. 5. 10.	5명 사망	하청업체	아르곤가스 질식사
7	2013. 10. 29.	1명 사망	하청업체	추락사
8	2013. 11. 26.	1명 사망 8명 부상	하청업체	전기로 가스유출로 인한 질식
9	2013. 12. 2.	1명 사망	하청업체	추락사
10	2013. 12. 6.	1명 사망	하청업체	보수작업 후 사망
11	2014. 1. 23	1명 사망	하청업체	냉각수 추락 후 사망

- <표 49>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2년 이후 중대 산업재해의 당사자들은 하청이나 외주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임
- 특히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은 대중들에게 ‘산업안전’ 문제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
- 이러한 중대한 산재 이외에 다양한 안전관련 사고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임

### ■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공조

- 초기 정부주도의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개정과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행
- 기업의 은폐, 비협조 등으로 비정규직과 산재 등은 공식적 자료가 부실한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의 존재로 공식적 처리의 어려움 존재
- 시민사회와 협조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라. 시행사업

### ■ 비정규직의 안전 실태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의 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공론화 되지 못함
  - 피해 당사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안전 피해를 공식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비정규직과 산재의 경우 공식적 자료의 부족으로 실태 파악의 어려움
- 사업개요
  - 현재 공식적 실태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노동자협의 협조

- 를 얻어 우회적인 실태조사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산재를 분석하여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 상황의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인권증진 정책 마련
- 담당부서
  - (가칭)충남인권센터



## 제9장

### 집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

2. 투자계획

---

3. 향후 추진과제

---



## 1. 사업계획

---

### 가. 총 사업

#### ■ 총 84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64개)
  - － 아동·청소년(7개), 장애인(16개), 노인(5개), 여성(4개), 이주민(26개),  
농업인(5개), 어업인(1개)
- 인권제도 정비(7개)
-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9개)
- 인권 협력체계 구축(4개)

## 2. 투자계획

### 가. 연차별 투자계획

#### ■ 총 투자예산 : 169,387백만원

- 아동·청소년(3.5%), 장애인(67.8%), 노인(0.7%), 여성(0.3%), 이주민(18.7%), 농업인(7.8%), 어업인(0.0%), 인권제도 정비(0.9%),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0.2%), 인권 협력체계 구축(0.1%)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금액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69,387 (100.0%)	31,213	32,725	34,016	35,433	36,000
아동·청소년	5,926 (3.5%)	1,144	1,116	1,216	1,189	1,261
장애인	114,878 (67.8%)	21,226	22,203	23,134	23,985	24,330
노인	1,140 (0.7%)	220	230	230	230	230
여성	545 (0.3%)	91	101	121	111	121
이주민	31,628 (18.7%)	6,222	6,220	6,250	6,463	6,473
농업인	13,190 (7.8%)	2,260	2,370	2,540	2,960	3,060
어업인	40 (0.0%)	—	10	10	10	10
인권제도 정비	1,525 (0.9%)	25	360	390	360	390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370 (0.2%)	20	80	90	90	90
인권 협력체계 구축	145 (0.1%)	5	35	35	35	35

## 나. 재원별 투자계획

## ■ 총 투자예산 : 169,387백만원

- 국비 : 110,180백만원(65.4%)
- 도비 : 36,843백만원(21.9%)
- 시·군비 : 21,364백만원(12.7%)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금액	재원별 투자계획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69,387 (100.0%)	110,180 (65.4%)	36,843 (21.9%)	21,364 (12.7%)
아동·청소년	5,926	710	2,774	2,442
장애인	114,878	86,792	23,977	4,109
노인	1,140	—	1,140	—
여성	545	203	342	—
이주민	31,628	16,805	4,338	10,485
농업인	13,190	5,670	3,192	4,328
어업인	40	—	40	—
인권제도 정비	1,525	—	1,525	—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370	—	370	—
인권 협력체계 구축	145	—	145	—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아 동 청 소 년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실시 (자치행정과, 충남인권센터)		20			20			40			40			40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자치행정과, 충남인권센터)		50			50			50			50			50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자치행정과)		50						50						50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200			200			200			200			200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보건행정과)	134	130	460	138	134	474	142	146	488	146	150	503	150	154	517
	자살예방전문강사단(보건행정과)		50			50			50			50			50	
	사례관리협의회(보건행정과)		50			50			50			50			50	
장 애 인	홈페이지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보급(정보화지원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50			5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장애인복지과)											51	119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장애인복지과)		17			20			20						20	
	주차단속 권한 통합 (장애인복지과, 중앙정부건의사항, 도시군 협의사항)	비 예 산 사 업														
	장애인 콜택시 확충(도로교통과)	280	80	200	300	90	210	300	90	210	300	90	210	340	100	240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도로교통과)	280		28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지역 버스터미널 음성서비스 실시 및 도우미 배치(시군, 병무청)						100			100			100			100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충남인권센터)								20						20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장애인복지과)	15713	3122		16027	3484		16348	3846		16675	4172		17009	4215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강화(장애인복지과)	160	472	168	160	472	168	160	672	168	160	672	168	160	672	168
	자립생활교육 실시(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역할 확대(장애인복지과, 시군)		54			72			90			108			126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시군)						20			20			20			20
	충남 장애인예술제 개최 (장애인복지과)								10			10			10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노 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맨제도 강화(저출산고령화대책과)	비 예 산 사 업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사업(저출산고령화대책과)		210			210			210			210			210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 링사업(저출산고령화대책과)		10			10			10			10			10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제공(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남 인권센터)	비 예 산 사 업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여 성	양성평등인권교육 실시 (충남인권센터)					20			30			30			30	
	성별분리통계구축·생산 (여성가족정책관실)		10						10						10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여성가족정책관실)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24.5	
이 주 민	1577-5432(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강화(여성정책 정책관실, 중앙정부건의사업)	비 예 산 사 업														
	인권 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정책관실)		20			20			20			25			25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중앙정부건의사업)	비 예 산 사 업														
	다문화 가족 어울림 사업 (여성가족정책관실)		224	894		224	894		226	902		226	902		228	910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여성가족정책관실)	2470	318	741	2470	318	741	2470	318	741	2540	327	762	2540	327	762
	결혼이민여성 인터넷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120	15	15	120	15	15	120	15	15	160	20	20	160	20	2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여성가족정책관실)		4	16		4	16		4	16		5	20		5	20
	결혼이민자 활용 외국어 교육 (여성가족정책관실)		81	189		81	189		81	189		86	200		86	200
	결혼이민자 학위취득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관간 업무협약 사항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385	49	115	385	49	115	385	49	115	405	52	122	405	52	122
	이주여성 쉼터(여성가족정책관실)	99	21	21	99	21	21	99	21	21	104	22	22	104	22	22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천안외국인인력센터 지원 (일자리정책과)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일자리정책과)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서천외국인지원센터 지원 (일자리정책과)					20			20			20			20	
	홍성이주민센터 지원 (일자리정책과)								20			20			20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 (여성가족정책관실)	비 예 산 사 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자치행정과)	233			233			233			233			23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행정과)		10			10			10			10			10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 프로 그램 운영(자치행정과)		30			30			30			30			30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자치행정과)		15			15			30			30			30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자치행정과)		3.5			3.5			3.5			3.5			3.5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대학생 과의 1:1 멘토링 지원(자치행정과)		3.5			3.5			3.5			3.5			3.5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 캠프 (자치행정과)		10			10			10			10			1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농 업 인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농업정책과)		280			280			350			350			350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문화예술과)	1050	150	300	1050	150	300	1050	150	300	1260	180	360	1260	180	360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도로교통과, 시군)		30	270		60	340		90	410		120	480		150	550
	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환경관리과, 시군)		54	126		54	126		54	126		60	140		60	140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어 업 인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인 권 제 도 정 비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인권실태조사 실시(자치행정과)					10			10			10			10	
	인권 문화행사 운영(자치행정과)					20			20			20			20	
	인권보고서 발간(자치행정과)								30						30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자치행정과)					300			300			300			300	
	시민참여배심원제 도입(자치행정과)					5			5			5			5	
	인권지킴이단 운영(자치행정과)		25			25			25			25			25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부 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인 권 교 육  및  문 화 조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충남인권센터)	비 예 산 사 업														
	(가칭)충남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공공영역 인권교육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충남인권센터)					15			15			15			15	
	학교인권교육 지원 (충남인권센터)					10			10			10			10	
	공무원·주민 인권교육 (자치행정과)		20			20			20			20			20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자치행정과)					15			15			15			15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충남인권센터)								10			10			10	
인 권 협 력 체 계  구 축	도청(인권센터)-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및 협의 (충남인권센터)		5			5			5			5			5	
	인권단체 지원사업(자치행정과)					30			30			30			30	
	지방자치단체 인권협의회 참여 (자치행정과)	비 예 산 사 업														

(단위 : 백만원)

부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실시	20	20	40	40	40	160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50	50	50	50	50	250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50	-	50	-	50	150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200	200	200	200	200	1000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	724	746	776	799	821	3866
	자살예방전문강사단	50	50	50	50	50	250
	사례관리협의회	50	50	50	50	50	250
장애인	홈페이지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보급	-	-	-	50	50	10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	-	170	-	170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17	20	20	-	20	77
	주차단속 권한 통합	비 예 산 사 업					
	장애인 콜택시 확충	560	600	600	600	680	3040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560	660	660	660	660	3200
	지역 버스터미널 음성서비스 실시 및 도우미 배치	-	100	100	100	100	400
	전문수화통역사양성	-	-	20	-	20	40
	장애인인권강사양성	-	10	10	10	10	40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18835	19511	20194	20847	21224	100611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강화	800	800	1000	1000	1000	4600
	자립생활교육 실시	-	10	10	10	10	4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역할 확대	54	72	90	108	126	450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	20	20	20	20	80
	충남 장애인예술제 개최	-	-	10	10	10	30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400	400	400	400	400	2000
노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맨제도 강화	비 예 산 사 업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10	10	10	10	40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사업	210	210	210	210	210	1050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10	10	10	10	10	50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제공	비 예 산 사 업					
여성	양성평등인권교육 실시	-	20	30	30	30	110
	성별분리통계구축·생산	10	-	10	-	10	30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32	32	32	32	32	160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49	49	49	49	49	245
이주민	1577-5432(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강화	비 예 산 사 업					
	인권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20	20	20	25	25	110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비 예 산 사 업					
	다문화가족어울림사업	1118	1118	1128	1128	1138	5630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529	3529	3529	3629	3629	17845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150	150	150	200	200	85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20	20	20	25	25	110
	결혼이민자 활용 외국어 교육	270	270	270	286	286	1382

부문	세부사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결혼이민자학위취득지원	비 예 산 사 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549	549	549	579	579	2805
	이주여성 쉼터	141	141	141	148	148	719
	천안외국인인력센터 지원	40	40	40	40	40	200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80	80	80	80	80	400
	서천외국인지원센터 지원	-	20	20	20	20	80
	홍성이주민센터 지원	-	-	20	20	20	60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	10	10	10	10	40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	비 예 산 사 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233	233	233	233	233	116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10	10	10	10	10	50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비 예 산 사 업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30	30	30	30	30	150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15	-	-	-	-	15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	3.5	-	-	-	-	3.5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지원	3.5	-	-	-	-	3.5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 캠프	10	-	-	-	-	1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비 예 산 사 업					
농업인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280	280	350	350	350	1610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1500	1500	1500	1800	1800	8100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300	400	500	600	700	2500
	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	180	180	180	200	200	940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	10	10	10	10	40
어업인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	-	10	10	10	10	40
인권제도 정비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비 예 산 사 업					
	인권실태조사 실시	-	10	10	10	10	40
	인권 문화행사 운영	-	20	20	20	20	80
	인권보고서 발간	-	-	30	-	30	60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	-	300	300	300	300	1200
	시민참여배심원제 도입	-	5	5	5	5	20
	인권지킴이단 운영	25	25	25	25	25	125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	10	10	10	10	40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비 예 산 사 업					
	(가칭)충남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비 예 산 사 업					
	공공영역 인권교육	-	10	10	10	10	40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	15	15	15	15	60
	학교인권교육 지원	-	10	10	10	10	40
	공무원·주민 인권교육	20	20	20	20	20	100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	15	15	15	15	60
인권 협력체계 구축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	-	10	10	10	30
	도청(인권센터)-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	비 예 산 사 업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및 협의	5	5	5	5	5	25
	인권단체 지원사업	-	30	30	30	30	120
	지방자치단체 인권협의회 참여	비 예 산 사 업					

부 문	세부부문	기 본 방 향	세 부 과 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64개)	아동·청소년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li> <li>·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반 조성</li> <li>·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촉진과 생존발달 보장</li> <li>·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li> <li>· 법적 분쟁 및 착취상황의 해소</li> </ul>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
			자살예방전문강사단
			사례관리협의회
	장애인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반 구축</li> <li>· 실질적 기본권 보장</li> <li>· 탈시설 패러다임 전환</li> </ul>	홈페이지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보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주차단속 권한 통합
			장애인 콜택시 확충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지역 버스터미널 음성서비스 실시 및 도우미 배치
			전문수화통역사양성
			장애인인권강사양성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자립생활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 강화
			자립생활교육 실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역할 확대
	노인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li> <li>·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li> </ul>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충남 장애인예술제 개최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맨제도 강화
	여성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li> <li>·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li> <li>· 여성소수자정책 강화</li> <li>·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li> </ul>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제공
	이주민 (2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li> <li>· 기본권 보장</li> </ul>	양성평등인권교육 실시
			성별분리통계구축·생산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1577-5432(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운영 강화
			인권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어울림사업
			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결혼이민자 활용 외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학위취득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이주여성 쉼터

부 문	세부분문	기 본 방 향	세 부 과 제
			천안외국인인력센터 지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서천외국인지원센터 지원
			홍성이주민센터 지원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지원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역량강화 캠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농업인 (5개)	· 사회적 기반 구축 · 실질적 기본권 보장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어업인 (1개)	· 사회적 기반 구축 · 실질적 기본권 보장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
인권제도 정비 (7개)		· 전담부서 신설 · 인권센터 설치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 문화행사 운영
			인권보고서 발간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
			시민참여배심원제 도입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9개)		·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가칭)충남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공공영역 인권교육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학교인권교육 지원
			공무원·주민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인권 협력체계 구축 (4개)		·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와 (가칭)인권센터의 연계망 구축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도청(인권센터)-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축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및 협의
			인권단체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인권협의회 참여

### 3.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과제

#### 가. 시사점

##### 시사점

- 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청사진 제시
  - 행정에 인권의 개념을 도입해 인권적 측면에서 기존사업과 보완확대 필요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답게 시군을 견인할 인권감수성 향상방안 제시
  - 도농복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인권취약계층 등 인권정책방안 마련
- 처음 실시되는 인권기본계획으로 모든 항목을 포함시키기 어려움
  - 정책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에 두고 사업 발굴(총84개 사업 중 65개 사업/77%)
  - 2020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일반도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항목 도입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등)
- 기본계획 세부사업의 실행주체가 인권 총괄부서와 실행부서로 분리
  - 세부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행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요구
- 인권취약계층을 세분화한 분야별 인권실태조사 요구
  - 예) 서울시 '미취학아동 인권실태조사'

#### 나. 향후 추진과제

##### 1)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도청 인권전담부서 설치 방안 마련
- (가칭) 충남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시민단체 지원 방안 마련
- 도청 관련부서와의 인권사업 협력, 조정시스템 구상
- 유관 기관과의 인권 협력·조정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마련



## 2) 도내·외 인권 거버넌스 구축

- 도청 인권전담부서와 (가칭)충남인권센터와의 협력관계 구상
- 충남도와 타 시·도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
- 국외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구상

## 3) 시군의 인권행정 확산 및 지원

- 시군 인권조례 제정 유도
- 시군 인권센터 설치 지원

## 4)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역할 정립

- 향후 인권계획 수립
  - － 대상별 향후 구체적 교육계획 수립
  -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계획 수립
- 충남인권센터 중심 인권거버넌스체계 구축
  - － 충남인권센터와 시군 인권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참여 연구진

---

### □ 연구 책임

성태규 선임연구원

장애인 분야

### □ 참여 연구진

이인희 연구위원

송전탑 분야

고승희 책임연구원

아동·청소년 분야

이수철 책임연구원

이주민 분야

김용현 책임연구원

노인 분야

박경철 책임연구원

농업인 분야

김종화 책임연구원

어업인 분야

신혜지 연구원

여성 분야

### □ 외부 연구진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재활연구소 박사

장애인 분야

이진숙 나누미 지역아동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분야

유요열 홍성 이주민센터 대표

이주민 분야

김원천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 분야

정형영 홍동면 금평리 김애마을 이장

농업인 분야

김필문 태안군 수산발전협의회장

어업인 분야

정이은숙 천안 KYC 대표

여성 분야

박종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

비정규직 산재 분야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인권교육 분야

